

# 주요국 예산안 2023 (1)

2023. 12.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오 종 현 조세정책연구실장  
배 진 수 재정제도분석팀장  
송 경 호 정부투자분석센터장

### 공동연구원

구윤모 (미 국)  
김은숙 (영 국)  
김정은 (스웨덴)  
박지혜 (독 일)  
이정은 (일 본)  
이정인 (프랑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PART 1 각국 예산안 분석

I. 프랑스	3
1. 경제 및 재정 전망	5
가. 경제 전망	5
나. 재정 전망	6
2. 예산 기초	12
3. 예산안 주요 내용(PLF 2023)	13
가. 세입	13
나. 세출	13
4. 주요 재정정책	16
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	16
나. 생태학적 전환	16
다. 완전고용 지원 및 세부담 완화 조치 지속	18
라. 사회적 포용 강화	19
마. 교육 강화 및 청년 지원	20
바. 프랑스 영토 보호	21
5. 중기재정법안 주요 내용	22
6. 사회보장예산법안 주요 내용	23
II. 독일	27
1. 경제 및 재정 전망	30

가. 경제 전망 .....	30
나. 재정 전망 .....	33
2. 예산 기초 .....	35
3. 예산안 주요 내용 .....	37
가. 재정수입 .....	37
나. 재정지출 .....	40
4. 주요 재정정책 .....	45
가. 재정건전화 계획 .....	45
나. 에너지 위기 대응 .....	51
다. 특별기금 .....	56
라. 주요 투자 정책 .....	58
<b>III. 일 본 .....</b>	<b>60</b>
1. 경제 및 재정 전망 .....	64
가. 경제 전망 .....	64
나. 재정 전망 .....	67
2. 예산 기초 .....	69
3. 예산안 내용 .....	72
가. 세입 .....	72
나. 세출 .....	75
4. 주요 재정정책 .....	79
가. 경제성장 .....	79
나. 외교·방위 및 사회보장 .....	80
다. 지역 발전 등 .....	82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84
<b>IV. 미 국 .....</b>	<b>88</b>

1. 경제 및 재정 전망 .....	92
가. 경제 전망 .....	92
나. 재정 전망 .....	94
2. 예산 목표 .....	97
3. 예산안 내용 .....	99
가. 세입 .....	99
나. 세출 .....	101
4. 주요 재정정책 .....	110
가. 가계비용 절감 .....	110
나.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	111
다.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	112
라. 기후변화 대응 .....	112
마. 국제 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113
바. 재정건전화 .....	114
<b>V. 영국 .....</b>	<b>116</b>
1. 경제 및 재정 전망 .....	119
가. 경제 전망 .....	119
나. 재정 전망 .....	121
2.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	124
가. 재정 기조 .....	124
나. 정책 방향 .....	125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	126
가. 수입 전망 .....	126
나. 지출 전망 .....	128

4. 주요 정책 결정 .....	131
가. 물가상승률 반감(Halvng inflation) .....	136
나. 경제성장(Growing the economy) .....	136
다. 국가채무 감축(Getting debt falling) .....	142
<b>VI. 스웨덴 .....</b>	<b>144</b>
1. 경제 및 재정 전망 .....	146
가. 경제 전망 .....	146
나. 재정 전망 .....	147
2. 예산기조 .....	150
3. 예산안 주요 내용 .....	151
가. 세입 .....	152
나. 세출 .....	154
4. 주요 재정정책 .....	157
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160
나. 국방 및 치안 강화 .....	160
다. 가계·기업·복지제도 지원 방안 .....	161

# 표 목차

## PART

### 1

##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경제성장률 전망 .....	5
〈표 I-2〉 거시경제 전망 .....	6
〈표 I-3〉 2023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	7
〈표 I-4〉 2023년 예산법안 .....	9
〈표 I-5〉 2023 미션별 세출 내역 .....	15
〈표 I-6〉 2023-2027 중기재정법안 주요 재정지표 .....	22
〈표 I-7〉 코로나19 관련 지출 .....	24
〈표 I-8〉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	25
〈표 II-1〉 2022년 봄 경제 전망 주요 수치 .....	31
〈표 II-2〉 2023 예산안 및 2024-2026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	34
〈표 II-3〉 2021-2026 독일 중기재정계획 주요 지표 전망 .....	34
〈표 II-4〉 2022-2026년 연방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	38
〈표 II-5〉 2023 예산안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	43
〈표 II-6〉 2023 예산안 부처별 재정지출 .....	44
〈표 II-7〉 2021-2026년 독일 경제·재정 전망 .....	47
〈표 II-8〉 안정화위원회 26차 회의 재정 전망(2022.12.) .....	48
〈표 II-9〉 2023 재정계획안 2021-2026 주요 지표 .....	50
〈표 II-10〉 2022-2026년 에너지·기후기금 계획 .....	57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	65
〈표 III-2〉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	68

〈표 III-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73
〈표 III-4〉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74
〈표 III-5〉 2023회계연도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77
〈표 IV-1〉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92
〈표 IV-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93
〈표 IV-3〉 미국 재정 전망	95
〈표 IV-4〉 미국 분야별 주요 세입 전망	100
〈표 IV-5〉 미국 기능별 지출(Outlays) 규모 추이 및 전망	103
〈표 IV-6〉 항목(Category)별 지출(outlays) 전망	105
〈표 IV-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 권한 내역	109
〈표 V-1〉 주요 경제 전망	120
〈표 V-2〉 주요 재정총량 전망	123
〈표 V-3〉 공공부문 경상수입 전망	127
〈표 V-4〉 공공부문 총 관리지출 전망	129
〈표 V-5〉 2023 봄 예산안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131
〈표 V-6〉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	143
〈표 V-7〉 복지지출 한도 및 성과	143
〈표 VI-1〉 주요 지표 전망치	147
〈표 VI-2〉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총수입	148
〈표 VI-3〉 2023년 스웨덴 예산안(2023 budget bill) - 재정수지	149
〈표 VI-4〉 GDP 대비 세입 비중	154
〈표 VI-5〉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분야별 지출 한도	156
〈표 VI-6〉 2023년 예산안 개정사항	157

# 그림 목차

## PART

### 1

##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프랑스 재정수지 추이 .....	8
[그림 I-2] 국가지출범위 전망 .....	14
[그림 I-3]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 추이 .....	26
[그림 II-1] 2023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	37
[그림 II-2]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	43
[그림 II-3] 2022 안정화프로그램 실질 GDP 추이 및 전망 .....	46
[그림 II-4] 안정화위원회 26차 회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2022.12.) .....	49
[그림 III-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	75
[그림 III-2] 일반회계 주요경비 추이 .....	78
[그림 III-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	78
[그림 IV-1] 2024회계연도 예산정책으로 인한 채무 전망 .....	96
[그림 IV-2] 미국 주요 세입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99
[그림 IV-3] 미국 총지출 대비 주요 기능별 지출 비중 추이 .....	102
[그림 V-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	121
[그림 V-2]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전망 .....	122
[그림 V-3] 재정 기초 .....	124
[그림 V-4] 2023-24회계연도 유형별 공공부문 경상수입 .....	126
[그림 V-5] 2023-24회계연도 기능별 공공부문 총 관리지출 .....	128
[그림 VI-1] 총세입 증가율 및 규모 .....	152



제 1 부

# 각국 예산안 분석



# I. 프랑스

□ FY2023: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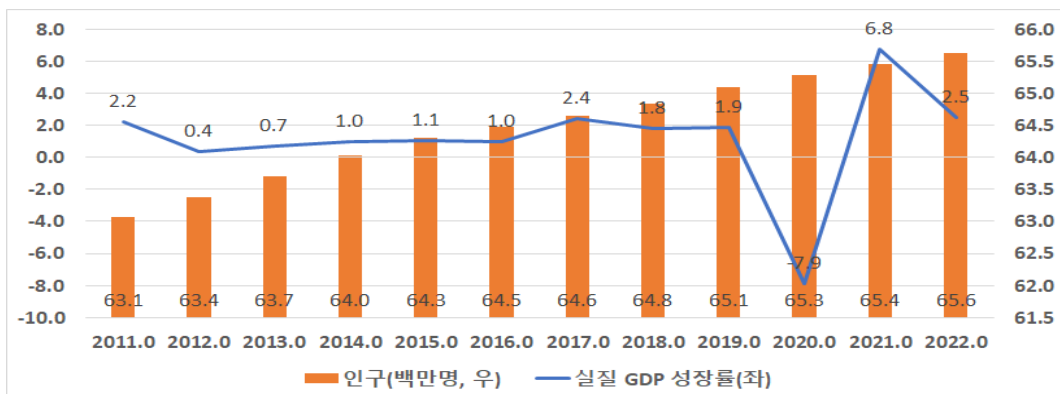
- PLF 2023(projé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9.26.
- Dossier de presse-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3, 2022.9.26.
- LFSS 2023(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2.9.26.
- PLPFP 2023-2027(projé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2027), 2022.9.26.

□ 환율: 1유로 = 약 1,355.97원(2022년도 1월~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 규모: 2022년 추정치 경상 GDP 2조7,780억달러(IMF)

□ 인구: 약 6,563만명(2022년 기준, IMF)

□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검색일자: 2022.12.19.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긴축적 통화정책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할 전망
- (재정 전망) 2023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 지속으로 GDP 대비 5.0%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예산 기초

- 가계 구매력 유지를 위해 2023년 에너지 가격 인상 상한을 제한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플레이션과 연동
- 국가 주권 기능을 강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

□ 주요 재정정책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 완전고용 지원 및 세부담 완화 조치 지속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2. 02. 02.	2021년 예산 집행 결과 발표
2022. 07. 08.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안 발표
2022. 07. 29.	2022-2027년 안정화프로그램 발표
2022. 09. 26.	2023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2023-2027 중기재정법안 발표
2022. 11. 02.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 발표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

- 프랑스 경제는 2021년 빠른 경제 회복 이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회복이 다소 둔화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 이후, 2021년 프랑스 경제는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부문의 긴장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해 2.7%의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
- 2023년 긴축적 통화정책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성장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할 전망
  - 정부의 구매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치가 가계의 소비 회복을 뒷받침
  - 2023년 물가상승률은 4.2%로 전망되며,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조치로 2022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경제 전망의 하방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I-1〉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기관	2022	2023	2023/2019 <sup>1)</sup>	전망 시점
2023년 예산법안	2.7	1.0	2.0	2022년 9월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	2.5	1.4	2.2	2022년 7월
프랑스 중앙은행	2.6	0.5 <sup>2)</sup>	1.4	2022년 9월
프랑스 통계청	2.6	-	-	2022년 9월
IMF	2.3	1.0	1.6	2022년 7월
EU	2.4	1.4	2.1	2022년 7월
OECD	2.4	1.4	2.1	2022년 6월

주: 1)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2023년의 GDP 비교

2) 중앙 시나리오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4

〈표 I-2〉 거시경제 전망

구분	2021	2022(전망)	2023(전망)
실질 GDP(십억유로)	2,501	2,642	2,763
실질 GDP 성장률	6.8	2.7	1.0
가계소비지출	5.2	2.5	1.4
건설 부문 제외 투자	11.4	1.4	0.9
수출	8.6	6.8	2.7
수입	7.8	6.6	2.5
소비자물가상승률	1.6	5.4	4.3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Chiffres clés p.2

## 나. 재정 전망

- 2020년 프랑스 GDP 대비 재정적자는 9.0%로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1년 6.5%, 2022년 5.0%로 다소 감소
  - 2021년 빠른 경제 회복으로 재정적자가 다소 낮아졌으나 긴급 지원 조치의 지속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022년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조치로 재정수지는 다소 안정화됨
- 2023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 지속으로 GDP 대비 5.0%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예산법안은 구매력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전환 지원에 초점을 맞춤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sup>1)</sup>의 점진적 폐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생태학적 전환 및 혁신을 위한 지원을 통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
    - 긴급 지원 조치 폐지는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

1) 사업체가 보유·이용하는 시설 및 토지에 부과하는 사업자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대상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0년 60.7%에 도달한 이후 2021년 58.4%로 다소 감소했고, 2022년 57.6%, 2023년 56.6%로 계속 하락할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
  - 2022~2023년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증가에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개선
    - 2022년 구매력 지원 조치 증가에도 코로나19 관련 비상지원 조치의 종료를 반영해 재정지출은 1.1% 감소하고, 2023년에는 감소율이 1.5%로 더 커질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26년 이후 하락 전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20년 115.0%로 급격히 상승한 이후, 경제 회복을 반영해 2023년 111.2%로 하락
  - 공공채무는 2024~2025년 다소 상승한 이후 2026년부터 하락할 전망

〈표 I-3〉 2023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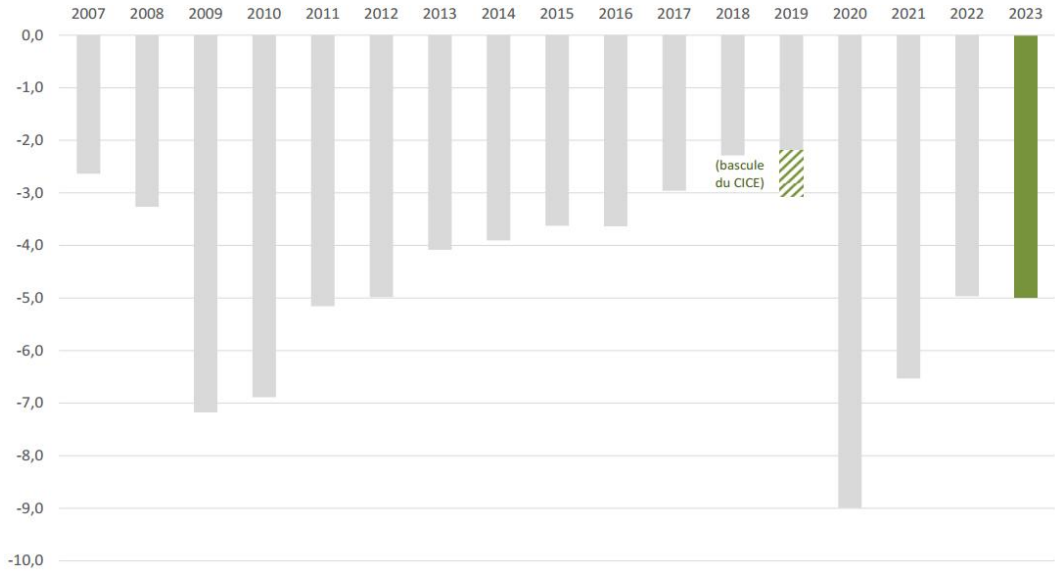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3.1	-9.0	-6.5	-5.0	-5.0	-4.5	-4.0	-3.4	-2.9
재정지출 증가율(Croissance volume de la dépense publique, %)	1.9	6.7	2.6	-1.1	-1.5	-0.6	0.3	0.2	0.6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3.8	44.4	44.3	45.2	44.7	44.2	44.3	44.3	44.3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 (hors CI))	53.8	60.7	58.4	57.6	56.6	55.6	55.0	54.3	53.8
공공채무(Dette publique)	97.4	115.0	112.8	111.5	111.2	111.3	111.7	111.6	110.9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6, p.11

[그림 I -1] 프랑스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의 빚금 영역은 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관련 비용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는 3.1%, 제외할 경우 2.3%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5

〈표 I-4〉 2023년 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실적	2022 예산법	2022 전망	2023 예산 법안	2022~ 2023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88.5	461.5	513.4	500.2	38.7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18.8	391.9	444.6	431.9	40.0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7	69.6	68.8	68.3	-1.3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4	43.2	43.8	43.7	0.5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6.4	26.4	24.9	24.6	-1.8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17.0	307.7	340.1	345.1	37.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5.7	287.6	315.1	314.3	26.7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8.7	82.4	86.8	86.9	4.5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6.3	40.0	59.0	55.2	15.2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8.3	18.2	18.0	16.8	-1.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5.5	98.4	102.1	97.4	-1.0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6.9	48.6	49.3	58.0	9.3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1.3	20.2	25.0	30.8	10.7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8	-0.1	0.8	-3.5	-3.5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1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70.7	-153.8	-172.6	-158.5	-4.6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3, p.13, p.15

〈참고 1〉 2022년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22)

□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2) 발표(2022.11.2.)

-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직면한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편성
- (경제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 9월 편성된 2023년 예산법안 전망치와 동일한 2.7%로 전망
- (재정 전망)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은 4.9%로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 및 2023년 예산법안 전망치보다 0.1%p 개선
- (주요 재정 조치)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연료가격 인하 지원, 고용훈련 지원정책 등이 반영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 예산법 (A)	2022 1차수정 예산법 (B)	2022 수정전망 (2023 예산법안)	2022 2차수정 예산법안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61.5	505.0	500.2	514.2	52.7	9.2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91.9	434.8	431.9	446.2	54.3	11.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6	70.2	68.3	67.9	-1.7	-2.3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7.7	335.3	345.1	340.5	32.8	5.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7.6	311.6	314.3	315.8	28.2	4.2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2.4	85.3	86.9	87.4	5.0	2.1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0.0	56.8	55.2	59.0	19.0	2.2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8.2	18.1	16.8	18.0	-0.2	-0.1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8.4	101.2	97.4	100.6	2.2	-0.6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48.6	50.2	58.0	50.9	2.3	0.7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0.2	23.7	30.8	24.7	4.5	1.0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1	0.4	-3.5	1.0	1.1	0.6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3	0.3	0.3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153.8	-168.5	-158.5	-164.7	-10.9	3.8

자료: 프랑스 재무부, 2022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2), 2022.11.2.

자료: 프랑스 정부, PLFR2 pour 2022 -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2022.11.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2/plfr2-pour-2022>

## 〈참고 2〉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예산법안 평가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2023년 프랑스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 9.26.)<sup>2)</sup>
  - 2023년 예산법안의 2022년 경제에 대한 기본가정(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5.3%)은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전망이라 평가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은 다른 기관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이러한 전망은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1.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
  - 전체적으로 2023년 공공부문 재정은 느리게 회복하고 불확실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채무 수준이 거시경제적 충격과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11.2.)
  - (경제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예산법안의 전망과 동일한데, 2분기 말 이후 프랑스 경제의 회복력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위험) 에너지 공급 중단 위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은 4분기 경제성장 전망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
  - (재정 전망) 2022년 재정수지 전망은 2023년 예산법안과 비교해 0.1%p 개선되었고, 이는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제언) 거시경제 또는 금융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출 통제 노력이 필요

자료: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Avis n°2022-6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n°2, 2022.11.2.,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6-loi-de-finances-rectificative-ndeg2>

2)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X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3, 2022.9.2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4-lois-de-finances-2023>, 검색일자: 2022.9.26.

## 2 예산 기초

- 가계 구매력 유지를 위해 2023년 에너지 가격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
  -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
  - 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과세 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 가계를 보호
- 국가 주권 기능 강조
  - 2023년 국방 및 치안 관련 예산을 44억유로 증액하고, 사법 관련 예산을 8% 증액
-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국가 교육 예산 37억유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67억유로, 친환경 부문 투자 규모 15억유로 증액
  - 교통 부문의 친환경화와 생물 다양성 확대에도 투자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2022년 57.6%에서 2027년 53.8%로 낮출 계획

### 3 예산안 주요 내용(PLF 2023)

- 프랑스 재무부, FY2023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LF 2023) 발표(2022.9.26.)<sup>3)4)</sup>

#### 가. 세입

- 2023년 재정수입은 2022년 예산법 대비 373억유로, 2022년 전망 대비 50억유로 증가한 3,451억유로로 전망
  -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조세수입은 2022년 전망 대비 8억유로 감소한 3,143억유로로 전망
    - 법인세는 2022년과 비교해 37억유로 감소할 전망
    - 기업부가가치분담세 및 공영방송 출연금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2년 대비 47억유로 감소할 전망
    - 에너지제품소비세는 12억유로 감소할 전망
    - 지방세 개혁의 영향으로 기타 세입은 2022년 전망치 대비 87억유로 증가할 전망
  - 세외수입은 EU 복구계획 자금 조달 증가를 반영해 2022년 대비 58억유로 증가한 308억유로로 전망

#### 나. 세출

- PLF 2023부터 예산 체계의 명확성과 가독성 향상을 위해 이전의 조정 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sup>5)</sup>과 총 정부지출 목표(Objectif de Dépenses Totales de l'État, ODETE) 대신 국가지출범위(périmètre des dépenses de l'État)를 총지출 개념으로 제시

3)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9.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3-plf>, 검색일자: 2022.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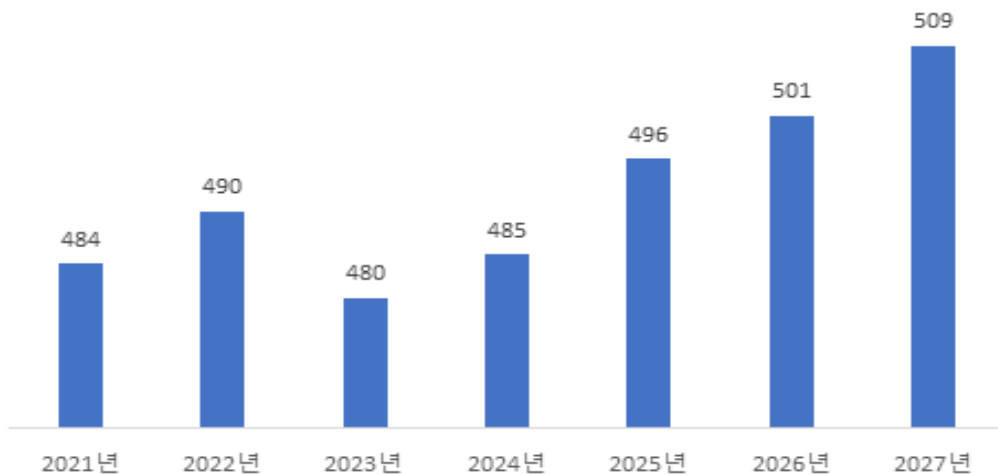
4)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26 septembre 2022, 2022.9.26.,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compte-rendu-du-conseil-des-ministres-26-09-2022#e924610d-b3d3-4cde-96bf-c21fa06807fa-3>, 검색일자: 2022.9.27.

5) 조정 가능 지출은 일반예산의 세출, 조정 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출을 의미

- 국가지출범위는 중기재정법안(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LPFP)의 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특별할당회계 연금지출(Depenses du CAS Pensions) 기여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모든 지출을 포함
  - 임시적 또는 예외적 지출을 포함한 모든 미션지출이 통합되어 재정지출을 더 철저하게 표시할 수 있음
- 2023년 국가지출범위는 4,803억유로로 2022년 4,899억유로에 비해 96억유로 감소
- 2022년 1차 수정예산법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지원 조치 강화에 따라 2022년 지출 증가를 반영
  - 이후 2027년까지 국가지출범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그림 I-2] 국가지출범위 전망

(단위: 십억유로)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p.14

〈표 I-5〉 2023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32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sup>1)</sup>	2022 본예산 (A)	2023 예산법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9	3.1	6.9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3.6	3.7	2.8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1	3.6	16.1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5.1	5.9	15.7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1	1.9	-9.5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7.2	17.8	3.5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6	0.7	16.7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0.5	1.9	280.0
문화(Culture)	3.3	3.5	6.1
국방(Défense)	40.9	43.9	7.3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9	0.9	0.0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20.6	26.5	28.6
경제(Economie)	4.1	3.7	-9.8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44.3	60.2	35.9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6.5	60.2	6.5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7.4	8.0	8.1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9	2.0	5.3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7.0	6.1	-12.9
정의(Justice)	8.9	9.6	7.9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7	0.7	0.0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1	2.4	14.3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	1.1	1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9.1	30.6	5.2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0	6.1	1.7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13.0	4.4	-66.2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	4.4	2.3
보건의료(Santé)	1.3	3.4	161.5
치안(Sécurité)	14.7	15.8	7.5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27.7	29.8	7.6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1.7	1.8	5.9
공공부문 개혁(Transformation et fonction publiques)	0.8	1.1	37.5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4.5	20.7	42.8
<b>미션별 합계</b>	<b>347.8</b>	<b>385.5</b>	<b>10.8</b>

주: 1)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80)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Chiffres clés p.6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
  -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이 없는 경우 2023년 월평균 추가 지출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00유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80유로로 예상
  -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면 월평균 추가 지출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유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0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가격 인상 상한 설정으로 인한 비용은 2023년 총 450억유로로 추산

### 나. 생태학적 전환

- 15억유로 규모의 녹색기금(fonds vert)을 새로 편성해 지방정부 생태학적 전환 프로젝트 지원
  - 공공건물 열효율 개선, 가로등 현대화, 바이오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개선, 저공해지역을 조성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지원
  - 생물다양성 전략 예산(le financement de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a biodiversité)을 1억 5천만유로로 확대
- 공공 및 민간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Ma Prime Rénov'(my premium renovation)”<sup>6)</sup>에 24억 5천만유로 지원 등 민간 건물 에너지 혁신에 총

6) 주택의 단열 개선, 보일러 교체, 효율적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고

## 30억유로 지원

- 공공건물의 에너지 혁신을 위해 1억 5천만유로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너스 지급
  - 운송 부문은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고, 그중 95%가 도로 운송에서 발생
  - 2035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
  -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3억유로의 예산을 지원
- 2030 생물다양성 전략(Stratégie nationale biodiversité à horizon 2030)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
  - 영토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
  - 프랑스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지원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 및 예방 조치 개발을 통해 농업이 기후 위기에 적응하도록 함
  - 농업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여금 확대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지원
  -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및 기술 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원
  - 원자력 산업 혁신에 5억유로 지원

〈참고 3〉 녹색예산(budget vert)

- 녹색예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및 보호 등 총 6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2023년 예산안의 정책 등급 제시
- 2023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지출 5,694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총 594억유로
  - 2023년 예산법안에서 6가지 환경 목표 중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398억유로이며,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연구,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지원 등이 포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23억유로
  -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196억유로이며,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도로 건설 관련 지출 포함

자료: 프랑스 재무부, Budget vert 2023: 4,5 milliards d'euros supplémentaires pour l'environnement, 2022.10.12., <https://www.economie.gouv.fr/budget-vert-2023-45-milliards-deuros-supplementaires-pour-lenvironnement>

다. 완전고용 지원 및 세부담 완화 조치 지속

- 구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견습생(l'apprentissage) 고용 지원에 35억유로를 배정해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
  -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용기금(FNE) 교육계획 수립
    -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이 고용훈련을 받도록 하

며, 2023년 총 3억유로 지원

- 산업 변화에 대비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직업 전환을 돕는 제도인 단체직업전환 (Transitions collectives)에 5천만 유로 지원

#### □ 혁신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성장에 투자

- 프랑스 2030 계획을 통해 전자산업 부문 스타트업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억 5천만유로 투자
  - 500개의 딥테크(deep tech)<sup>7)</sup> 스타트업을 만들고, 25개의 친환경 기업을 포함해 100개의 유니콘 기업<sup>8)</sup>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를 지속

- 2022-2027년 기간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를 폐지하여 2017년부터 시행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조치를 지속
  - 기업부가가치분담세는 2023년 절반으로 감소하고 2024년 완전히 폐지
- 2022년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상황에서 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과세 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여 가계를 보호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5.4%를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에 연동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sup>9)</sup>

### 라. 사회적 포용 강화

#### □ 급여와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여 가계 구매력 보호

-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연금과 보조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인상
  - 연금수급자 300만명,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sup>10)</sup> 대상자 300만명, 활동

7)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 기술을 집약한 고기술 기반 기업

8)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9) 프랑스 재무부, Quelles mesures fiscales pour 2023 ?, 2022.11.8., <https://www.economie.gouv.fr/cedef/mesures-fiscales-2023>, 검색일자: 2023.1.3.

---

수당(Prime d'Activité)<sup>11)</sup> 대상자 500만 가구, 주거 수당 대상자 6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

-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미션 내 주거지원(Aides à l'accès au logement) 프로그램 예산을 3억유로 증액

#### □ 빈곤 감소를 위한 지원

- 빈곤의 대물림,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시스템의 복잡성, 불충분한 고용으로 인한 적극적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대상 제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억 5,200만유로 지원

#### □ 성인장애급여(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개혁

- 장애가 있는 경우 성인장애급여를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2023년 10월부터 성인장애급여 계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기로 결정

### 마. 교육 강화 및 청년 지원

#### □ 교직원 급여 인상 및 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교직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교사 급여를 평균 10% 인상하고 추가 인상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
- 공공교육 활동 개선을 위해 교육혁신기금(Fonds d'innovation pédagogique)을 설립해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5년간 총 5억유로 지원

#### □ 고등교육 지원 강화

- 2022-2023학년도에 장학금을 4% 인상하고, 대학 기숙사 및 등록금을 동결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학생복지센터(Crous)에서 운영하는 학생 식당의 식사를 1유로로 낮춤

---

10) 최저생활수준의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11)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로 지급하는 수당

- 대학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생활 참여 장려
  - 6~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클럽 등록 시 50유로의 혜택을 주는 스포츠 패스(Pass Sport)에 2023년 1억유로 지원
  - 영화관, 미술관, 극장, 도서 구매 등에 대해 지원하는 문화 패스(Pass Culture)의 적용 대상을 15세 이상에서 5학년 이상으로 확대
- 문화재 보호 강화
  - 박물관 및 기념물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역사적 기념물의 복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7,600만유로 확대

#### 바. 프랑스 영토 보호

- 2019-2025년 군사 프로그램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LPM)에 따라 2023년 국방 미션지출이 439억유로로 전년 대비 30억유로 증가
  - 군용장비 개선, 우주 분야, 정보, 사이버, 유지보수 등 국방 부문 혁신 강화 지원
  - 라팔(Rafale) 전투기 프로그램 개발, 미래 차세대 항공모함 설계, 미래 기뢰 대응 프로그램(Système de Lutte Anti-Mines Futur, SLAMF) 배치 등 계획
- 내무부와 법무부의 디지털 혁신 등을 추진
  - 내무부의 디지털 혁신,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미래의 위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위해 5년간 150억유로 지원 및 8,500개의 일자리 창출
    - 미래 무선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사이버 보안 강화 투자
  - “정의” 미션지출을 8% 증액하고 법무부의 디지털 혁신 추진

## 5 중기재정법안 주요 내용

- 2023-2027 중기재정법안(PLPFP: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2027) 발표(2022.9.26.)<sup>12)</sup>
  - 2023-2027 중기재정법안은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GDP 대비 공공채무를 2025년 111.7%에서 2027년 110.9%로 낮춤
    -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
  - 해당 기간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생태학적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지속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표 I -6〉 2023-2027 중기재정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조적재정수지(Solde structurel (1))	-4.2	-4.0	-3.7	-3.4	-3.1	-2.8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2))	-0.6	-0.8	-0.7	-0.5	-0.3	0.0
일회성조치(Solde des mesures ponctuelles et temporaires (3))	-0.1	-0.2	-0.1	-0.1	0.0	0.0
재정수지(Solde effectif (1+2+3))	-5.0	-5.0	-4.5	-4.0	-3.4	-2.9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57.6	56.6	55.6	55.0	54.3	53.8
재정지출증가율(%) (É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1.1	-1.5	-0.6	0.3	0.2	0.6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5.2	44.7	44.2	44.3	44.3	44.3
공공채무(Dette au sens de Maastricht)	111.5	111.2	111.3	111.7	111.6	110.9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PFP 2023-2027

12)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3, 2022.9.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3-plf>, 검색일자: 2022.9.26.

## 〈참고 4〉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중기재정법안 평가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3-2027 중기재정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9.26.)
- 다소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정부가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를 3%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소 제한적이라 평가
  -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과 세수 확대 계획이 부분적으로만 제시됨을 지적
  -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가장 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출 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언급

자료: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23 À 2027, 2022.9.26.,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5-loi-de-programmation-2023-2027>

## 6 사회보장예산법안 주요 내용

- FY2023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발표(2022.9.26.)<sup>13)14)</sup>
- 2020년 사회보장 부문은 397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개선되었고,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는 2022년과 비교해 110억유로 개선된 68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인구 고령화를 반영해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적자는 2026년 118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13)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2.9.26., <https://www.economie.gouv.fr/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3>, 검색일자: 2022.9.27.

14) 보건·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pour l'année 2023, 2022.9.26.,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presse/dossiers-de-presse/article/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lfss-pour-l-annee-2023#t1-Renforcer-le-virage-preventif>, 검색일자: 2022.9.27.

- 코로나19 위기 기간 의료부문에 투자가 강화되고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있었음
  - 2021년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183억유로의 예외적 지출이 있었으며 이는 2020년과 유사한 수준
    - 선별검사 71억유로, 백신 접종 관련 비용 47억유로, 위기관리로 인한 추가 비용과 의료시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등
  - 2022년 선별검사 49억유로, 백신 접종 관련 비용 34억유로 등으로 115억유로의 지출이 예상
  - 2023년 코로나 관련 지출은 10억유로로 전망
    - 백신 접종 관련 비용 및 보건 위기 관련 기타 자금 조달에 6억유로
    - 선별검사 4억유로

〈표 I-7〉 코로나19 관련 지출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	2021	2022	2023
코로나19 관련 수당	2.4	0.9	1.7	0.0
백신 접종 관련 지출	0.0	4.7	3.4	0.6
선별검사	2.6	7.1	4.9	0.4
백신 접종 제외 공중보건 관련 지출	4.8	1.3	1.0	0.0
보건 및 의료 사회 시설	6.6	3.6	0.0	0.0
지역 개입 기금	0.3	0.4	0.2	0.0
기타	1.7	0.2	0.1	0.0
총 코로나19 관련 지출	18.3	18.3	11.5	1.0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3

- 2023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의 주요 조치
  - 건강 예방 정책 강화
    - 주요 연령(20-25세, 40-45세, 60-65세)에 건강 예방 확대
    - 성인 여성에 대한 응급 피임법 접근성 강화
    - 백신을 처방하고 투여할 권한이 있는 보건 전문가를 확대

-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보건 전문가 배치 간소화 및 강화
  - 보건 시설의 임시 의료 및 준의료 작업 감독
- 영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 개선
  -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족 부양 수당 인상
  -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보육방법자유선택보충금(CMG: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을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연장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재택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혁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지원 계획에 주당 2시간의 사회생활 추가
  -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재택 간호 자금 조달
  - 노인요양복지시설(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의 현대화 및 확대
- 사회적 사기와의 전쟁
  - 보험료와 관련된 회사의 기부금 사기 등과 관련해 사기 방지 및 적발을 개선
  - 의료 제공자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표 I-8〉 2022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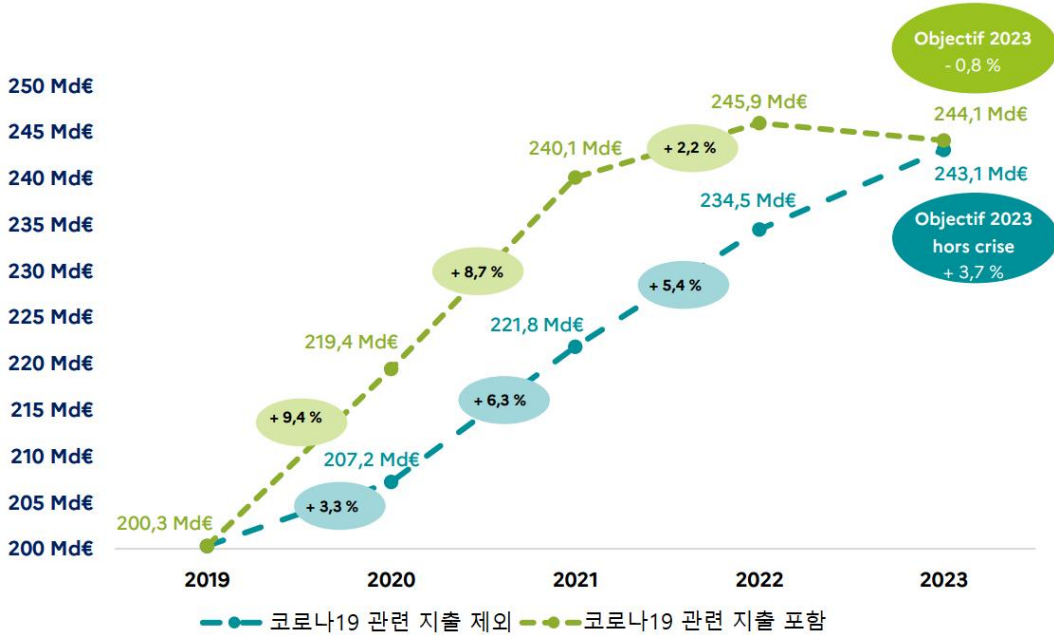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건강보험(CNAM Maladie)	-1,5	-30,5	-26,1	-20,3	-6,5	-4,9	-4,4	-2,6
산재보험(CNAM AT-MP)	1,1	-0,1	1,3	2,0	2,2	2,6	2,9	3,3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1,3	-4,9	-1,1	-3,0	-3,5	-9,4	-13,9	-15,9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1,5	-1,8	2,9	2,6	1,3	0,7	0,5	0,7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	-	0,3	-0,5	-1,2	0,9	0,5	0,5
<b>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b>	<b>-0,2</b>	<b>-37,3</b>	<b>-22,7</b>	<b>-19,2</b>	<b>-7,6</b>	<b>-10,1</b>	<b>-14,4</b>	<b>-14,0</b>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6	-2,5	-1,5	1,3	0,8	1,3	1,8	2,3
<b>사회보장 부문 지출(RG+FSV)</b>	<b>-1,7</b>	<b>-39,7</b>	<b>-24,3</b>	<b>-17,8</b>	<b>-6,8</b>	<b>-8,8</b>	<b>-12,7</b>	<b>-11,8</b>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3

-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sup>15</sup>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포함해 2019년 2,003억유로에서 2021년 2,401억유로, 2022년 2,459억유로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2,441억유로로 전망

[그림 I-3]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 추이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3

15)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다음 연도 건강보험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

## II. 독일

□ FY2023: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출처: 연방 재무부, 경제에너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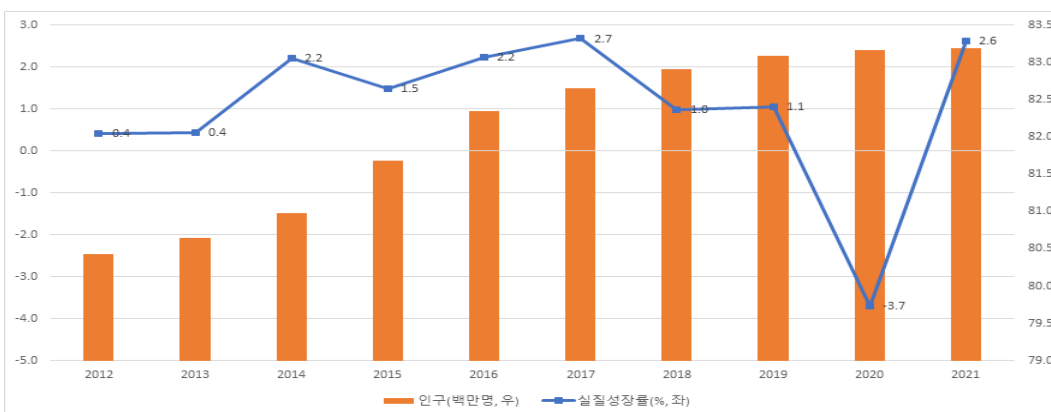
- Finanzplan des Bundes 2022 bis 2026, 2022.8
- Finanzbericht 2023, 2022.8
-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2022.4
-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10
- Frühjahrsprojektion 2022, 2022.4
- Herbstprojektion 2022, 2022.10

□ 환율: 1유로 = 약 1,352.79원(2021년도 평균)<sup>16)</sup>

□ 경제 규모: 2021년 경상 GDP 4조2,599억달러(2021년 기준, OECD)<sup>17)</sup>

□ 인구: 8,319.6만명(2021년 기준, OECD)

□ GDP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Stat, National Accounts (<https://stats.oecd.org/>, 추출일: 2022.12.22.)

1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https://ecos.bok.or.kr/>, 추출일: 2022.12.22.)

17) OECD Stat, National Accounts, GDP CXC: 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 기준(<https://stats.oecd.org/>, 추출일: 2022.12.2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모멘텀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일의 GDP 성장률은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
- (재정 전망)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3.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26년까지 1.0%로 낮아질 전망이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신규차입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66.75%에서 2026년에는 65.25% 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예산 기조

- 독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되돌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많은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기후 보호, 교통, 디지털화, 혁신,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예산안

- (재정지출) 2023년 재정지출은 4,452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조세수입) 2023년 재정지출 중 약 81%인 약 3,623억유로를 조세수입으로 조달할 전망
- (신규차입) 2023년부터 다시 부채 규정 기준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신규차입 규모는 2022년 1,389억유로에 비하여 1,217억유로 감소한 172억유로로 계획

□ 주요 재정정책

- (에너지 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3,000억유로 규모의 구호패키지를 실행
- (주요 투자정책) 2023년 연방 정부의 투자지출은 약 584억유로이고, 교통 인프라, 주택 및 건설, 교육, 연구, 디지털화, 기후 보호, 국제협력 등에 투자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2. 01. 14.	FY2021 잠정결산 발표
2022. 01. 26.	2022년 연간경제보고서 발표
2022. 03. 16.	2022년 2차 예산안 및 2023~2026 중기재정계획 주요 수치 발표
2022. 04. 27.	2022년 2차 예산안 추가 예산 승인
2022. 04. 27.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2022 채택
2022. 04. 27.	2022년 봄 경제 전망 발표
2022. 05. 12.	제162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22. 07. 01.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채택
2022. 09. 29.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 가을 공동 경제 전망 발표
2022. 10. 12.	2022년 가을 경제 전망 발표
2022. 10. 17.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
2022. 12. 16.	연방은행 2023~2025년 경제 전망 발표
2022. 12. 16.	제26차 안정화위원회 회의 개최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

- 202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모멘텀이 제한된 상황에서 2.2%로 전망
  - (성장률) 2021년 독일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연방정부의 봄 경제 전망<sup>18)</sup>에서 2022년 2.2%, 2023년 2.5%의 전년 대비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전망
  - (소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영향의 감소와 저축률의 정상화로 인하여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2022년에는 3.7% 증가할 전망
    - 2021년 3.1% 증가하였던 정부소비는 2022년에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총고정자본형성) 원자재 부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생산자 가격이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투자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2022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과 기후전환기금의 민간 부문 보조금으로 인하여 설비 분야는 2022년 6.0%의 성장률이 예상됨
    - 2023년에 설비(9.6%)와 건설(2.2%)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여 총고정자본형성은 4.6%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수입) 해외여행의 증가 및 군수품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은 5.5%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내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수출도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에는 수출(5.9%)이 수입(5.3%)보다 더 강하게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GDP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물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5월호 참고

가상승률이 당분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는 6.1%, 2023년에는 2.8%로 예상

-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계속되는 혼란과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향후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격 압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음

〈표 II-1〉 2022년 봄 경제 전망 주요 수치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2.9	2.2	2.5
가계최종소비	0.1	3.7	2.3
정부최종소비	3.1	-0.1	-0.8
총고정자본형성	1.5	3.4	4.6
설비	3.4	6.0	9.6
건설	0.7	1.7	2.2
내수	2.2	2.7	2.1
수출증가율	9.9	4.2	5.9
수입증가율	9.3	5.5	5.3
소비자물가상승률	3.1	6.1	2.8

자료: 연방 경제기후부, *Frühjahrsprojektion 2022*, 2022.4.27.

〈참고 1〉 2022년 가을 경제 전망(Herbstprojektion)

-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어 2.3%로 전망
  - 봄 경제 전망에서는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하였으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산업 생산에 큰 타격을 입고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가을 경제 전망에서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8.0%, 2023년 7.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구호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

2022년 가을 경제 전망 주요 수치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2.6	1.4	-0.4	2.3
명목 GDP 성장률	5.8	7.0	5.3	4.7
가계최종소비	0.4	4.3	-0.9	2.4
정부최종소비	3.7	2.8	-0.8	0.8
총고정자본형성	1.2	-0.6	0.3	3.9
설비	3.5	1.0	3.6	5.8
건설	0.0	-2.2	-2.1	2.9
내수	1.9	3.1	-0.5	2.4
수출증가율	9.7	1.4	2.0	3.5
수입증가율	9.0	5.4	1.9	3.6
소비자물가지수	3.1	8.0	7.0	2.4
실업률(연방고용청 기준)	5.7	5.2	5.4	5.2

주: 2021년 잠정치, 2022-2024년 전망치  
 자료: 연방 경제에너지부, "wirtschaftliche-entwicklung,"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2.html>, 2022.10.12.

## 나. 재정 전망

### □ 재정수지 전망

- (지출) 2023년 재정지출은 4,452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한 수치, 재정지출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4년에 4,237억유로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5년에 4,286억유로, 2026년에 4,363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조세수입) 2023년 조세수입은 3,623억유로로 전망되고 중기재정계획 기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6년에는 4,023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망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같은 불확실성의 위험이 남아있음
- (신규차입) 2023년부터 다시 부채 규정 기준 한도<sup>19)</sup>를 준수함으로써 신규차입 규모는 2022년 1,389억유로에 비하여 1,217억유로 감소한 172억유로로 계획
  - 2023년 연방 예산안부터 2026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
- (일반정부 재정수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의 3.7%보다 나아진 3.5%로 전망되고,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2022.4.)이 예상한 3.75%보다 개선된 수치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2%로 나타남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기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5%p 줄이는 MTO 규정 요건을 평

19) 독일 기본법 109조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 수입 없이 예산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기본법 115조는 신규 차입을 명목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고 있음

균적으로 준수할 계획

□ 정부부채 전망

-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마스트리히트 기준)는 67.75%이고, 2023년에는 66.75%로 예상되며 꾸준히 감소하여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의 감소와 명목 GDP의 성장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표 II-2〉 2023 예산안 및 2024-2026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단위: 억유로, %)

구분	2022	2023	중기재정계획		
			2024	2025	2026
재정지출	4,958	4,452	4,237	4,286	4,363
전년대비 증감률(%)	-10.9	-10.2	-4.8	1.2	1.8
투자	515	584	517	521	519
재정수입	4,958	4,452	4,237	4,286	4,363
조세수입	3,284	3,623	3,745	3,881	4,023
신규차입	1,389	172	123	128	138

자료: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12, 2022.8.

〈표 II-3〉 2021-2026 독일 중기재정계획 주요 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5	-2	-2	-1.5	-1
구조적 재정수지	-2.5	-3	-2.25	-2	-1.5	-1
국가부채	68.6	67.75	66.75	66	65.75	65.25

자료: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2022.10.17.

## 2 예산 기초

-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부채 규정 기준 한도를 넘겨왔으나, 2023년부터는 재정정책의 전환점으로서 부채 한도를 지키며 안정 지향적인 재정정책으로 돌아갈 계획
  - 독일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되돌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투자에 많은 지원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기후 보호, 교통, 디지털화, 혁신,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지원
  - (코로나19 대비) 경제기후부(BMWK)는 전염병 대비에 1억 7,100만유로를 지출하고, 연방보건부(BMG)는 백신 조달과 전염병 대비 기금 조달을 위하여 약 22억유로를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및 영향 완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KfW 대출에 54억유로,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장치 임대 2억 7,400만유로, 연방군 특별기금에 1,000억유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구호패키지에 300억유로 지원
  - (위기 지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방 외무부와 함께 50억유로의 글로벌 위기 지원금 지원
-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 확대) 독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이며 디지털화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2024년~2026년) 연간 약 520억유로 규모를 투자할 계획
  - 2023년에는 583억유로를 투자지출에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3월 예산안 주요 수치에서 결정된 510억유로에 IMF 신탁기금 63억유로와 건강보험기금 10억유로가 추가된 규모
    - 이러한 투자지출의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 약 390억유로)과 비교

---

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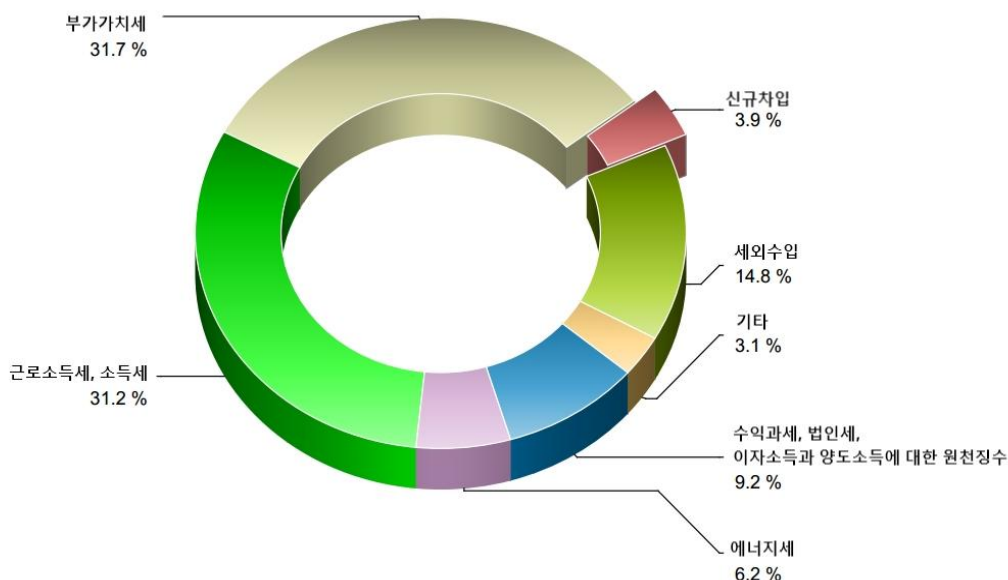
- (사회적 연대 강화)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2023년 2,000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 연금보험에 대한 지출은 2023년 1,124억유로에서 2026년 1,288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이며, 유아교육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억 유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주택에 대한 연방의 주정부 재정지원도 25억유로로 많이 증가
- (국제협력) 국방,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국제 기후 보호 분야에 기금을 제공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 국제 기후 및 생물 다양성 기금에 2023년에만 40억유로를 기여할 것이며, 세계 2위의 공여국으로서 개발 협력에 연간 220억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

### 3 예산안 주요 내용

#### 가. 재정수입

- 2023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약 4,452억유로로 전망되고, 조세수입이 약 3,623억유로로 가장 큰 비중인 약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조세수입) 2023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623억유로로 전망되며 근로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두드러짐(〈표 II-4〉 참고)
  - (세외수입) 2023년 세외수입은 약 657억유로 규모이며, 보증 수입과 트럭 통행료, 주정부로부터의 환급금, 이자 수입 및 대출 상환금 등이 포함
  - (신규차입) 2022년 1,389억유로였던 신규차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72억유로 규모로 편성

[그림 II-1] 2023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자료: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66, 2022.8.

〈표 II-4〉 2022-2026년 연방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단위: 억유로)

항목	2022	2023	2024	2025	2026
근로소득세(Lohnsteuer)	1,003	1,072	1,128	1,178	1,241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98	316	336	355	372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 않는 수익과세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61	158	166	168	170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38	38	39	39	40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209	213	223	235	243
부가가치세(Steuern vom Umsatz)	1,373	1,468	1,511	1,555	1,595
영업세 이전금액(Gewerbesteuerumlage)	22	23	24	26	27
연방세(Bundessteuern) <sup>1)</sup>	1,006	1,029	1,038	1,055	1,070
EU기금(EU-Finanzierung)	-357	-357	-368	-383	-393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97	-103	-99	-101	-103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105	-108	-113	-117	-121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90	-90	-9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8	-8	-8	-8	-8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및 현재 조세추세에 따른 조정분	-168	-29	-42	-30	-20
<b>총 조세수입(Steuereinnahmen)</b>	<b>3,284</b>	<b>3,623</b>	<b>3,745</b>	<b>3,881</b>	<b>4,023</b>
<b>신규차입(Nettokreditaufnahme)</b>	<b>1,389</b>	<b>172</b>	<b>123</b>	<b>128</b>	<b>138</b>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맥주세를 제외한 소비세 대부분(에너지, 전기, 담배, 스파클링와인)과 자동차세(2009년 7월 1일 이후 주정부에서 이전), 보험세 등  
 자료: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3*, Tabelle 14, 16., 2022.7.1.일부 발췌

〈참고 2〉 연방 재무부, 제163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sup>20)</sup> 결과<sup>21)</sup>

- 독일의 2022년 총세입은 8,877억유로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이고, 2023년 총세입은 9,373억유로로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세입은 2027년까지 1조 1,148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1년 8,332억유로를 기준으로 추정 기간 연평균 5%씩 성장한 수치

제163차 세수추계 결과<sup>1)</sup>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방정부	3,137 (10.8)	3,380 (7.8)	3,697 (9.4)	3,903 (5.6)	4,100 (5.0)	4,241 (3.4)	4,382 (3.3)
주정부	3,551 (12.3)	3,780 (6.5)	3,874 (2.5)	4,119 (6.3)	4,311 (4.6)	4,463 (3.5)	4,619 (3.5)
지방자치단체	1,262 (17.4)	1,324 (4.9)	1,398 (5.6)	1,478 (5.7)	1,563 (5.7)	1,626 (4.0)	1,684 (3.6)
EU <sup>2)</sup>	382 (16.5)	393 (2.8)	404 (2.8)	430 (6.3)	445 (3.6)	456 (2.4)	463 (1.5)
<b>총 세입</b>	<b>8,332 (12.6)</b>	<b>8,877 (6.5)</b>	<b>9,373 (5.6)</b>	<b>9,930 (5.9)</b>	<b>10,419 (4.9)</b>	<b>10,785 (3.5)</b>	<b>11,148 (3.4)</b>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2~'27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자료: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Anlage 1, 2, 2022.10.27. 참고하여 작성

20) 독일의 세수추계는 일 년에 두 차례(통상 5월, 11월) 발표하며, 세수추계위원회(Arbeitskreis .Steuerschätzungen)는 간사 역할을 맡은 연방 재무부를 비롯하여 연방 경제기후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1955년 예산안, 1968년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수추계 결과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고 연방 재무부는 이를 직접 공표함(출처: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Estimate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 artikel/Topics/Taxation/Articles/working-party-on-tax-revenue-estimates.html>, 검색일자: 2022.11.23.)

21)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2022.10.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0/2022-10-27-ergebnisse-der-steuerschätzung.html>, 검색일자: 2022.11.8.

## 나. 재정지출

- (사회보장)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은 2023년 2,067억 유로로, 2022년 2,485억유로 대비 감소할 전망
  - 총지출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6.4%로 하락한 후, 2026년 50.8%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
  - 2023년 연금보험 예산은 1,124억유로의 규모이고, 연금기여율<sup>22)</sup>은 2024년까지 18.6%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19.0%, 2026년에는 19.8%까지 증가할 계획
  - 노동 분야에 대한 2023년 연방정부 지출 예산은 406억유로이고, 실업급여(SGBII) 213억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난방비 지원에 100억유로, 구직자 관련 고용서비스 및 행정비용 부담에 92억 5천만유로, 난민의 노동시장 편입 지원 3억 1천만유로 등으로 구성
  - 2023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의 예산은 129억유로로, 이 중 2023년 부모수당(Elterngeld)에 83억유로<sup>23)</sup>, 아동수당은 약 15억유로, 양육비 우선지원에 약 11억유로 지원
  - 연방정부는 장기요양보험에 2022년부터 연간 10억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기금에는 2017년부터 연간 145억유로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건강보호기금에 20억유로의 추가 보조금, 1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계획
- (국방) 2023년 국방부(BMVg) 예산은 재정계획 대비 약 27억 6천만유로 증가한 약 501억유로로 편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군 특별기금(Bundeswehr)이 1천억유로 규모로 조성
- (경제·에너지) 2023년 경제에너지부(BMWK)의 예산은 약 130억 5천만유로로 책정

22) 총임금 대비 기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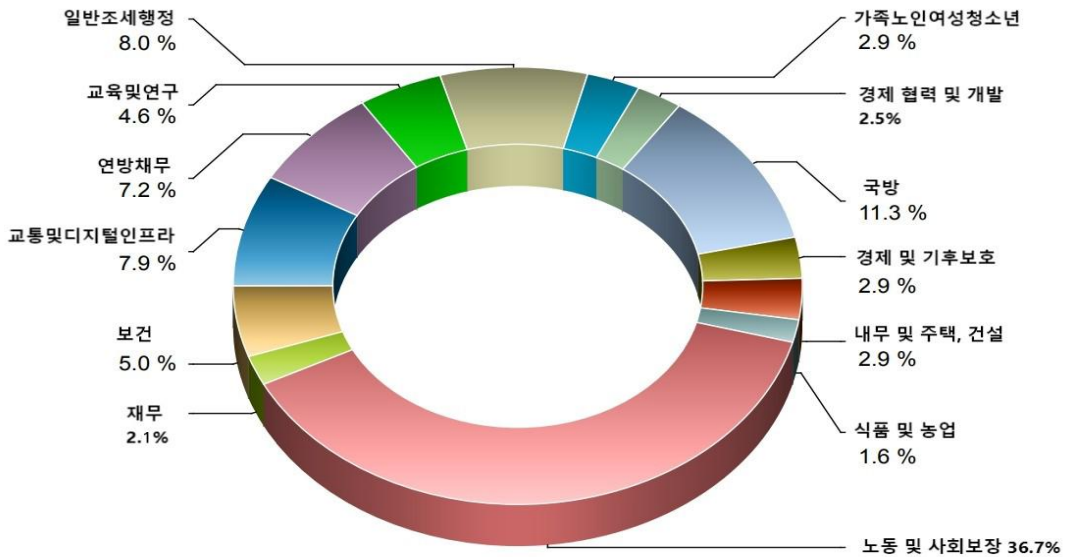
23) 부모수당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약 248억유로를 지원할 예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책에 대한 비용이 포함
    -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장치의 임대 및 운영과 관련하여 2억 7,400만유로, 육상 LNG 터미널 운영에 1,060만 유로<sup>24)</sup>, 에너지 위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유로의 예산 지원 등
  -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국가 수소 프로젝트인 H2Global에 35억유로를 추가 투입할 계획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주도 혁신프로그램인 ZIM 프로젝트에 7억유로,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 11억유로, 지역경제구조개선(GRW: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에 6억 4,700만유로 지원
- (교통) 2023년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DV)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유로(3.0%) 감액된 350억유로 배정되었고, 추가로 5억 4천만유로의 통행료 수입이 전망됨
- 연방 정부는 도로, 철도, 수로와 같은 전통적 교통수단 분야에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약 186억 유로가 계획됨
  - 자전거 및 걷기와 같은 기후 친화적 교통수단에 4억유로,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확장에 12억유로 지원
- (주택 및 도시개발) 2023년 연방 주택도시개발 및 건설부(BMWSB) 예산은 약 50억유로로 편성
- 기후 친화적 사회주택 25억유로, 도시개발자금 7억 9천만유로, 생애 첫 주택구매를 위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Baukindergeld) 8억 5,900만유로, 주택수당 6억 9천만유로, 주택프리미엄 보조금 2억 1,500만유로를 지원할 계획
- (교육 및 연구) 2023년 연방 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약 206억유로로, 숙련노동자 및 대학교육 강화,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조치, 아동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6월호, 「연방 정부, LNG 촉진법(LNG-Beschleunigungsgesetz) 시행(2022.6.1.)」 참고

- 연방교육지원법(BAföG)에 따른 지출은 2023년 약 26억유로, 업그레이드교육촉진법(Upgrading Training Promotion Act) 분야에 약 8억 5,200만유로, 직업 훈련 우수성 이니셔티브(Exzellenzinitiative Berufliche Bildung)에 약 2억 8,200만유로
  - 미래 전략 R&I 프로그램에 약 27억유로, 독일전환혁신기관(DATI: German Agency for Transfer and Innovation) 설립에 3억 3,700만유로 투자
  -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제공 확대 35억유로, 유아교육의 활성화에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환경) 2023년 연방 환경원자력안전 및 소비자보호부(BMUV)의 예산은 약 24억 4천만유로이며, 환경과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적응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
- 국가해양보호프로그램 2,200만유로, 해양쓰레기 오염방지기술 수출 지원 2,500만유로, 연방자연보호기금 1억 1,850만유로, 종다양성보호프로그램 1,400만유로
  - 방사성 폐기물 최종 저장 프로젝트 7억 2,900만유로,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4억 3,100만유로 지원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를 위한 국제기후금융에 약 6억 8,500만유로를 편성하고, 2026년까지 총 34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국제협력)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제협력과 관련된 지출은 약 224억유로
- 국제협력 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개발부(BMZ)의 예산은 111억 규모
  - 2023년 연방 외무부(AA)의 전체 예산(64억유로) 중 인도적 지원 관련 지출은 20억 유로로 높은 수준
    - 또한 독일 개발원조기금(Entwicklungsfinanzierung)에 약 36억유로 기여
  -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은 국민 총소득 대비 0.74% 규모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비중이 훨씬 높은 수준이고, 절대금액으로 보아도 약 322억달러로 미국(약 422억달러)에 이은 2위를 기록

[그림 II-2]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자료: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17, 2022.8.

<표 II-5> 2023 예산안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 실적	2022 목표	2023 예산안	2024	2025	2026
사회보장	291,759	264,746	210,206	208,485	214,875	222,011
국방	41,180	44,160	43,578	43,335	43,147	43,077
식품·농업·건강	2,677	2,961	2,933	2,881	2,720	2,611
경제·에너지	6,923	16,587	26,334	14,172	12,467	11,191
교통	34,723	33,963	32,601	32,938	33,816	34,388
건설·도시개발	2,122	3,422	3,701	4,302	4,760	5,026
교육·과학·연구	24,105	28,112	29,265	30,418	26,827	26,306
문화	4,240	3,324	3,121	2,997	3,008	2,968
환경보호	4,756	2,739	3,002	3,098	3,108	3,074
스포츠	251	363	290	264	282	246
내무·이민	8,500	9,393	8,857	8,890	8,891	8,905
경제협력·개발	13,224	12,304	10,926	10,539	10,432	10,238
일반재무	13,727	26,420	40,090	35,638	38,239	40,442
특별기금	79,056	8,524	306	1,003	1,421	946

주: 2024-2026는 전망

자료: 연방 재무부, *Finanzbericht 2023*, Tabelle 5., pp.17~19, 2022.8.

〈표 II-6〉 2023 예산안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2 (A)	2023 정부안 (B)	증감률(%) [(B-A)/A]
대통령실	44.89	44.98	+0.2
연방하원	1,108.91	1,107.72	-0.1
연방상원	35.29	39.68	+12.4
총리실	3,861.18	3,668.22	-5.0
외무부	7,107.58	6,397.43	-10.0
내무부	14,986.39	12,761.72	-14.8
법무부	937.98	953.42	+1.6
재무부	8,826.14	9,508.62	+7.7
경제기후부	11,333.78	13,050.89	+15.2
식품농업부	7,104.58	7,175.72	+1.0
노동사회부	161,080.98	163,330.5	+1.4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	36,111.0	35,041.0	-3.0
국방부	50,404.83	50,104.88	-0.6
보건부	64,357.04	22,062.28	-65.7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 및 소비자보호부	2,172.38	2,436.37	+12.2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2,599.96	12,880.55	+2.2
헌법재판소	35.91	40.47	+12.7
회계감사원	172.91	186.96	+8.1
정보보호 및 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43.24	45.7	+5.7
독립통제위원회	12.38	13.49	+9.0
경제협력개발부	12,349.89	11,080.0	-10.3
주택도시개발 및 건설부	4,962.55	5,010.04	+1.0
교육연구부	20,385.2	20,571.6	+0.9
연방채무	18,463.3	31,885.87	+72.7
일반조세행정	57,293.2	35,823.19	-37.5
재정지출	495,791.48	445,221.29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p.89~90, 2022.8.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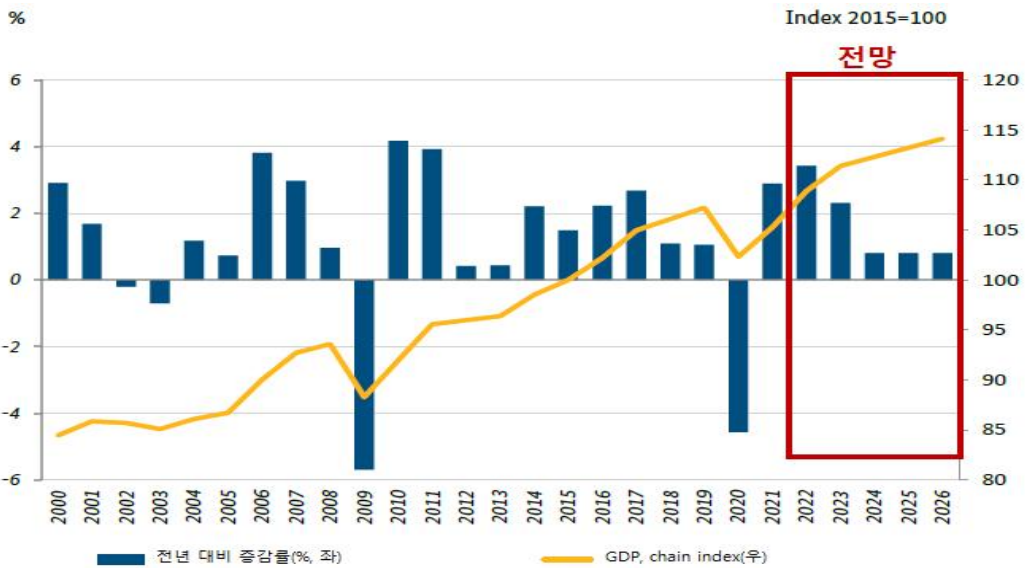
#### 1) 2022 안정화프로그램(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2)<sup>25)</sup>

- 2022 안정화프로그램(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2)에 따르면 202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3.6%,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3.75%로 전망
  - (경제 전망) 독일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3.6%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어 가면서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늘어난 투자로 총고정자본형성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며, 전 세계적인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수출은 5.5%, 수입은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이 작성된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독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
    - 2023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0.8%로 가정
  - (재정 전망) 독일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GDP 대비 3.75%, 2023년은 2%로 전망되며 2026년까지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 1~2% 수준으로 줄여갈 계획
  - (정부부채) 2022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마스트리히트 기준)은 66.7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신규차입 수준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026년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4.5%로 2022년보다 더 낮아질 전망

25)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Solide Finanzen in einer herausfordernden Zeit,” 2022.4.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7-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2.html>, 검색일자: 2022.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2022.7. 참고

- (재정정책 방향)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설정
  - 지난 3년간 부채 수준이 예외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중기 전망 기간은 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 독일 경제의 부흥, 기후 친화적 성장,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투자

[그림 II-3] 2022 안정화프로그램 실질 GDP 추이 및 전망



자료: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Abbildung 1, p.14, 2022.4.27.

- 독일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제25차 회의(2022.4.28.)<sup>26)</sup>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공공재정은 중단기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2022년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유럽의 중기재정목표(MTO)인 GDP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를 다시 유지할 것으로 예상

26) 연방 재무부, “25.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28. April 2022,” 2022.4.2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8-stabilitaetsrat-25-sitzung.html>, 검색일자: 2022.5.3.

- 독일 연방 및 주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부채를 줄이고, 양질의 공공투자를 위한 점진적인 재정 조정을 계획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 전망이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으므로 연간 부채 감소 정도를 늘리는 조치는 필요 없다는 의견

〈표 II-7〉 2021-2026년 독일 경제·재정 전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경제 전망 (단위: %)						
실질 GDP 성장률	2.9	3.6	2.3	0.8	0.8	0.8
민간소비	0.1	6.0	2.6	0.8	0.8	0.8
정부소비	3.1	0.0	-0.2	0.1	0.1	0.1
총고정자본형성	1.5	2.6	4.3	2.1	2.1	2.1
수출	9.9	5.5	4.0	3.1	3.1	3.1
수입	9.3	6.3	4.3	3.5	3.5	3.5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총수입	47.8	46.25	46	46.5	47	47.25
총지출	51.5	47.75	47	47.25	47	47.25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75	-2	-1.75	-1	-0.5
구조적 재정수지	-2.1	-3.5	-2.25	-2	-1	-0.5
총채무	69.3	66.75	65.75	65.75	65	64.5

자료: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Tabelle 11, pp.54~62, 2022.4.27. 발췌 및 재작성

- 안정화위원회 제26차 회의(2022.12.16.)에서 자문위원회는 정부 핵심 예산에는 부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별기금과 같은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재정에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지적<sup>27)28)</sup>

27) 연방 재무부, “26.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16. Dezember 2022,” 2022.12.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html>, 검색일자: 2022.12.19.

28) 안정화위원회, “Pressemitteilung zur Stellungnahme,” 2022.12.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stellungnahme-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2/2022-12-16-stabilitaetsrat-26-sitzung-stellungnahme-beirat.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2.12.19.

- (경제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1.4%, 2023년에는 -0.4%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2.3%로 회복할 것
  -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겨울철 반년 동안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면 생산 손실은 훨씬 클 것이고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
- (재정 전망) 안정화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로 전망되고, 이는 지난 4월 전망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
  - 반면, 2023년 재정적자는 2.5%p 증가한 4.5%로 예상되며 중기재정계획 기간에는 1.5~2%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위기 시기인 2021년 68.6%까지 올랐고 2022년 66.75%로 소폭 하락한 뒤 2023년 다시 70%까지 오를 전망이고,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26년에는 67.25% 수준으로 예상
  -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2~2026년까지 전체 연도에서 중기재정목표(MTO)인 GDP 대비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GDP 대비 2.5%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지만 2023년 다시 3.25%로 많이 증가하고 2024년 2%, 2025년과 2026년에 1.5%까지 하락할 전망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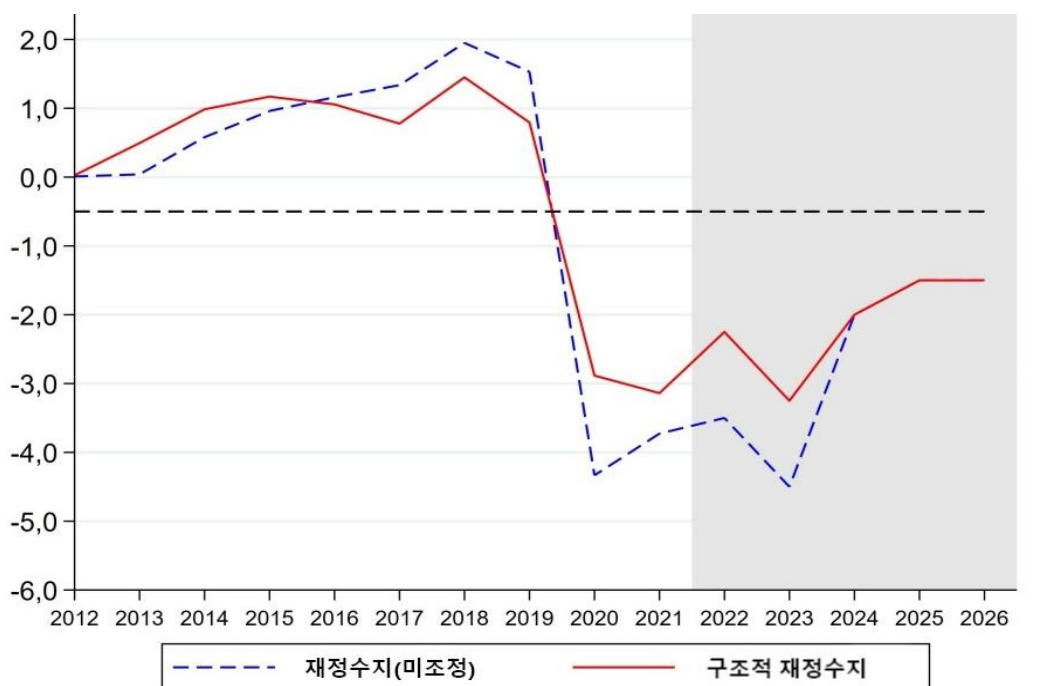
〈표 II-8〉 안정화위원회 26차 회의 재정 전망(2022.12.)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5	-4.5	-2.0	-1.5	-1.5
구조적 재정수지	-3.0	-2.5	-3.25	-2.0	-1.5	-1.5
총 부채	68.6	66.75	70	68.25	67.5	67.25

자료: 안정화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Übersicht 3.5,6, 2022.12.9. 발췌 및 재작성

[그림 II-4] 안정화위원회 26차 회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2022.12.)



자료: 안정화위원회, “Stellungnahme des Beirats,” p.15, Abbildung 1, 2022.12..9. 인용

## 2) 2023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sup>29)</sup>

\*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sup>30)</sup> 독일은 7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 계획을 현재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여 제출

□ (재정수지)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의 3.7%보다 나아진 3.5%로 전망되고, 이는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sup>31)</sup>에서 예상한 3.75%보다 개선된 수치

○ 세입이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예상한 GDP의 45.5%보다 더 증가한 46.5%로

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0월호, 「연방 재무부, 2023년 재정계획안(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발표(2022.10.17.)」 참고

30) European Commission, “Draft budgetary plan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2_en), 검색일자: 2022.10.25.

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5월호, 「연방 정부,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2022(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채택(2022.4.27.)」 참고

예상되고, 반면 지출은 GDP의 49.25%에서 50%로 비교적 덜 증가했기 때문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안정화프로그램에서 전망한 것과 같이 2%로 나타남
- (중기재정목표: MTO)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3%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4-2026년 기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5%p 줄이는 벤치마크 요건을 평균적으로 준수할 계획
- (국가채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67.75%이고, 2023년에는 66.75%로 예상되며 꾸준히 감소하여 2026년에는 65.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의 감소와 명목 GDP의 성장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

〈표 II-9〉 2023 재정계획안 2021-2026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5	-2	-2	-1.5	-1
구조적 재정수지	-2.5	-3	-2.25	-2	-1.5	-1
국가채무	68.6	67.75	66.75	66	65.75	65.25

주: 1) 2022.4월 자료는 안정화프로그램 2022(Stabilitätsprogramm 2022) 기준

2) 2021.10월 전망 자료는 2022.9.28.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3*, p.5, 2022.10.17.

나. 에너지 위기 대응<sup>32)</sup>

## 1) 제1차 구호패키지(2022.2.23.)

-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연정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위한 10가지 구호 조치(10 Entlastungsschritte für unser Land)’라는 광범위한 구호 조치에 합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33)</sup>
  - 2022년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sup>34)</sup> 폐지
  - 난방비 보조금: 주거급여 수급자에 270유로 지원(2인 가구의 경우 350유로, 추가 1인당 70유로 증가), 직업훈련수당 수급자와 학생들에게는 균일하게 230유로 지급
  -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관련 지출 정액 공제가 1,200유로로 늘어남
  - 연간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9,983유로에서 10,347유로로 인상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의 거리 공제<sup>35)</sup>를 38ct로 인상

## 2) 제2차 구호패키지(2022.3.23.)

- 에너지 시장이 크게 악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연정위원회는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022.3.24.)<sup>36)</sup>
  - (에너지세 감면)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리터당 14.04센트 인하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300유로에 이르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

32)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Entlast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12.26.

33) 연방 재무부, “10 Entlastungsschritte für unser Land,” 2022.2.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anzen/10-entlastungsschritte-fuer-unser-land.pdf?\\_\\_blob=publicationFile&v=3](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anzen/10-entlastungsschritte-fuer-unser-land.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3.14.

3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전반에 사용

35)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20km 이하일 경우에는 1km당 30ct를 공제하고, 21km부터는 1km당 38ct를 공제

36) 연방 재무부, 2022.3.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massnahmenpaket-bund-hohe-energiekosten.html>, 검색일자: 2022.4.12.

-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100유로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2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
-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
- 월 9유로의 대중교통 티켓 발행

### 3) 제3차 구호패키지(2022.9.3.)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650억유로 규모의 제3차 구호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37)38)39)40)</sup>

- (연금기여금 전액 공제) 연금기여금의 세금 감면 제도를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실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
  -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약 32억유로, 2024년에는 약 18억유로를 절약
- (소득 관련 지출공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관련 지출 정액공제가 1,230유로로 증가
- (자본수익공제액 인상) 자본수익공제액이 801유로에서 1,000유로로 증가
- (재택근무 소득공제 연장) 재택근무 소득공제가 무기한 연장되며 2023년부터는 연간 최대 1,000유로(현행 600유로)까지 청구 가능
- (최대 3,000유로 면제) 회사가 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사회

37) 연방 재무부, "Schnelle und spürbare Entlastungen in Milliardenhöhe," 2022.9.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9.16.

38) 연방 재무부, "Wichtige Unterstützung: das Entlastungspaket III," 2022.9.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09/Inhalte/Kapitel-2b-Schlaglicht/2b-drittes-entlastungspaket.html>, 검색일자: 2022.9.26.

39) 연방 재무부, "Ergebnis des Koalitionsausschusses vom 3. September 2022," 2022.9.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chlaglichter/Entlastungen/ergebnispapier-des-koalitionsausschusses.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chlaglichter/Entlastungen/ergebnispapier-des-koalitionsausschusses.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2.9.16.

40) 연방정부, "Deutschland steht zusammen," 2022.9.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entlastungen-im-ueberblick>, 검색일자: 2022.9.16.

보장부담금을 최대 3,000유로까지 면제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 증가) 2023년 1월 1일부터 4,260유로로 증가
- (태양광 시스템 개발 장려) 태양광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대한 판매세를 19%에서 면제, 일부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전기 및 에너지 세금 감면(Spitzenausgleich))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되어 9,000개의 기업에 약 17억유로 규모 지원

#### 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보호막(2022.9.29.)

□ 연방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2023년 3월부터 도입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미만인 가정과 중소기업에 전년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기준량의 가격을 kWh당 40센트로 할인 적용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기준량을 kWh당 13센트로 할인하여 공급
-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 12월 일회성 긴급지원에 이어 1월부터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까지 천연가스는 kWh당 12센트, 열에너지는 kWh당 9.5센트의 할인 가격을 적용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2021년 연간 소비량의 70%를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kWh당 7센트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열에너지는 kWh당 7.5센트로 할인
  - (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추가로 80억유로의 특별원조기금 투입

□ 경제안정화기금(WSF: 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재활성화 및 재편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2022년

6월 만료)했던 경제안정화기금을 재활성화 및 재편성하여 사용할 계획

- 연방정부는 2024년까지 2,000억유로를 제공하여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  
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계획
-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2,000억 규모의 차입을 승인할 예정

#### □ EU 에너지 위기 기여금(EU-Energiekrisebeitrag) 도입<sup>41)</sup>

- 지난 9월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내는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산업 기업에 대하여 임시 초과 이윤에  
대한 임시 연대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를 제안<sup>42)</sup>
- 연방정부는 EU 집행위의 요구 사항을 2022년 세법(Jahressteuergesetz 2022)에  
포함했으며 연방 의회는 이를 승인
  -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한 석유, 석탄, 가스, 정유 등의 에너지 기  
업들로부터 초과이익 33%(EU 규정의 최소 비율)를 2022년, 2023년 2년간 징수
  - 연방정부는 이러한 EU 에너지 위기 기여금(초과이윤세)으로 인하여 2022~2023년  
2년 동안 10~30억유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sup>43)</sup>

- 연방정부는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천연가스 판매세를 19%에서 7%로 일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
  - 140억유로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가스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부담을 덜게 됨
  - 기간은 가스 부담금 시행기간과 같음 (2022년 10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1) 연방정부, "Solidaritätsbeitrag für fossile Energieunternehmen," 2022.12.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gesetzesvorhaben/eu-energiekrisebeitrag-2145638>, 검색일자: 2022.12.20.

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9월호,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긴급시장개입 제안 (2022.9.14.)」 참고

43) 연방정부, "Mehrwertsteuer auf Gas wird gesenkt," 2022.8.1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gasumlage-mehrwertsteuer-2075248>, 검색일자: 2022.8.25.

## 5)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패키지(2022.4.8.)

-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부닥쳐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 (단기 유동성 지원) 70억 유로 규모의 독일개발은행(KfW)의 신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저금리 혹은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미 도입되었던 연방 및 주정부의 보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하여 계속
  - (보증 프로그램) 운용자금 및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보증은행과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
  -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 이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단일형(targeted)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크로스 섹터 대기업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
  - (유동성 위기 상황의 에너지 기업 지원) 에너지 판매 기업의 마진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

6) 인플레이션 보상법(2022.11.10.)<sup>44)</sup>

-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상법을 제정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인상으로 과표구간이 높아져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을 방지
    -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기본 공제액)을 2022년

44) 연방 재무부, "Belastungen durch die kalte Progression vermeiden," 2022.10.1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inflationsausgleichsgesetz.html>, 검색일자: 2022.12.26.

9,984유로에서 2023년 10,908유로, 2024년에는 11,604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연간 소득 하한선도 2022년 58,597유로에서 2023년 62,810유로, 2024년 66,761유로로 인상할 계획
- (가족 지원) 소득세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금액 기준 2022년 8,548유로, 2023년 8,952유로, 2024년 9,312유로까지 소득세를 공제할 계획
- 아동수당(Kindergeld)도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아동 한 명당 매달 250유로씩 지급할 계획
- (기본공제액 인상) 연대세가 부분 폐지 되어서 기본공제액이 기존 16,956유로에서 18,130유로로, 부부가 합산할 경우 기존 33,912유로에서 36,260유로로 인상

## 다. 특별기금

### 1) 기후변화기금(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 2022년 7월 22일부터 에너지기후기금(EKF)을 기후변화기금(KTF)으로 전환<sup>45)</sup>
  - 기후변화기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 특별기금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촉진하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금을 제공
  - 건축 부문 연방자금 지원, 수소경제 발전, E-모빌리티 확대, 재생가능 에너지 확장 및 에너지 효율성 촉진에 초점
  -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은 전액 기금에서 보장될 것이며 2026년까지 총 355억유로 이상 규모로 예상

45) 기후변화기금(KTF)으로의 명칭 변경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기금이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라 기후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사용 목적이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함(Das Parlament, “Neuer Name, neue Ziele,” 2022.5.16., [https://www.das-parlament.de/2022/20/wirtschaft\\_und\\_finanzen/895298-895298](https://www.das-parlament.de/2022/20/wirtschaft_und_finanzen/895298-895298), 검색일자: 2022.8.29.)

- (수입) 2023년 KTF는 연방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
  - 약 195억유로의 수입과 약 60억유로의 글로벌 추가 수익, 준비금 등
- (지출) 2023년 프로그램 지출은 2022년 대비 74억유로 증가한 약 354억유로
  - 건축 부문 연방자금 지원(BEG) 169억유로, 충전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E-모빌리티 추가 투자 56억유로, 탈탄소화(22억유로)를 포함한 수소경제 발전 40억유로, 에너지 집약적 기업 구호 26억유로 등에 지출할 계획

〈표 II-10〉 2022-2026년 에너지·기후기금 계획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입	106.819	104.309	91.302	65.97	45.443
탄소배출권 수입	6.893	8.755	7.555	7.227	7.087
연료배출거래 수입	8.670	10.714	13.293	15.683	17.856
연방정부 지원금	5.846	0	0	0	0
글로벌 추가 수익	0	5.951	1.5	1.5	1.5
준비금	85.41	78.888	68.953	41.56	19.0
지출					
프로그램 지출	27.931	35.355	49.742	46.97	45.443
준비금	78.888	68.953	41.56	19.0	0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3*, pp.51~52, 2022.8.

## 2) 연방군 특별기금(Bundeswehr)<sup>46)47)</sup>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독일 연방군에 필요한 장비를 더 빨리 조달하고, 동맹 및 국방력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조치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립

46) 연방 재무부, "Sondervermögen Bundeswehr: Investitionen in unsere Freiheit," 2022.3.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3/2022-03-16-sondervermoegen-bundeswehr.html>, 검색일자: 2022.3.17.

47) 연방 정부, "100 Milliarden Euro für mehr Sicherheit," 2022.3.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ndervermoegen-bundeswehr-2016560>, 검색일자: 2022.3.17.

- 기본법 제87a조를 수정하여 특별기금 설립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
  - 정부는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자체 신용승인 방식으로 설립
    - 이러한 일회성 신용 승인은 기본법의 부채 규정의 한도에서 면제
- 2023년 예산안 기준 약 85억유로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라. 주요 투자 정책

- 2023년 연방 정부의 투자지출은 약 584억유로로 전년도 목표인 515억유로를 초과하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계획 기간 투자지출은 약 520억유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3년 투자지출이 일시적으로 높게 증가한 이유는 63억유로 규모의 IMF RST(IMF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대출과 10억유로 규모의 법정건강보험(GKV)에 대한 건강기금 대출이 포함되었기 때문
  - 투자지출은 교통 인프라, 주택 및 건설, 교육, 연구, 디지털화, 기후 보호, 국제협력 등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기후변화기금 및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 등의 연방정부 특별기금을 투자에 활용
    - (교통) 독일 연방정부는 도로(84억유로), 철도(93억유로), 수로(14억유로)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자금(10억유로) 등 교통 인프라에 가장 많은 투자 재원을 배분
    - (교육·연구) 대학 내 연구 건물, 대규모 장비 및 고성능 컴퓨터 자금 지원(3억 1,675만유로), 우수대학육성전략(4억유로), 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sup>48)</sup>(19억 4천유로) 등
    - (주택) 사회주택 보조금(10억유로), 기후 친화적 사회주택을 위한 프로그램(10억 유로), 도시개발 대책(11억유로) 등
    - (환경보호)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

48) 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ärken(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은 2019년 연구와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적절한 학업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패키지를 승인

체 소관이므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일부에 불과

- 방사성 폐기물 관련 부지선정(7억 2,900만유로),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소(4억 3,100만유로)
- (지역경제발전) “지역경제구조개선(GRW: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공동 과제의 하나로 6억 4,700만유로 투자

### Ⅲ. 일 본

□ 2023회계연도: 2023.4.1. ~ 2024.3.31.

□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22.5.17.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발표
- 2022.7.29. 2023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概算要求)<sup>49)</sup> 기준 발표
- 2022.9.5.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및 요망(要望)<sup>50)</sup>액 발표
- 2022.11.8.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발표
- 2022.12.23. 2023회계연도 예산 정부안 발표

□ 출처

일자	발표 내용
2022. 05. 17.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발표 令和4年度補正予算案
2022. 07. 29.	2023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概算要求) 기준 발표 令和5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2. 09. 05.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및 요망액 발표 令和4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等
2022. 10. 28.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2022. 11. 08.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발표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案
2022. 12. 23.	2023회계연도 예산 정부안 발표 令和5年度予算政府案

49)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본 행정기관인 각 부(府)·성(省)이 내년도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말함. 매년 8월 말에 기한이나, 2022년 예산안은 COVID-19 영향으로 1개월 연장하여 2021년 9월 말에 마감함

50) 일반회계 세출에서 이자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후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 ‘연금 의료 등’, ‘재량적 경비’, ‘의무적 경비’ 네 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 - 유지’, ‘연금·의료 등 - 자연 증가분만 반영’, ‘재량적 경비 - 일정 비율(10%) 삭감’, ‘의무적 경비-재량적 경비 이전 제외’ 조치를 통해 요구(要求)액 기준을 설정함. 요망(要望)금액은 ‘재량적 경비’ 삭감액(전년도 당초 예산액 10%)의 세 배 한도와 ‘의무적 경비’에서 재량적 경비로의 전환액의 3배 범위에서 ‘새로운 일분을 위한 우선 과제 추진’(특별프레임)과 관련된 경우 요망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참의원(상원), 意味合いが変わる概算要求基準, 経済のプリズム, 180호, 2019년 9월, 검색일자: 2022.3.24., \_\_\_\_\_(상원),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 2019년 8월,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2.3.24.)

□ 일본 경제 현황<sup>51)</sup>

- 환율: 100엔 = 약 0.761달러 (2022년도)<sup>52)</sup>
- 경제 규모: 2022년 경상 GDP 4조 3,006억 달러(2022년 실질 GDP 성장률 1.7%)
- GDP 대비 수출입 규모의 비율(명목): 2021년 기준 37.4%<sup>53)</sup>
- 인구: 1억 2,517만명 (2022년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검색일자: 2023.1.10.

5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October/select-countries?grp=119&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Major-advanced-economies-\(G7\)](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October/select-countries?grp=119&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Major-advanced-economies-(G7)), 검색일자: 2023.1.10.

52) OECD stat, Exchange rates (USD monthly average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3.1.10.

53)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자: 2023.1.10.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동향	KIPF 발간 참고 자료 <sup>54)</sup>
2022. 05. 17.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2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2. 06. 07.	내각부, '경제 재정의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 각의 결정	
2022. 07. 29.	2023회계연도 예산안 개산요구 기본방침 발표	202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2. 07. 29.	재무성,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	
2022. 09. 05.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개산요구 및 요망액 발표	
2022. 10. 28.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	
2022. 11. 08.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22. 12. 23.	2023회계연도 정부예산안 발표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list.do?serialNo=0>

## [요 약]

##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을 통해 민간수요가 주도하는 성장이 전망되며, 2023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5%, 명목 GDP 성장률은 2.1%로 전망
- (재정수지) 2023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도의 13조엔 대비 17.5% 감소한 10.8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23년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068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3.2%p 감소한 31.1%로 전망

## □ 예산기조

- 2023년 예산은 고물가를 극복하면서 경제재생 실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예산안 내용

- (세입) 2023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3% 증가한 114조 3,812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 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4% 증가한 69조 4,40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107조 5,964억엔 대비 6.3% 증가한 114조 3,812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72조 7,317억엔으로 방위관계비가 대폭 증가

##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거래 적정화 및 가격 전가 대책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등 중소기업 지원, 'GX경제이행채' 발행 및 민간 GX 투자 지원 제도 창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 시행
- (사회보장) 약가 개정, 육아 지원 정책, 기초생보 기준 검토 등 시행 예정
- (방위)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이 시행되는 첫 번째 해로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능력,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시설 정비 등을 중심으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sup>55)</sup>

- (총평) 고물가를 극복하면서 민관(官民)이 연계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민간 수요가 주도하는 성장이 전망되며, 해외 경기 침체, 공급 제약, 금융자본시장 변동 등 하방위험에 주의할 필요
- (성장률) 2023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5%, 명목 GDP 성장률은 2.1%로 전망
  - 세계경제의 둔화가 전망되나,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람에 대한 투자, 민관 연계 투자 촉진 등을 통한 민간수요 주도 성장이 전망
    - (민간최종소비지출) 코로나19 위기 회복, 각종 정책 효과, 고용·소득환경 개선 등에 의해 전년 대비 약 2.2% 증가
    - (민간주택투자) 종합 경제 대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지원 정책 등 각종 정책 효과를 통해 전년 대비 약 1.1% 증가
    - (민간기업설비투자) 민관 제휴 투자를 비롯한 종합 경제대책을 통해 민간 투자가 촉진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0% 증가
    - (정부지출)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코로나19 관련 대책 경비의 감소 등에 의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공적 수요 기여도는 전년 대비 0.5% 감소 전망)
    - (해외수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라 감소할 전망(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외수기여도는 전년 대비 0.1% 감소 전망)
- (노동·고용) 경제 회복과 고용환경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3년 고용자수는 전년 대비 0.2%(6,056만명→6,067만명) 증가하고, 완전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55) 일본 내각부, 「2023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令和5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22. 12.22.,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mitoshi.html>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2.12.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

2.4%로 전망됨

- (광공업 생산) 내수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3% 증가 전망
- (물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전망되나, 종합 경제대책에 의한 전기·가스 요금, 연료유(燃料油) 가격 억제 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3%p 감소한 1.7%로 전망
  - GDP디플레이터는 내수 확대와 함께 전년 대비 0.6% 상승 전망
- (국제수지)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나, 소득수지<sup>56)</sup> 흑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약 1.3%)

〈표 Ⅲ-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21		2022		2023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조엔)	550.5	560.2	571.9	2.4	2.5	1.8	1.7	2.1	1.5
민간최종소비지출	296.2	312.9	323.0	2.7	1.5	5.6	2.8	3.2	2.2
민간주택투자	21.1	21.3	21.7	6.3	-1.1	0.9	-4.0	1.9	1.1
민간기업설비투자	90.1	97.5	103.5	4.7	2.1	8.2	4.3	6.2	5.0
민간재고변동(기여도) <sup>1)</sup>	1.1	1.9	1.8	(0.4)	(0.3)	(0.1)	(0.1)	(-0.0)	(0.0)
재화·서비스 수출	103.6	124.2	130.0	22.8	12.3	19.9	4.7	4.7	2.4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110.4	148.3	156.4	30.1	7.1	34.4	6.9	5.4	2.5
내수기여도	/			3.6	1.8	4.9	2.3	2.5	1.6
민간수요기여도				2.8	1.4	4.5	2.3	2.9	2.1
공적수요기여도				0.8	0.4	0.4	-0.0	-0.4	-0.5
외수기여도				-1.2	0.8	-3.2	-0.5	-0.4	-0.1
국민총소득(GNI)	579.8	595.0	609.9	4.1	2.2	2.6	0.6	2.5	1.8

56)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고, 소득수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국내 소득의 수령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으로의 소득 지급의 차액으로 임금, 투자소득(이자, 배당금) 등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의미(일본 경제산업성, 我が国における所得収支の動向(일본의 소득수지 동향), 2013, p.2, [https://www.meti.go.jp/report/tshaku2013/2013honbun\\_p/pdf/2013\\_03-03-03.pdf](https://www.meti.go.jp/report/tshaku2013/2013honbun_p/pdf/2013_03-03-03.pdf), 검색일자: 2022.4.15.)

〈표 III-1〉의 계속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21		2022		2023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노동·고용									
노동력인구	6,897	6,915	6,920		-0.1		0.3		0.1
취업자수	6,706	6,738	6,753		0.1		0.5		0.2
고용자수	6,013	6,056	6,067		0.2		0.7		0.2
완전실업률 (%)	2.8	2.5	2.4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증감률)	5.8	4.0	2.3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변화율)	7.1	8.2	1.4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1	3.0	1.7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1	0.0	0.6						
국제수지 (조엔)									
무역·서비스수지	-6.5	-23.7	-28.1						
무역수지	-1.6	-19.6	-23.3						
수출	85.6	101.6	105.4		25.2		18.7		3.7
수입	87.2	121.4	128.7		35.0		39.2		6.1
경상수지	20.3	8.3	7.3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	3.7	1.5	1.3						

주: 1) (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자료: 일본 내각부, 「令和5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p.1, 2022.12.22.

나. 재정 전망<sup>57)</sup>

□ (재정수지) 2023년도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5% 감소한 10.8조엔을 나타낼 전망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조세수입+기타수입)-(세출총액-채무상환비-이자지급비)로 재정통계 국제기준인 국민계정통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기초재정수지와는 다름

○ (세입) 2023년도 국채발행 수입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14조 3,812억엔이며, 조세 및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8조 7,582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4조 3,812억엔(GDP 대비 20.0%)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89.5조엔(GDP 대비 15.7%)으로 전망

\* 채무상환비와 이자지급비로 구성

○ (국채) 2023년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3.2%p 감소한 31.1%로 전망

□ (국가채무) 2023년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068조엔을 나타낼 전망

○ GDP 대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한 186.7%로 전망되며, 지방채 등을 포함할 경우 전년과 동일한 224% 규모로 전망

57) 일본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5年度予算政府案)」, 2022.1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4.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4.pdf).

\_\_\_\_\_,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2.12.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

〈표 III-2〉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sup>1)</sup>

(단위: 조엔,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sup>8)</sup>	FY2020 회계연도 <sup>8)</sup>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정부안)
<b>일반회계 세출</b>							
일반세출 <sup>2)</sup>	58.4	58.9	62.0	63.5	66.9	67.4	72.7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 <sup>3)</sup>	74.3	74.7	78.3	79.7	83.4	83.7	89.5
GDP 대비 % <sup>4)</sup>	13.4	13.4	14.1	14.8	15.1	14.9	15.7
일반회계 세출총액	97.5	97.7	101.5	102.7	106.6	107.6	114.4
GDP 대비 %	17.5	17.6	18.2	19.1	19.4	19.2	20.0
<b>일반회계 세입</b>							
조세	57.7	59.1	62.5	63.5	57.4	65.2	69.4
GDP 대비 %	10.4	10.6	11.2	11.8	10.4	11.6	12.1
기타수입	5.37	4.94	6.30	6.59	5.56	5.44	9.32
조세 + 기타수입	63.1	64.0	68.8	70.1	63.0	70.7	78.8
GDP 대비 %	11.4	11.5	12.4	13.0	11.4	12.6	13.8
국채발행 수입	34.4	33.7	32.7	32.6	43.6	36.9	35.6
세입총액	97.5	97.7	101.5	102.7	106.6	107.6	114.4
<b>국채잔고<sup>5)</sup></b>							
GDP 대비 %	153.5	157.0	159.2	176.1	180.1	186.1	186.7
<b>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sup>5)</sup></b>							
GDP 대비 %	194	197	199	217	219	224	224
기초재정수지 <sup>6)</sup>	-11.2	-10.7	-9.5	-9.6	-20.4	-13.0	-10.8
국채의존도 <sup>7)</sup>	35.3	34.5	32.2	31.7	40.9	34.3	31.1

주: 1) 당초 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이자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GDP는 2021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2~2023회계연도는 정부 전망치를 사용

5) 국채잔고는 2021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2회계연도는 2022회계연도 제2차 추경 후 예산, 2023회계연도는 정부안에 근거한 수치

6)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조세 +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

7)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 세출총액

8) 2019~2020회계연도의 수치는 임시·특별조치 관련 수치를 포함

자료: 일본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5年度予算政府案)」, 2022.12., p.6, pp.9~10

## 2 예산 기초

### □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2.12.2.)<sup>58)</sup>

- 2023년 예산은 고물가를 극복하면서 경제재생 실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적 투자,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GX·DX 등 성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내실화를 포함한 포용 사회 실현 등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sup>59)</sup> 가속
  -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sup>60)</sup>에 제시된 ‘동 기본방침과 2021년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경제·재정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에 의거하여 신경제·재정 재생 계획의 개혁 공정표를 책정하여 증거기반정책수립(EBPM<sup>61)</sup>),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시행

58) 일본 내각부, 「令和5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2.12.2.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2/r5\\_yosanhensei.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2/r5_yosanhensei.pdf), 검색일자: 2023.1.13.

59) ① 성장전략, ② 분배전략, ③ 포용적 사회 실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성장 전략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등 지방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경제안보 정책이 있으며, 분배 전략으로는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 인적 투자 강화, 차세대 중산층의 유지가 있고,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 및 여성 참여 증대, 고독·고립 대책,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음

60) 2022년 6월 7일 각의 결정되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중장기경제·재정운영 및 2023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 상반기 KIPF 재정동향」 및 원문 참고(<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10>), 검색일자: 2023.2.1.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2/decision0607.html>, 검색일자: 2022.12.27.

61) 증거기반정책수립(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 2023회계연도 예산의 주요 내용 (2022.12.23.)<sup>62)</sup>

- 2023회계연도 예산은 역사 전환기를 앞두고 일본이 직면한 국내외 중요 과제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 국내외 중요 과제로 안전보장·외교, 지방·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어린이정책, 녹색 전환을 중점으로 대응
  - (① 안보·외교) 현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수립
    - (방위)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3조엔 방위력 정비 계획을 실행하고, 방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
    - (외교) 2023년 5월 개최 예정인 G7 히로시마 정상회의<sup>63)</sup> 및 2023년 일·ASEAN 우호 협력 50주년 등을 고려하여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sup>64)</sup>를 위한 예산 확보\*
      - \* 일본 외무성 예산(디지털청 예산 합산)은 7,560억엔으로 전년 대비 485억엔 증가(2022년 추경예산 합산 시 1조 233억엔(전년 대비 1,694억엔 증가))
  - (② 지방·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sup>65)</sup>)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리먼 쇼크 이후 최고치인 18.4조엔 확보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종합전략’에 근거하여 동 교부금(2023년 1천억엔 +2022년 추경 8백억엔)을 통해 지자체 디지털 구현 가속화, 디지털 활용을 통한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 창생에 기여하는 대처 등 지원
  - (③ 어린이 정책) 내년 4월 ‘어린이 가정청’을 창설하여 어린이·육아지원 강화

62)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2.12.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1.pdf), 검색일자: 2023.2.1.

63) Hiroshima summit, G7広島サミット, <https://www.pref.hiroshima.lg.jp/site/hiroshima-summit/>, 검색일자: 2022.12.26.

64) 2021년 12월 기시다 총리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상으로 내세우며 현실적인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 올해 6월 평화를 위한 5개 비전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등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 ②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미일 동맹국과 안보 협력 강화, ③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현실적인 대처 추진, ④ 유엔 안보리 개혁을 비롯한 유엔의 기능 강화, ⑤ 경제 안전 보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계 강화)

65)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개성을 살린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에서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 주요 세부 정책으로 ① 지자체 디지털 인프라 통일·표준화, ② 디지털 인재 육성, ③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과제 해결·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④ 연령·성별·지리적인 제약 등과 관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활용 지원으로 구성

- 출산 육아 일시금을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역대 최고 인상폭)
-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동반 형태의 상담 실행(반주(伴走)형 상담)과 임신·출생 신고를 한 임신부·육아 가정에 함께 10만엔 상당의 경제지원 패키지 유지
- (④ 녹색 전환) 탄소가격제<sup>66)</sup>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예상 재원을 기반으로 「GX 경제이행채<sup>67)</sup>」를 발행하여 민간 GX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이나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등 지원(에너지특별회계 0.5조엔, 2022년 추경 선행 실시분 1.1조엔 합산 시 1.6조엔 규모 지원)
- (탄력적인 예산)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를 근거로 세출 개혁을 지속해서 실행
  - 사회보장관계비 약 4,100억엔 증가(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 비사회보장관계비 약 47,417억엔 증가
    - 방위력 강화 대응(45,919억엔) 제외 시 비사회보장관계비 약 1,500억엔 증가
    - 방위관계비를 증액하고 경제·물가동향 등을 토대로 유연한 대응을 하여 지금까지의 세출 개혁 대응을 실질적으로 유지
  - 신규 국채 발행액 감액(2022회계연도 당초 예산 36.9조엔 → 2023회계연도 35.6조엔)

66) 탄소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탄소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

67) 일본은 2050년 국내 실질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민연계 150조엔 이상의 탈탄소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투자분 20조엔 조달을 위해 통상 국채보다 상환 종료 기간이 짧은 GX 경제이행채 발행. GX 경제이행채 내년 발행 예정(배출량거래제도는 2026년부터, 부과금제도 도입은 2028년부터 시행 계획)  
(경제산업성, GXを実現するための政策イニシアティブの具体化について, 2022.11.24.,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angyo\\_gijutsu/green\\_transformation/pdf/010\\_01\\_00.pdf](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angyo_gijutsu/green_transformation/pdf/010_01_00.pdf), 검색일자: 2022.12.27.  
노무라종합연구소, 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をGX経済移行債の償還財源に: 負担先送りと脱炭素の実効性に課題, 2022.12.1.,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2/fis/kiuchi/1201\\_2](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2/fis/kiuchi/1201_2), 검색일자: 2022.12.27.)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sup>68)</sup>

- 2023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3% 증가한 114조 3,812억엔으로 전망
  - (조세 및 인지수입) 전년 당초 예산 65조 2,350억엔 대비 6.4% 증가한 69조 4,40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은 12.1%로 전망
    - 조세 및 인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20.4%)을 차지하는 소비세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23조 3,840억엔 규모
    - 전년 당초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세금은 국제관광여객세(122.2%)이며, 이어서 관세(36.0%), 톤세(11.1%), 법인세(9.5%), 소비세(8.4%)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전년 당초 예산 대비 휘발유세는 3.8%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증량세는 1.8% 감소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5조 4,354억엔 대비 71.4% 증가한 9조 3,182억엔으로 전망
    - 기타 수입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4조 5,919억엔을 편성함에 따라 대폭 증가
      -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이월금 약 3.7조엔,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인한 적립금 또는 기금 등 불용액 국고 반납 약 0.4조엔, 국유 재산 매각 수입 약 0.4조엔 등을 통해 확보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당초 예산 36조 9,260억엔 대비 3.5% 감소한 35조 6,230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총액 대비 국채발행액을 나타내

68)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3.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3.pdf), 검색일자: 2023.2.6.  
\_\_\_\_\_, 「令和5年度予算フレーム」, 2022.12.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2.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02.pdf), 검색일자: 2023.2.6.  
\_\_\_\_\_, 「令和5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24.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seifuan2023/24.pdf), 검색일자: 2023.2.6.

는 국채의존도는 31.1%로 전망

- 전년 당초 예산 대비 건설공채 발행액은 4.9% 증가한 6조 5,580억엔 규모, 특례 공채 발행액은 5.2% 감소한 29조 650억엔 규모로 전망

〈표 Ⅲ-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분		2022회계연도 당초(A) <sup>1)</sup>	2023회계연도 정부안(B)	증감액 (B-A)	증감율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652,350	694,400	42,050	6.4
	2. 기타 수입	54,354	93,182	38,828	71.4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	45,919	45,919	100.0
	3. 공채금(세출과 세수 등과의 차이)	369,260	356,230	-13,030	-3.5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 제외)	156,325	163,895	7,569	4.8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2,472	84,723	2,250	2.7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기초재정수지적자) 상당분	130,462	107,613	-22,850	-17.5
<b>합계</b>		1,075,964	1,143,812	67,848	6.3
세 출	1. 일반세출	673,746	727,317	53,571	8.0
	사회보장관계비	362,735	368,889	6,154	1.7
	사회보장관계비 외	261,011	308,428	47,417	18.2
	방위관계비(아래 편입 제외)	53,687	67,880	14,192	26.4
	방위력강화자금(가칭) <sup>2)</sup> 편입	-	33,806	33,806	100.0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50,000	40,000	-10,000	-20.0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	10,000	10,000	100.0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8,825	163,992	5,166	3.3
	3. 국채비	243,393	252,503	9,111	3.7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56,325	163,895	7,569	4.8
	이자지급비용	82,472	84,723	2,250	2.7
<b>합계</b>		1,075,964	1,143,812	67,848	6.3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 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1) 2022회계연도 예산은 2023회계연도 예산과 비교 대조를 위해 재계산

2) 방위력강화자금(가칭)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라 창설 예정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フレーム」, 2022.12.23.

〈표 Ⅲ-4〉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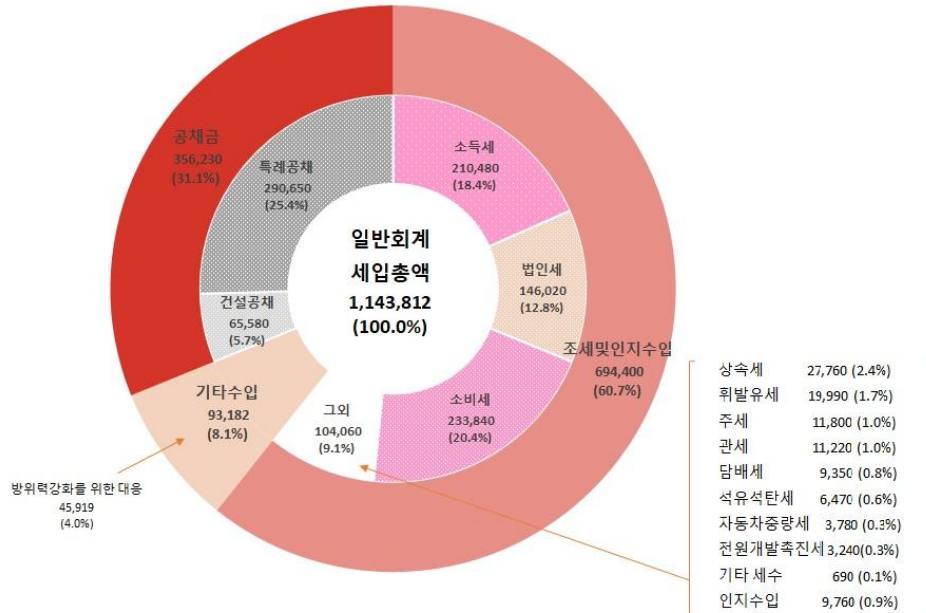
(단위: 억엔, %)

세목 (일반회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전년 대비			
	(당초)예산	추경 후	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추경후 예산 대비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70,840	184,950	175,150	4,310	2.5	-9,800	-5.3
신고소득세	32,980	35,240	35,330	2,350	7.1	90	0.3
<b>(소득세 계)</b>	<b>(203,820)</b>	<b>(220,190)</b>	<b>(210,480)</b>	<b>(6,660)</b>	<b>(3.3)</b>	<b>(-9,710)</b>	<b>(-4.4)</b>
법인세	133,360	137,870	146,020	12,660	9.5	8,150	5.9
상속세	26,190	28,390	27,760	1,570	6.0	-630	-2.2
소비세	215,730	221,610	233,840	18,110	8.4	12,230	5.5
주세	11,280	11,280	11,800	520	4.6	520	4.6
담배세	9,340	9,340	9,350	10	0.1	10	0.1
휘발유세	20,790	20,790	19,990	-800	-3.8	-800	-3.8
석유가스세	50	50	5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340	340	340	0	0.0	0	0.0
석유석탄세	6,600	6,600	6,470	-130	-2.0	-130	-2.0
전원개발촉진세	3,130	3,130	3,240	110	3.5	110	3.5
자동차중량세	3,850	3,850	3,780	-70	-1.8	-70	-1.8
국제관광여객세	90	90	200	110	122.2	110	122.2
관세	8,250	10,530	11,220	2,970	36.0	690	6.6
톤세 <sup>1)</sup>	90	90	100	10	11.1	10	11.1
인지수입	9,440	9,440	9,760	320	3.4	320	3.4
<b>합 계</b>	<b>652,350</b>	<b>683,590</b>	<b>694,400</b>	<b>42,050</b>	<b>6.4</b>	<b>10,810</b>	<b>1.6</b>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22.12.23.

[그림 Ⅲ-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단위: 억엔, %)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p.12, 2022.12.23.

### 나. 세출<sup>69)</sup>

□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107조 5,964억엔 대비 6.3% 증가한 114조 3,812억엔으로 편성

- (일반세출) 전년 대비 8.0% 증가한 72조 7,317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방위관계비가 대폭 증가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가장 큰 비중(32.3%)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6,154억엔(1.7%) 증가한 36조 8,889억엔 규모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8.9%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4조 7,999억엔(89.4%) 증가한 10조 1,686억엔으로, 일반회계 세출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69)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2.12.23.  
 \_\_\_\_\_, 「令和5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22.12.23.  
 \_\_\_\_\_, 「特別会計について」, 2022.12.23.

- 방위관계비 중 3조 3,806억엔은 해외수입 등을 방위력 정비에 계획적·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될 예정인 ‘방위력강화자금(가칭)’에 편입될 예정
- 2023년부터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sup>70)</sup>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방위력강화자금(가칭)’에 편입되는 자금 외의 방위관계비도 전년 대비 26.4% 증가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6%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6조 600억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과 비슷한 규모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257억엔(0.5%) 증가한 5조 4,158억엔으로 편성
  -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154억엔(1.3%) 증가한 1조 3,942억엔 규모
- (예비비)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이며,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4조엔이 편성,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 상대응 예비비 1조엔이 신규 편성
- (기타) 연금관계비(-20.6%), 중소기업대책비(-0.5%), 에너지대책비(-2.5%), 식품안정공급관계비(-0.4%), 기타경비(-0.6%) 등이 전년 대비 감액편성
- (국채비) 전년 대비 3.7% 증가한 25조 2,503억엔으로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당초 예산 15조 8,825억엔 대비 0.4% 감소한 16조 3,992억엔 편성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41.9조엔으로 회계 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197.3조엔 규모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sup>71)</sup>(82조엔), 사회보장급부비<sup>72)</sup>(75.4조엔), 재정용자 자금으로 편입(재투채<sup>73)</sup>에 의한 자금조달(12.0조엔), 지방교부세교부금(19.9

70)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및 각의 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 출처: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12.16.

71)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72) 연금이나 건강보험 급여비 등 법률에 근거하는 사회보장 자체에 드는 비용

73) 財投債, 재정 용자 자금의 운용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 재투채 발행 수입은 ‘재정용자특별회계 재정용자자금계정’의 세입의 일부가 되며, 세출로 재정용자 자금으로 이월됨. 발행한도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상품성 또한 일반 국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재정용자 자금의 대부 재원이 되는

조엔) 등에 사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8.1조엔

-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0.7조엔을 제외하면 총 7.4조엔으로 이 중 4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 대책에 사용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편입 1.6조엔(특정재원의 일반회계 경유 편입을 포함)과 그 외 세입(보험료 등)으로 조달

〈표 Ⅲ-5〉 2023회계연도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2022회계연도 당초 <sup>1)</sup>	2023회계연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A)	(B)	(B-A)	(%)
<b>일반세출<sup>2)</sup></b>	673,746	727,317	53,571	8.0
사회보장관계비	362,735	368,889	6,154	1.7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901	54,158	257	0.5
(과학기술진흥비)	13,787	13,942	154	1.1
연금관계비	1,221	970	-252	-20.6
방위관계비	53,687	101,686	47,999	89.4
아래 편입분 제외	53,687	67,880	14,192	26.4
방위력강화자금(가칭) <sup>3)</sup> 편입	-	33,806	33,806	-
공공사업관계비	60,574	60,600	26	0.0
경제협력비	5,105	5,114	8	0.2
ODA	5,612	5,709	98	1.7
중소기업대책비	1,713	1,704	-9	-0.5
에너지대책비	8,756	8,540	-217	-2.5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2,699	12,654	-46	-0.4
기타 경비	58,354	58,004	-350	-0.6
예비비	5,000	5,000	-	-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50,000	40,000	-10,000	-20.0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	10,000	10,000	-
<b>국채비</b>	243,393	252,503	9,111	3.7
<b>지방교부세교부금</b>	158,825	163,992	5,166	3.3
<b>합계<sup>3)</sup></b>	1,075,964	1,143,812	67,848	6.3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2022회계연도 예산은 2023회계연도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조합함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방위력강화자금(가칭)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라 창설 예정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p.5 일부 발췌, 2022.12.23.

동시에 상환이 재정용자자금의 대출 회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이 되고, 상환이 조세 등으로 충당되는 일반 국채와는 다름. 또한 재투자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림 III-2] 일반회계 주요경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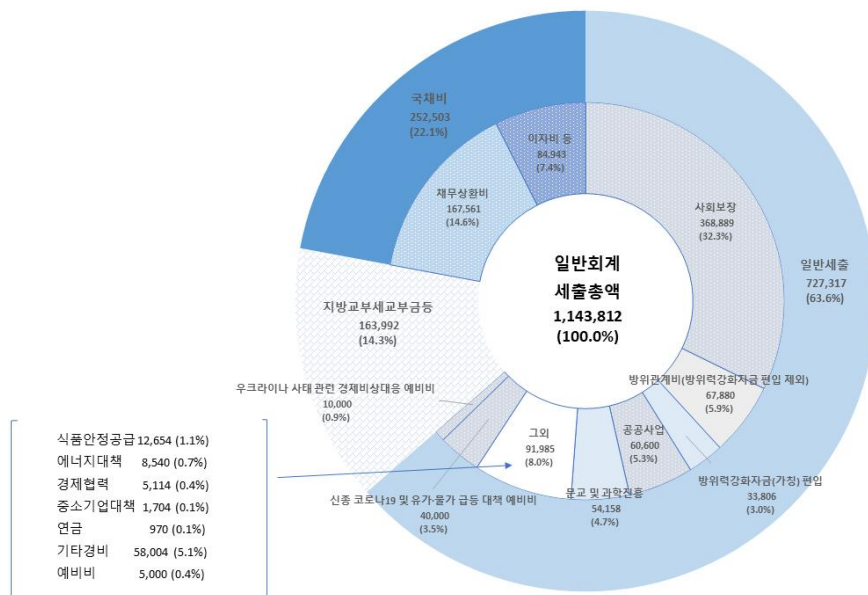
(단위: 조엔)



주: 2010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당초 예산, 2023년은 정부안 수치를 사용  
 자료: 일본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5年度予算政府案)」, p.8 일부 발취, 2022.12.

[그림 III-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단위: 억엔, %)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p.12, 2022.12.23.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성장

- (중소기업) 거래 적정화 및 가격전가 대책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사업재생·사업승계 지원에 주요 예산을 편성
  - 중소기업대책비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9억엔 감소한 1,704억엔 규모로, 중소기업의 대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신용보증 관련 예산을 감액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저금리용자, 신용보증협회의 채무 보증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예산 감소(경제산업성 예산 226.1억엔→211.6억엔, 재무성 예산 606.1억엔→604.1억엔)
  - 거래 적정화 대책으로 하청사업자의 가격 교섭·전가의 실태 등을 조사하는 하청 G맨<sup>74)</sup>을 증원(248명→300명)하고, 고물가 시대에 적절한 가격전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체제 강화
  -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사업 확충(104.9억엔→132.9억엔)
- (에너지·환경) 탄소가격제의 미래 재원을 기반으로 한 ‘GX 경제이행채’ 발행 및 민간 GX 투자 지원 제도 창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등
  -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의 구체화를 통한 미래 재원을 기반으로 ‘GX 경제이행채(가칭)’를 발행하여 민간 GX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 창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4,564억엔) 및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336억엔)을 지원, 차세대 혁신원자로 연구개발(123억엔)에 대한 신규 지원

74) 2017년 1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하청 G맨(거래조사원)을 배치해 하청 등 중소기업에 방문하여 비밀유지를 전제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국가나 업계가 정하는 규칙에 반영하는 등 적정 거래를 위해 노력. 출처: 일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chusho.meti.go.jp/keiei/torihiki/Gmenhoumon.htm>, 검색일자: 2023.3.6.

- (농림·수산)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과 적절한 비축을 조합하면서 논  
의 전지화를 지원<sup>75)</sup>, 사료용 쌀의 일반품종 지원 단가 단계적 인하 등 시행
  -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과 적절한 비축을 조합하면서 논·의 전지화  
지원을 통해 채소, 보리, 대두 등 발작물 생산을 촉진하고 해외에 의존하는 비료·사  
료 등의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
  - 사료용 쌀에 대해 주식용 쌀과의 소득 차이로 경작 면적·생산량이 2030년 목표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2024년산부터 일반품종의 지  
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재검토를 실시
- (교육·과학기술)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로 양자·AI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 첨  
단기술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기초연구·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교과 담임제’  
추진, 학생 상담 체제 정비 등 시행
  - (과학기술) 양자·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연구개발 법인의 연구기  
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거점 형성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청년 연구자  
지원, 기초연구 강화 및 연구 활동의 국제화 촉진 정책 강화
  - (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의 이과 관련 교과에 대해 ‘교과 담임제’ 추진, 외부 인재 활  
용 등에 의해 교원이 수업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괴롭힘·등교 거부 등의 어  
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 체제 정비

## 나. 외교·방위 및 사회보장

- (외교·방위)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sup>76)</sup>의 책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수준을 크

75) 전지화(畑地化) 지원: 논을 전지화하여 고수의 작물(야채, 과수 화훼 등) 및 발작물(보리, 콩, 사료작물(목초 등), 알곡용 옥수수, 메밀 등)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j/syouan/keikaku/soukatu/hatatika\\_youbou.html](https://www.maff.go.jp/j/syouan/keikaku/soukatu/hatatika_youbou.html), 검색일자: 2023.2.13.

76)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의 안보 관련 전략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및 각의 결정을 통해 책정  
 •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 안보에 관한 최상위 정책 문서. 외교 방위와 더불어 경제안보, 기술, 사이버, 정보 등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관련된 정책에 전략적 지침을 부여(약 10년간)  
 • 국가방위전략: 방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과 수단을 제시  
 • 방위력정비계획: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 수준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  
 출처: 일본 방위성, 「国家防衛戦略の概要」, 2022.12.

게 상회하는 6.8조 규모의 방위관계비를 편성하였으며,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응하여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예정

- (방위)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이 시행되는 첫 번째 해로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능력,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시설 정비 등을 중심으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외교)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및 일본 ASEAN 우호협력 50주년에 대응하고, 기동적이고 강력한 신세대 리얼리즘 외교를 전개할 필요
    - 엔저·고물가에 대응하여 ODA 및 재외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상적인 외교활동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증액하고,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2023년 외무성 예산은 전년 당초 대비 485억엔(6.9%) 증가한 7,560억엔(디지털청 관리분 포함))
  - (해상보안) 「해상보안능력 강화 방침」<sup>77)</sup>에 근거하여 무인 항공기 등 신기술 활용을 포함한 해상보안청의 체제 및 운용 강화를 위해 예산·정원 대폭 확대(해상보안능력 강화 예산 2,231억엔→2,431억엔)
  - (경찰)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원활한 개최와 안전 확보를 도모하면서, 테러 및 불법 행위 등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경계에 주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추진
- (사회보장) 2023년도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약 6,200억엔 증가한 36.9조엔으로 사회보장관계비의 실질적인 증가를 고령화에 의한 증가분만 허용하도록 한 방침을 달성하였으며, 약가 개정, 육아 지원 정책, 기초생보 기준 검토 등 시행 예정
- (약가 개정) 약가 개정 실시로 인한 시세 하락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약제비 3,100억엔(국비 722억엔) 절감)하면서 혁신 추진 및 원재료비 급등을 고려
  - (출산·육아 지원) 출산·육아 일시금을 50만엔으로 인상(+8만엔), 임신부터 출산·육

77) 2016년 ‘해상 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해상보안능력 강화 방침(海上保安能力強化に関する方針)」에 근거하여 1) 센카쿠 영해 경비 체제 강화 및 대규모 사안의 동시 발생에 대응 가능한 체제 정비, 2) 해양 감시 체제 강화 관계 각료회의, 3) 원전 등 테러 대처·중요 사안 대응 체제 강화, 4) 해양 조사 체제 강화, 5) 기반정비 등 5가지를 바탕으로 한 해상 보안 체제 강화를 추진. 출처: 일본 해상보안청, 「海上保安能力強化について」, 2022.12.16.

아까지 일관된 상담 지원과 임신·출생 신고를 한 임신부·육아 가정에 함께 10만엔 상당의 경제지원 패키지 유지

- (기초생보 기준 검토) 생활부조기준<sup>78)</sup>에 대해 후생노동성 심의회의 검증 및 사회 경제 정세를 반영하여 2023~2024년에 특례적인 가산(월액 1,000엔/명)을 실시하고, 가산 후 현행 지원 금액보다 지원이 감소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 금액을 보장(재정 소요 2023년도 약 60억엔, 2024년도 약 130억엔)

#### 다. 지역 발전 등

□ (공공사업)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26억엔 증가한 6조 600억엔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으며, 효율적인 노후화 대책, 유역 치수 대책, 홍수 예측 기술 개발 등 기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를 추진

-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노후화 대책, 하드·소프트웨어를 종합한 유역 치수 대책,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 기술 개발 가속 등 기술 지원을 통해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를 추진
-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에 ‘지역대중교통 재구축사업’을 창설하여 철도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추진
- 신기술 활용, 지역 대중교통 재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에 교부금을 중점적으로 배분

□ (디지털·지방창생<sup>79)</sup>) 정부 공통 클라우드 서비스<sup>80)</sup> 정비 등 디지털 사회 실현 가속화,

78) 일본의 기초생활보장제도(生活保護制度)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간병)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의 8종류가 있으며, 생활부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식비, 피복비, 광열비 등)을 지원. 지원 금액은 1) 식비 등의 개인적 비용, 2) 광열·수도 비용 등 세대 공통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특정 가구에는 가산을 실시.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seikatuohogo/index.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seikatuohogo/index.html), 검색일자: 2023.2.14.

79)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문제와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검색일자: 2023.2.14.

80) 정부 공통 클라우드 서비스(거버먼트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속, 유연, 안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교부금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디지털을 활용한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원, 지방 디지털 기반 정비 등 시행 예정

- 정부 공통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보 시스템 정비를 시행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종합전략」<sup>81)</sup>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교부금(2023년도 예산 1,000억엔+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 800억엔)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디지털을 활용한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을 지원
  - 또한 광섬유, 5G 기지국 등 지방의 디지털 기반 정비를 시행
-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전년 대비 0.3조엔 증가한 18.4조엔이며, 임시재정대책채<sup>82)</sup> 발행을 감축하고 계획을 상회하는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일반재원 총액을 적절히 확보
  - 국가·지방의 세수 증가에 따라 임시재정대책채 발행을 감축(-0.8조엔)하고 계획을 상회하는 교부세 특별회계차입금을 상환(1.3조엔)
- (부흥) 「제2기 부흥·창생 기간」<sup>83)</sup>의 세 번째 해로 부흥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5,523 억엔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피해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귀환·이주 촉진 등 본격적인 부흥·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재해 피해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귀환·이주 촉진, 편견 배제, 원전 처리수 처분을

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공공단체에도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출처: 일본 디지털청 홈페이지, [https://www.digital.go.jp/policies/gov\\_cloud/](https://www.digital.go.jp/policies/gov_cloud/), 검색일자: 2023.2.14.

- 81)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종합전략」: 2022년 12월 23일 각의 결정. 텔레워크의 보급,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 고조 등 사회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을 활용하여 지방창생을 가속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실현을 위해 기존 3개의 교부금(지방창생추진교부금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추진교부금)을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교부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출처: 일본 내각관방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denen/sougousenryaku/index.html>, 검색일자: 2023.2.14.
- 82) 임시재정대책채는 지방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각 지방공공단체가 특별로 발행해 온 지방채를 의미. 출처: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ain\\_sosiki/c-zaisei/chihosai/chihosai\\_qanda.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c-zaisei/chihosai/chihosai_qanda.html), 검색일자: 2023.2.14.
- 83)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재해지역의 자립으로 지방 창생 모델이 될 수 있는 부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제1기 복구·창생기간(2016년~2020년)’의 이념을 계승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 앞으로 나아가 할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부터 5년간을 ‘제2기 부흥·교정 기간’으로 규정

위한 대책 등 본격적인 부흥·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후쿠시마 국제 연구 교육기구 구축을 추진

##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예산집행조사 등 반영) 예산집행조사 및 행정사업 리뷰<sup>84)</sup>의 지적에 의하면 보험자 기능 강화 추진 교부금과 개호(간병) 보험 보험자 노력 지원 교부금<sup>85)</sup>의 평가지표 및 배분 기준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 반영(전년 대비 -50억엔)
  - 또한 예산편성 PDCA<sup>86)</sup> 사이클을 통해 국회 지적사항, 예산집행 조사,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
    - (국회 지적사항)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의 부적절 등에 따라 정부 통계 체제 강화(8억엔), 수력발전 도입 가속화 보조금 집행 상황을 근거로 사업 건수 전망 검토 등을 통해 소요액 재검토(-4억엔) 등
    - (예산집행 조사) 2022년 예산집행의 필요성·유효성·효율성 기준 조사(39건) 결과를 반영
    - (정책평가 결과) 산업보건활동 종합지원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 교부처를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상공회 등 단체로 재검토하면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감축(-2억엔) 등
- (디지털화 추진) 정보시스템을 정부 공통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부처 간 네트워크 등 공통 기반으로 운영하여 효율화 실현, 충무성 통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품질 향상을 도모, 해상보안청의 광역 해양 감시능력 강화·효율화
  - (정보시스템) 정부 공통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부처 간 네트워크(GSS: Government Solution Service)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화를 실현(각 부처 LAN

84) 행정사업 리뷰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가을의 연차 공개 검증(가을 리뷰) 등의 지적을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하여 예산의 질을 향상

85) 보험자 기능 강화 추진 교부금 및 개호(간병) 보험 보험자 노력 지원 교부금: 개호가 필요한 상태 예방과 건강 조성 등에 이바지하는 대응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배분기준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창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newpage\\_17527.html](https://www.mhlw.go.jp/stf/newpage_17527.html), 검색일자: 2023.2.14.

86) PDCA(Plan-Do-Check-Act)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 관리 방법으로 계획(Plan)하고 계획한 대로 집행(Do)하며 피드백(Check & Act)을 반영하는 것을 뜻함. 피드백 단계에서 국회 심의 결산, 예산집행 조사, 정책평가 등을 반영

통합으로 2027년까지 약 100억엔의 운용경비 삭감 전망)

- (통계) 총무성이 실시하는 경상통계에 대해 통계위원회 건의를 바탕으로 조사의 디지털화를 추진, 전자조사표 개선 등에 의한 온라인 응답률 향상을 통해 사무경비를 효율화하고 응답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통계 품질 향상 도모
- (해상보안청) 신기술을 갖춘 무인항공기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항공기·헬리콥터와의 업무 분담을 재검토함으로써 광역 해양 감시 능력을 강화·효율화
- (방위력정비의 효율화) 방위장비 전반에 걸쳐 중요도가 저하된 장비품 운용 정지, 장기계약 활용, 원가 정밀 조사 등을 통한 조달 최적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효율화를 실현(-2,572억엔)
- (정책 목적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지역 학교 협동 활동에 대해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 등에 우선적·중점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구조 도입, 사료용 쌀의 일반품종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
  -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학교 협동 활동에 대해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 등에 대해 우선적·중점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구조 도입
  - 2024년산부터 사료용 쌀의 일반품종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3년 계약 지원 단가 가산 조치를 폐지(2023년도 예산 110억엔 삭감)
- (지방재정 건전화)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을 가속화(계획액 0.5조엔을 크게 상회하는 1.3조엔을 상환)하고 임시재정대책채 발행을 사상 최저인 1조엔으로 감축

〈참고 1〉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의 재원확보<sup>87)</sup>

- 일본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실시할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 이에 따라 계획의 첫 시행연도인 2023년도 방위관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1,686억 엔(전년 대비 89.4% 증가)을 편성
  -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은 다차원 통합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2027년까지 일본에 대한 침공 발생 시 저지·배제 가능한 수준의 방위력 강화, 10년 후 방위력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조기에 원거리의 침공을 저지·배제 가능한 수준의 방위력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함
  - 계획이 시행되는 5년간 총 필요한 재원은 약 43조엔으로, 그중 약 40.5조엔을 각 연도의 예산에 편성할 예정
  - 2023년 방위관계비 10조 1,686억엔 중 방위력강화지급(가칭)에 편입되는 3조 3,806억엔을 제외한 방위관계비는 6조 7,880억엔이며, SACO\*·미군재편경비(2,217억엔)를 제외한 방위력정비계획 대상경비는 6조 5,662억엔
    - \* 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오키나와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의 약자로 오키나와에 소재하는 미군 시설·구역과 관련된 여러 과제에 관해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미일 양국 정부에 의해 설치
    - 2023년 방위력정비계획 대상경비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청사 등 자위대 시설의 노후화·재해 대책 강화, 인프라 강화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
- 2023~2027년까지 본 계획을 조달할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세출 개혁, 결산잉여금 활용, 세외수입을 활용한 방위력강화자금의 창설, 세제 조치 등 세출·세입 양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 2023년도 재원확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출 개혁) 사회보장관계비 이외에 대해 지금까지의 세출 개혁을 지속(전년 대비 약 +1,500억엔)하여 방위력정비계획 대상경비 증액분 중 약 2,100억엔 규모의 재원을 확보

87)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2.12.

- (결산잉여금 활용) 최근 10년간(2012~2021년도) 결산잉여금의 연평균은 약 1.4조엔(재정법상 활용 한도인 1/2 금액은 약 0.7조엔, 2023~2027년도 누계액은 약 3.5조엔)
- (방위력강화자금(가칭)) 세외수입 등을 방위력 정비에 계획적·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제도(방위력강화자금(가칭))을 재원확보법(가칭)에 의해 2023년 창설 예정
  - 동 자금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재무대신이 관리하며, 방위력정비계획 대상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가능
- (세외수입) 2023년도에는 약 4.6조엔 규모의 세외수입을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중 2023년도에 필요한 1.2조엔을 초과하는 금액인 3.4조엔은 방위력강화자금(가칭)에 편입하여 2024년도 이후의 재원으로 활용
  - 특별회계로부터의 이월금(약 3.7조엔): 외환자금특별회계로부터의 이월금 약 3.1조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약 0.6조엔
  -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인한 적립금 또는 기금 등 불용액 국고 반납(약 0.4조엔): 국립병원기구 및 지역의료기능 추진기구(독립행정법인) 적립금 불용액 국고 반납 약 0.1조엔,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독립행정법인)의 신종 코로나19 관련 기금 불용액 국고 반납 약 0.2조엔
  - 국유자산 매각수입(약 0.4조엔) : ‘오테마치(大手町) 플레이스’의 정부 보유분 매각 수입 약 0.4조엔

\_\_\_\_\_, 「令和5年度防衛関係予算のポイント」, 2022.12.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2022.12.를 참고하여 작성

## IV. 미국

□ FY2024: 2023년 10월 ~ 2024년 9월

□ 출처: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Analytical Perspectives, 20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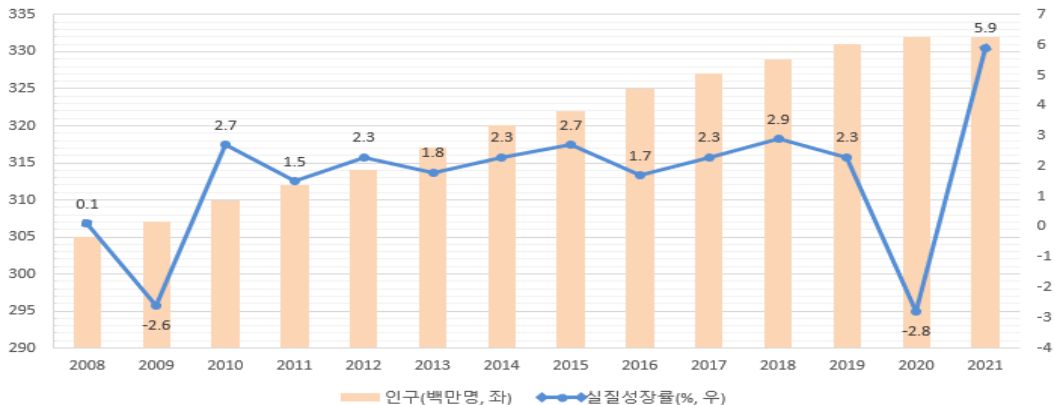
□ 환율: 1USD = 약 1,292.16원 (2022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 규모: 2021년 경상GDP 23조 3,151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9.6배 수준<sup>88)89)</sup>)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21년 기준 25.5% (우리나라는 80.5%)

□ 인구: 3억 3,221만명 (2021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 GDP, Population and employment by main activity, 검색일자: 2023.3.10.

88)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수치이며, 우리나라 규모는 추정치, 미국은 실적치 기준

89) 일반적인 명목(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1조 8,110억달러)의 12.9배

## 〈최근 재정 및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22. 07. 01.	CBO, 2023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시한 재량지출 전망 분석 보고서 발표	2022년 하반기 재정 동향
2022. 07. 13.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 07. 13.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 07. 20.	의회 하원, 2023회계연도 minibus(부분세출예산) 법안(H.R.8294) 가결	
2022. 07. 27.	CBO, 2022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2022. 07. 27.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 08. 09.	반도체 지원 법안(CHIPS and Science Act: H.R.4346), 대통령의 법안 서명 후 입법 발효	
2022. 08. 10.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 08. 12.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H.R. 5376) 가결	
2022. 08. 23.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 전망(MSR) 발표	
2022. 08. 25.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2분기 GDP(속보, 수정치) 발표	
2022. 09. 07.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 09. 13.	CBO, 2023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2022. 09. 21.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 09. 24.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 발표	
2022. 09. 30.	2023회계연도 1차 임시 예산안(H.R. 6833) 입법 발효	
2022. 09. 30.	의회, 분유 대란 대응을 위한 관세 조정 법안(H.R. 8982) 가결	
2022. 10. 11.	CBO, 2022회계연도 잠정 결산 발표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22. 10. 19.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 10. 27.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3분기 GDP(속보치) 발표	
2022. 11. 02.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 11. 30.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3분기 GDP(1차 수정치) 발표	
2022. 11. 30.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 12. 07.	CBO, 2022 예산 대안(Budget Options) 보고서 발표	
2022. 12. 14.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 12. 16.	2023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안(H.R. 1437) 입법 발효	
2022. 12. 22.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3분기 GDP(2차 수정치) 발표	
2022. 12. 23.	2023회계연도 3차 임시 예산안(H.R. 4373) 입법 발효	
2022. 12. 23.	의회, 2023회계연도 정규세출예산 최종 합의 도달	
2022. 12. 16.	CBO, 2022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발표	
2023. 01. 13.	재무부 장관, 국가채무 상한선 도달에 대한 디폴트 우려 및 의회에 대책 촉구	2023년 상반기 재정 동향
2023. 01. 18.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	
2023. 01. 26.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4분기 GDP(속보) 발표	
2023. 01.	OMB, 2022 페이코(PAYGO) 최종 보고서 발표	
2023. 01. 30.	백악관, 보건 관련 장소에서의 백신 의무화 철회 법안(H.R. 497)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표	
2023. 01. 31.	의회 하원, 팬데믹 종료 법안(H.R. 382) 가결	
2023. 02. 15.	CBO, 2023~2033 예산·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 [요 약]

##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3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전망 기간 가장 낮은 0.6%에 머물고, 2024년은 1.5%를 기록할 전망
- (재정 전망)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5,690억달러) 대비 17.7% 증가한 1조 8,460억달러(GDP 대비 6.8%)로 전망
- (국가채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25조 9,100억달러) 대비 7.2% 증가한 27조 7,830억달러로 전망

## □ 예산안 내용

- (수입)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4조 8,020억달러) 대비 4.9%(2,340억달러) 증가한 5조 360억달러(GDP 대비 18.5%)로 전망
- (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6조 3,720억달러) 대비 8.0%(5,110억달러)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 주요 재정정책

- ① 가계비용 절감(Lowering costs and Giving Families More Breathing Room)
- ②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protecting) 및 강화(strengthening)
- ③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bottom up and middle out) 경제
- ④ 기후변화 대응
- ⑤ 국제 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⑥ 재정건전화 등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sup>90)</sup>

- (경제성장률) 2023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전망 기간 가장 낮은 0.6%(전년 추정치인 1.8% 대비 1.2%p 감소)에 머물고, 2024년에는 1.5%로 반등하며, 2025년 이후에는 2%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
  -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CBO<sup>91)</sup>에 비해 0.3%p 정도 낙관적으로 전망
  - 2022년 명목 GDP는 25조 4,090억달러를 기록하고, 2027년에는 30조달러를 넘어설 전망

〈표 IV-1〉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2
실질 GDP <sup>1)</sup>	1.5	2.2	2.9	2.2	-3.4	5.9	정부	5.9	1.8	0.6	1.5	2.3	...	2.2
							CBO <sup>2)</sup>	5.7	2.1	0.3	1.8	2.7	...	n/a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CBO의 2021년, 2022년 수치는 실적치이며, 202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9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2.15., Table 1-1, 2-1

- (노동시장) 2023년 실업률은 4.3%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고, 2024년에는 4.6%로 고점에 이른 후 2025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8.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22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반등한 이후 2024년에도 상승 국면 유지
- (물가) 2021년에 4.7%를 기록한 물가지수(CPI-U)는 2022년에 8.1%까지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4.3%, 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전망

90) 경제 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91)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한 수치

- (소비) 미국 경제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2022년 4분기에 1.8% 증가

〈표 IV-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3
명목 GDP	21,433	20,894	23,315	25,409	26,544	27,523	28,750	29,981	...	40,157
실질 GDP 성장률 (2024 예산안 전망치)	2.2	-3.4	5.9	1.8	0.6	1.5	2.3	2.1	...	2.2
실질 GDP 성장률 (2023 예산안 전망치)				5.5	4.2	2.8	2.2	2.0	...	2.3
실업률 <sup>1)</sup>	3.7	8.1	5.4	3.7	4.3	4.6	4.4	4.3	...	3.8
CPI-U <sup>2)</sup>	1.8	1.2	4.7	8.1	4.3	2.4	2.3	2.3	...	2.3
국채 91일 <sup>1)3)</sup>	2.1	0.4	*	2.0	4.9	3.8	3.0	2.5	...	2.5
국채 10년물 <sup>1)</sup>	2.1	0.9	1.4	3.0	3.9	3.6	3.5	3.4	...	3.5

주: \* = 0.05% 또는 이하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9

## 나. 재정 전망<sup>92)</sup>

- (재정수입)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4조 8,020억달러) 대비 4.9% 증가한 5조 360억달러(GDP 대비 18.5%)로 전망
- (재정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6조 3,720억달러) 대비 8.0%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5,690억달러) 대비 17.7% 증가한 1조 8,460억달러(GDP 대비 6.8%)로 전망
  -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도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의 전망 수치(1조 1,540억 달러) 대비 약 36.0% 상승한 1조 5,690억달러로 전망
    - 향후 10년간(~2033회계연도) 재정적자 추이는 2025회계연도를 기점으로 GDP 대비 5% 후반대로 하락한 이후 4% 후반대 ~ 5%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
- (국가채무<sup>93)</sup>) 2024회계연도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25조 9,100억 달러) 대비 7.2% 증가한 27조 7,830억달러로 전망 (GDP 대비 수치도 증가)
  - 2024회계연도 연방 총채무<sup>94)</sup>(34조 8,080억달러: GDP 대비 127.8%) 중 정부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 소유채무는 7조 250억달러(GDP 대비 25.8%) 전망
  - 2023회계연도 GDP 대비 연방채무는 전년(97.0%) 대비 1.4%p 증가한 98.4%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는 향후 전망 기간(~2033회계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망 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3회계연도에는 109.8%를 기록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정책을 바탕으로 연방채무는 2033년에 기준선(OMB baseline) 대비 7%p 하락한 110%를 기록할 전망 [그림 IV-1]

92) 2024회계연도 기간은 2023.10.~2024.9.이며, 2024회계연도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의 수치를 기준으로 함

93) 정부 내부거래 제외를 기준으로 작성;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 수치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94) 연방 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 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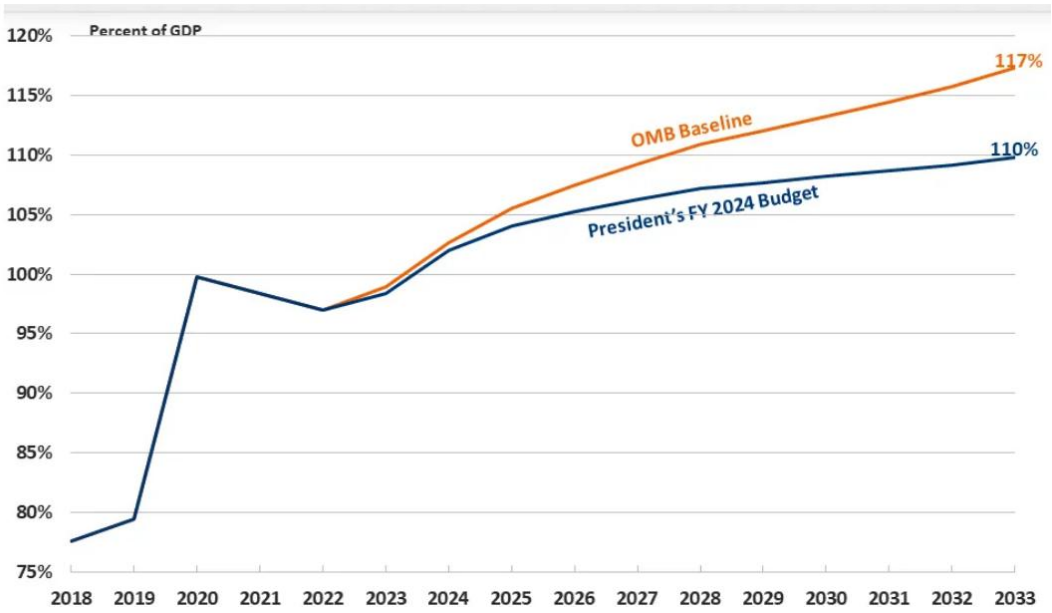
〈표 IV-3〉 미국 재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2		2024	2025	2026	...	2033	2024~2033
<b>예산 총량 (십억달러)</b>												
수입	2,524	2,105	3,421	4,047	4,897	4,802	5,036	5,419	5,773	...	7,991	65,187
지출	2,983	3,518	6,550	6,822	6,273	6,372	6,883	7,091	7,294	...	10,026	82,242
재정적자	459	1,414	3,129	2,775	1,376	1,569	1,846	1,671	1,521	...	2,035	17,054
연방(공공) 채무 <sup>1)</sup>	5,803	7,544	21,017	22,284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	43,619	-
경제규모 (GDP)	14,441	14,119	21,000	22,358	25,000	26,336	27,238	28,432	29,679	...	39,732	-
<b>예산 총량 (GDP 대비 %)</b>												
수입	17.7	14.8	16.3	18.1	19.6	18.2	18.5	19.1	19.5	...	20.1	19.6
지출	21.0	24.7	31.2	30.5	25.1	24.2	25.3	24.9	24.6	...	25.2	24.8
재정적자	3.2	9.9	14.9	12.4	5.5	6.0	6.8	5.9	5.1	...	5.1	5.2
연방(공공) 채무 <sup>1)</sup>	40.8	53.0	100.1	99.7	97.0	98.4	102.0	104.1	105.2	...	109.8	-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1

[그림 IV-1] 2024회계연도 예산정책으로 인한 채무 전망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nalytical Perspectives, 2023.3.9., Chart 3-2  
 CRFB, An Overview of the president's FY2024 Budget, 2023.3.9.

2 예산 목표<sup>95)</sup>

- 가계비용 절감
  -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감면 및 가계비용 절감
  - 적정가격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확대
  -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 고등교육 지원
  - 근로자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 메디케어/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 수혜금 지급 능력 강화
  
-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 미국 제조업 투자
  - 근로자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 빈곤학교 지원
  
-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창출

95) 미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4," 2023.3.9.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4/>, 검색일자: 2023.3.9.

- 지구 온난화 감축 기후변화 복원력(resilience) 강화

- 기후변화 복원력(resilience) 강화

□ 국제 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국내 범죄 예방

- 젠더 폭력 종식

-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 등 지원

- 중국 대응 및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deterrence) 전략

- 국경 및 이민 체계 안전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정책 전환

□ 재정건전화

- 고소득층 최저세율 도입

- 법인세율 인상

- 자사주 매입 세금 확대

-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정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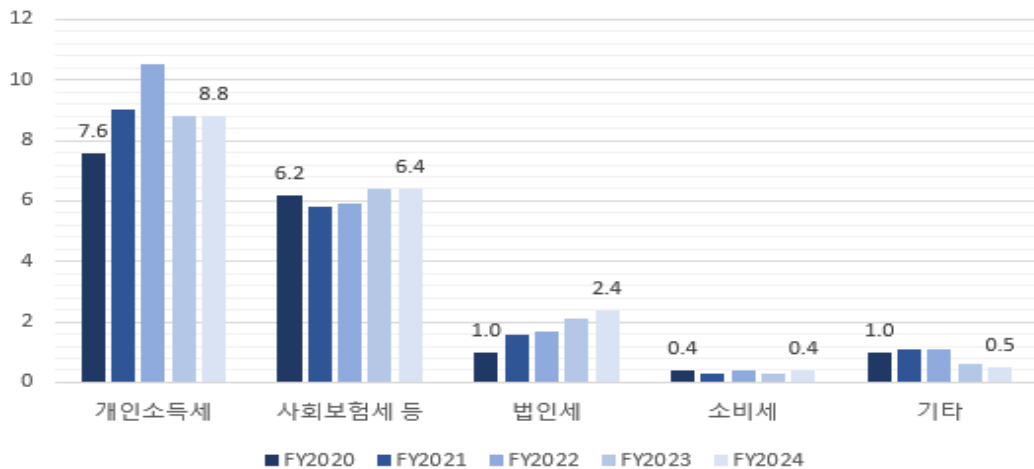
3 예산안 내용<sup>96)</sup>

## 가. 세입

-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4조 8,020억달러) 대비 4.9% 증가한 5조 360억달러 (GDP 대비 18.5%)로 전망
  - 2023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 실적치 대비 약 2.0% 감소한 4조 8,020억달러 (GDP 대비 18.2%)로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5회계연도에 3년 만에 19%를 넘어서며, 이후 2026회계연도부터 19%대를 유지하다가 2032회계연도에 20%에 도달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주요 수입 항목의 GDP 비중 순위는 개인소득세(8.8%), 사회보험세 등 (6.4%), 법인세(2.4%), 관세(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입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23~2024회계연도에 8.8% 수준을 유지할 전망

[그림 IV-2] 미국 주요 세입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FY202~FY2022: 실적치 / FY2023: 추정치 / FY2024: 전망치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5

96) 2024회계연도 기간은 2023.10.~2024.9.이며, FY2024 전망에서 비교하는 전년도(FY2023) 규모는 추정치

〈표 IV-4〉 미국 분야별 주요 세입 전망

(단위: 회계연도, 십억달러)

구분	실적			추정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3	
개인소득세	1,609	2,044	2,632	2,328	2,390	2,617	2,849	3,029	...	4,154	9.9
법인세	212	372	425	546	666	733	734	740	...	803	2.3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sup>1)</sup>	1,310	1,314	1,483	1,675	1,741	1,820	1,909	1,990	...	2,238	-
소비세	87	75	88	91	114	114	119	121	...	141	0.4
유산세, 증여세	18	27	33	21	25	28	29	45	...	68	0.1
관세	69	80	100	102	61	50	52	54	...	57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sup>2)</sup>	82	100	107	n/a	n/a	14	36	54	...	91	0.2
기타 수입	36	34	30	39	38	42	45	46	...	63	0.2
<b>총 재정수입</b>	<b>3,421</b>	<b>4,047</b>	<b>4,897</b>	<b>4,802</b>	<b>5,036</b>	<b>5,419</b>	<b>5,773</b>	<b>6,080</b>	<b>...</b>	<b>7,991</b>	<b>19.6</b>
<b>GDP 대비 %</b>	<b>16.3</b>	<b>18.1</b>	<b>19.6</b>	<b>18.2</b>	<b>18.5</b>	<b>19.1</b>	<b>19.5</b>	<b>19.7</b>	<b>...</b>	<b>20.1</b>	

주: 1) 사회보험급여세, 메디케어급여세, 실업보험, 기타 퇴직 등으로 구성

2)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4, S-5

나. 세출<sup>97)</sup>

-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6조 3,720억달러) 대비 약 8.0%(5,110억달러)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올해(FY2023) 재정지출 규모는 6조 3,720억달러로 GDP 대비 24.2% 추정
- 2024회계연도의 예산 기능별(총 20개 기능)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소득보장(income security), 국방, 보건(의료), 메디케어, 순이자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은 에너지, 교통, 천연자원 및 환경, 소득보장, 순이자 순으로 집계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2024회계연도의 기능별 주요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sup>98)</sup>
  - (사회보장<sup>99)</sup>) 전년 대비 8.4% 증가한 1조 4,658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21.3% 전망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3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2028회계연도)간 연평균 증가율은 6.5%를 기록할 전망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23.3% 증가한 9,764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14.2% 전망
    - 소득보장 지원 분야의 하위기능(총 6개) 중 4개 기능(① 일반<sup>100)</sup> 및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지원<sup>101)</sup>, ② 실업수당 ③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④ 기타 소득보장 지출) 모두 증가

97)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 규모를 의미하며, 기능별 지출은 예산 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기준임

98)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Historical Tables - Tabl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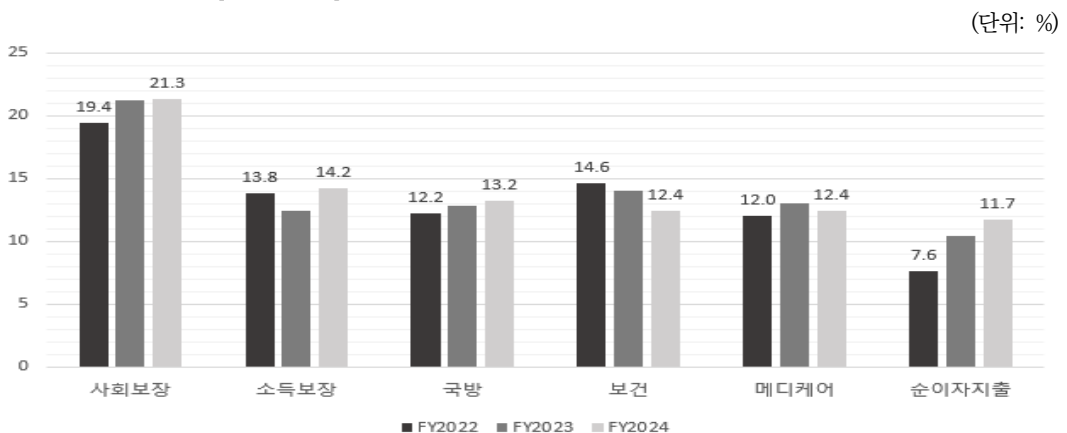
99)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

100) 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excluding social security)

101) 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 (국방)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약 9,094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3.2% 전망
  - 2016회계연도부터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국방 지출은 2028회계연도(전망 기간 마지막 연도)까지 증가세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보건) 전년 대비 4.3% 감소한 8,527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2.4% 전망
  - 하위기능 중 보건 관련 연구·교육 지출을 제외한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지출 모두 감소
- (메디케어<sup>102)</sup>) 전년 대비 2.5% 증가한 8,504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2.4% 전망
  - 메디케어 항목 지출은 2024회계연도 총 재정지출 증가율(8.0%) 대비 저조한 2.5% 증가율을 기록하나 이후 연도부터는 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9%에 근접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6회계연도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순이자 지출) 전년 대비 19.4% 증가한 약 7,888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1.5% 전망
  - 올해와 내년도의 순이자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한 수치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후속 연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그림 IV-3] 미국 총지출 대비 주요 기능별 지출 비중 추이



주: FY2022: 실적치 / FY2023: 추정치 / FY2024: 전망치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Historical Tables - Table 3.2

102)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

〈표 IV-5〉 미국 기능별 지출(Outlays)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9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가율 (b-a)/a
국방	686,003	724,645	753,901	765,823	814,750	909,377	11.6
국제관계	52,739	67,666	46,947	71,699	79,883	73,735	-7.7
과학/우주/기술	32,414	34,022	35,534	37,404	43,052	44,602	3.6
에너지	5,041	7,083	5,977	-9,132	10,655	30,456	185.8
천연자원, 환경	37,844	42,450	44,160	41,389	69,400	93,175	34.3
농업	38,257	47,298	47,398	33,065	41,414	33,147	-20.0
상업/주택융자 (housing credit)	-25,715	572,071	307,847	-19,075	-1,131	21,853	-
교통	95,756	145,623	154,291	131,084	136,507	147,140	77.9
지역사회/ 지방발전	26,784	81,878	44,655	69,963	100,474	71,506	-28.9
교육/훈련/ 고용/사회서비스	136,700	237,754	298,406	677,305	269,046	218,552	-18.8
보건(의료)	584,816	747,582	796,450	914,081	891,297	852,655	-4.3
메디케어	650,996	776,225	696,458	755,094	829,902	850,446	2.5
소득보장	514,787	1,263,639	1,647,729	866,097	792,089	976,437	23.3
사회보장	1,044,409	1,095,816	1,134,586	1,218,663	1,352,268	1,465,820	8.4
재향군인	199,843	218,655	234,282	277,404	304,963	320,970	5.2
법무행정	65,832	71,997	71,430	71,323	86,259	88,338	2.4
일반정부	23,488	180,109	273,941	133,214	42,505	44,353	4.3
순이자	375,158	345,470	352,338	475,887	660,647	788,772	19.4
할당금 (Allowances)	-	-	-	-	-17,770	16,430	-
기타 (상계수입 포함)	-98,192	-106,362	-123,860	-234,964	-134,383	-165,026	-
<b>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b>	<b>4,446,960 (21.0)</b>	<b>6,553,621 (31.2)</b>	<b>6,822,470 (30.5)</b>	<b>6,273,324 (25.1)</b>	<b>6,371,827 (24.2)</b>	<b>6,882,738 (25.3)</b>	<b>8.0</b>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Historical Tables - Table 3.2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① 재량지출\*, ② 법정(의무)지출, ③ 순이자지출로 구분되며, 주요 항목별 지출 전망은 아래와 같음

\*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 분야와 비국방 분야 지출 등으로 나누어짐

- (재량지출<sup>103</sup>) 2024회계연도 총 재량지출 예산 권한<sup>104</sup>(budget authority)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조 6,955억달러(GDP 대비 7.0%) 계획 <표 IV-7>
  - 2024회계연도 국방(defense) 분야 예산 권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8,864억 달러 계획
  - 2024회계연도 비국방(non-defense) 분야 예산 권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6,881억달러 계획
  - 기타(재향군인 의료 프로그램) 분야의 2024회계연도 예산 권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21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2024회계연도 의무지출(순이자지출\* 7,890억달러 제외)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4조 1,940억달러(GDP 대비 15.4%) 전망 <표 IV-6>

○ (순이자 지출) 향후 약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7.2%)

\* 순이자지출 추이: (2022) 4,760억달러(실적) → (2023) 6,610억달러(추정) → (2024) 7,890억달러(전망)

□ (지출별 비중)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3회계연도에는 27:73 수준이며, 향후 10년 뒤인 2033회계연도에는 21:79 수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참고> 총지출 대비 재량지출/의무지출/순이자지출 비중

연도	재량지출	의무지출	순이자지출	합계
2023회계연도 (올해)	27.2%	62.4%	10.4%	100%
2033회계연도 (10년 뒤)	20.7%	66.1%	13.2%	100%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4를 재구성

103) Base Discretionary Funding 수치(Table S-8. 2024 Discretionary Request by Major Agency - Continued)

104) base funding 기준 - 예산 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기준의 수치는 <표 IV-6> 참고

〈표 IV-6〉 항목(Category)별 지출(outlays)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31	2032	2033	2024~ 2033
<b>재량지출 프로그램</b>												
국방	752	800	885	906	907	921	941	...	970	978	984	9,408
비국방	912	936	1,015	1,010	1,029	1,034	1,024	...	1,055	1,075	1,095	10,410
소계: (GDP 대비 %)	1,664 (6.7)	1,736 (6.6)	1,900 (7.0)	1,916 (6.7)	1,936 (6.5)	1,955 (6.3)	1,964 (6.1)	...	2,026 (5.6)	2,052 (5.4)	2,079 (5.2)	19,818 (6.0)
<b>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b>												
사회보장	1,212	1,346	1,459	1,553	1,646	1,742	1,842	...	2,152	2,261	2,371	19,014
메디케어	747	821	842	958	1,028	1,104	1,252	...	1,451	1,564	1,770	12,525
메디케이드	592	608	558	582	620	656	699	...	848	904	967	7,36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1,581	1,200	1,335	1,251	1,196	1,222	1,286	...	1,391	1,440	1,518	13,302
소계 (GDP 대비 %)	4,133 (16.5)	3,975 (15.1)	4,194 (15.4)	4,343 (15.3)	4,490 (15.1)	4,724 (15.3)	5,078 (15.8)	...	5,843 (16.0)	6,169 (16.2)	6,626 (16.7)	52,207 (15.7)
순이자 (GDP 대비 %)	476 (1.9)	661 (2.5)	789 (2.9)	833 (2.9)	867 (2.9)	910 (2.9)	960 (3.0)	...	1,171 (3.2)	1,250 (3.3)	1,321 (3.3)	10,217 (3.1)
<b>총 재정지출</b>	<b>6,273</b>	<b>6,372</b>	<b>6,883</b>	<b>7,091</b>	<b>7,294</b>	<b>7,589</b>	<b>8,003</b>	<b>...</b>	<b>9,040</b>	<b>9,472</b>	<b>10,026</b>	<b>82,242</b>
<b>GDP 대비 %</b>	<b>25.1</b>	<b>24.2</b>	<b>25.3</b>	<b>24.9</b>	<b>24.6</b>	<b>24.6</b>	<b>24.9</b>	<b>...</b>	<b>24.8</b>	<b>24.9</b>	<b>25.2</b>	<b>24.8</b>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4 &amp; S-5

□ 주요 부처(기관)별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 사업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국방부) 국방부의 재량지출 예산 권한(Budget Authority)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확정예산 대비 3.2%(260억달러) 증가한 8,420억달러 편성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및 폭력 극단주의 단체 등의 위협 대응
  -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역지력 현대화(modernization) 유지
  -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 및 집단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프로그램 지속 가동
  - 무인항공기 등의 개발 및 조달을 통해 향후 위협에 대응하고, 운영비용 감축
  - 현역군인 및 군무원 봉급 5.2% 인상, 생계수당(subsistence)과 거주 수당 인상
- (보건·복지부<sup>105</sup>) 보건·복지부의 재량지출 예산 권한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확정 예산 대비 11.5%(148억달러) 증가한 1,440억달러<sup>106</sup> 편성
  - 미래 대유행 및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200억달러 의무지출 예산편성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주·지방에 대한 공중보건 역량 강화(주 및 지역별 공중보건 인프라 확대, 보건 인력 강화)를 위해 105억달러 예산(재량지출) 배정
  - 약 400만명에 달하는 4세 아동(3세 아동까지도 확대 가능)을 대상으로 양질의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예산으로 향후 10년 동안 6,000억달러 소요 전망
  - 정신건강 위기\*(behavioral health crisis) 대응하고자 민간 의료보험과 메디케어(공적 의료보험)에 관련 지원 항목 범위 확대 등 정신건강 보건 체계 지원
    - \*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18~25세 3명 중 1명은 과거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겪었으며, 4,600만명 이상이 물질사용장애(SUD<sup>107</sup>)를 경험했고, 이 중 94%는 치료를 받지 못함
  - C형 간염,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AIDS) 등 전염성 있는 질병의 예방 치료 관련 예산 지원

105)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06)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규모는 인디언 보건 서비스(재량지출에서 의무지출로 전환 추진 중) 규모를 제외함

107) SUD: Subsistence Use Disorder

- HIV 신규 발생 건수 감축 및 노출 전 예방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 접근성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에 8억 5천만달러 편성
- 모성 보건 및 의료형평성 개선을 위해 4억 7,100만달러 지원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고, 흑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그룹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언급
- **(주택도시개발부)** 주택도시개발부의 재량지출 예산 권한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확정예산 대비 1.6%(11억달러) 증가한 733억달러 편성
  - 327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주거선택 바우처(HCV) 프로그램<sup>108)</sup>을 확대하여 기존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 지속 지원 및 5만 가구 추가 지원<sup>109)</sup>
    - 극빈(ELI<sup>110)</sup>) 퇴역군인 및 나이 도달로 인해 위탁보호(foster care) 체계에서 나와야 하는 청소년을 위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90억달러 예산 지원
  -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적정가격 주택 대응을 위해 주택투자협력 프로그램(HOME<sup>111)</sup>)에 3억달러 편성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약한(under-served) 채무자, 저소득 및 적정소득자(low to moderate income) 및 소수민족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저당 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s)가 1/3 정도 감축될 수 있도록 지원
  - 노숙자(가정폭력, 노숙 청소년 포함) 근절을 위해 37억달러의 노숙자 지원 보조금 예산 지원
  - 어린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을 대상으로 납 함유 페인트(lead-based paint) 등 주거 건강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4억 1,000만달러 편성

10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109) 예산안 자료는 HCV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은 약 230만명으로 언급하고 있음

110) ELI: Extremely-Low Income

111) HOME: HOME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1990년 저렴주택법 제정 이후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을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별로 양질의 안전하고 저렴하며 위생적인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렴주택 공급 전략을 구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연방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출처: 김정화·이현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하와이주 저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금융연구원, 2021.12.13.

- (국무부 등<sup>112</sup>) 국무부의 재량지출 예산 권한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예산 대비 11.2%(71억달러) 증가한 705억달러 편성
  -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sup>113</sup>)에 16억달러, 청정기술기금(CTF<sup>114</sup>)에 12억달러 배정
  -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를 위해 109억달러 배정하여 전염병의 예방, 탐지, 대응 등을 지원하고 보건 안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타 국가와의 양자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동맹 심화를 목표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sup>115</sup>) 지원 예산으로 9,000만달러, 인도·태평양 경제 체계(IPEF<sup>116</sup>)에 5,000만달러 지원
  - 중앙아메리카 및 아이티(Haiti) 안보 및 번영 구축 예산으로 향후 4년 동안 40억달러 배정
  -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자연재해 또는 갈등(conflict)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 최대 125,000명까지 허용이 가능한 난민 허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5억달러 배정
  - 아프리카와의 관계 돈독을 위해 사하라사막 이남(sub-Saharan)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경제협약 촉진 및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지원

112)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기타 해외 프로그램

113) GCF: Green Climate Fund

114) CTF: Clean Technology Fund

115)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16)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표 IV-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 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부처 및 기관 \ 회계연도	2022 <sup>1)</sup>	2023	2024	증가율
	(실적)	(확정예산)	(요구액)	('24-'23)/'23
<b>내각 부처(Cabinet Departments)</b>				
농무부(Agriculture)	26.3	26.4	30.1	14.3
상무부(Commerce)	9.9	11.2	12.3	10.7
국방부(Defense)	742.6	816.0	842.0	3.2
교육부(Education)	75.3	79.2	90.0	13.6
에너지부(Energy)	44.3	47.8	52.0	8.7
보건복지부(Health & Human Services)	119.9	129.1	144.0	11.5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57.6	61.0	60.4	-1.0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65.7	72.1	73.3	1.6
내무부(Interior, DOI)	16.0	17.2	18.8	9.3
법무부(Justice)	35.2	37.5	39.7	5.9
노동부(Labor)	13.1	13.6	15.1	10.9
국무부(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57.8	63.4	70.5	11.2
교통부(Transportation)	26.9	28.7	27.8	-2.9
재무부(Treasury)	14.3	14.2	16.3	15.0
보훈부(Veterans Affairs)	112.4	134.9	137.9	2.2
<b>주요 정부기관 (Major Agencies)</b>				
공병단(Corps of Engineers)	8.3	8.7	7.4	-14.4
환경보호청	9.6	10.1	12.1	19.2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5	-0.1	1.0	N/A
항공우주국(NASA)	24.0	25.4	27.2	7.1
국립과학재단	8.8	9.5	11.3	18.6
중소기업청	0.5	1.1	1.0	-8.2
사회보장국	9.1	9.6	10.5	9.7
기타 기관들	25.4	27.3	29.4	7.7
의무지출 변화 (Changes in Mandatory Programs offsets)	-16.1 <sup>2)</sup>	-18.6	-30.6	64.8
<b>합계(Base 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b>	<b>1,476.6</b>	<b>1,618.3</b>	<b>1,695.5</b>	<b>4.8</b>
국방 (Defense Total)	-	(858.3)	(886.4)	(3.3)
vs (Non-Defense Total)	-	(641.2)	(688.1)	(7.3)
비국방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sup>4)</sup>	-	(118.7)	(121.0)	(1.9)
안보 (Security)	-	(979.2)	(1,014.4)	(3.6)
vs (Nonsecurity)	-	(520.3)	(560.1)	(7.6)
비안보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	(118.7)	(121.0)	(1.9)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8

## 4 주요 재정정책

### - 예산안 주요 정책 -

- ① 가계비용 절감(Lowering costs and Giving Families More Breathing Room)
- ② 메디케어/사회보장제도 보호(protecting) 및 강화(strengthening)
- ③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bottom up and middle out) 경제
- ④ 기후변화 대응
- ⑤ 국제 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⑥ 재정건전화 등

#### 가. 가계비용 절감

-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감면)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년 3월 11일 입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아동수당(CTC<sup>117</sup>) 확대
  - 아동 1명당 6세 이상은 최대 3,000달러, 6세 미만은 최대 3,600달러로 확대
- (적정가격 및 양질의 보건의 서비스 확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메디케이드를 통한 자택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 서비스 개선
  - 개인 전담 보건의 서비스 등을 활용한 장애가 있는 노년층의 보건의 관리 및 개인 보건의 서비스 직종 자체에 대한 질적 개선 병행
  - 저소득·농업 지역의 보건의 인력 확대 및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중보건공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예산에 9억 6,600만달러 배정
-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적정가격 주택 부족 대응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등 590억달러(의무지출) 배정
  - 이와 함께, 적정가격 주택 개발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개선하는 주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0억달러를 배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117) Child Tax Credit

- (고등교육 지원) 저소득층 연방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Pell Grant)의 수혜 최대 금액을 500달러 인상
  - 또한, 가구 소득 125,000달러 이하를 대상으로 흑인대학(HBCUs<sup>118</sup>), 부족대학(TCCU<sup>119</sup>), 소수민족·유색인종 대학(MIS<sup>120</sup>)을 다니는 경우 학비 보조금 지원
- (에너지 및 수도 비용 보조) 2023년 말에 만료되는 저소득가구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sup>121</sup>) 확대<sup>122</sup>
  - 에너지 비용을 각 주정부의 선택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비용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나.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 (수혜금 지급 능력 강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입 개선 방안 마련 계획 등
  - (메디케어) 연방건강보험기금(Medicare HI trust fund)에 대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고, 메디케어 제도(medicare drug) 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는 등 기금 수입 강화 계획
  - (사회보장) 의회와 함께 사회보장 수입 개선을 위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국의 인력 및 정보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118) 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미국 내 흑인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을 통칭)

119) TCCU: Tribally-Controlled College or University(인디언 부족의 관리를 받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중서부 남서부 지역에 주로 위치)(25 USC, Ch. 20, Sec. 1801)

120) MIS: Minority-Serving Institution(유색인종,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교육기관)

121)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LIHEAP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원에 더해 에너지 위기, 내후성 강화(단열재 보강 등), 에너지 관련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

122) 2023회계연도 통합세출예산법(P.L. 117-328)에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LIHEAP에 50억달러 예산 배정

## 다.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 (미국 제조업 투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sup>123</sup>)에 3억 7,500만달러를 배정하여 제조 관련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연구기관 발족 계획
  - 또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공공-민간 파트너십<sup>124</sup> (MEP<sup>125</sup>)에 2억 7,700만달러 배정
- (근로자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주 기간의 가족 및 유급 병가 도입
  -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고, 기업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제도 도입
- (빈곤 학교 지원) 저소득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학문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205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 동 예산을 통해 부촌과 빈곤 학교의 고질적인 자금의 불균형 문제 접근 계획

## 라.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창출) 45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청정에너지 분야 관련한 농업 지역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
  - 전국적인 청정에너지 분야 인력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저소득 가구 주거지의 단열재 보강 등)
  - 부족 단위의 가정에 전기 공급 및 부족 관리하에 있는 고등 교육기관(TCCU)에 재

123) NIST: 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국, 제조업 25년의 성과」, 이슈분석 21호, 2014.1.,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sueId=ISUE\\_000000000000678&menuNo=200&pageIndex=16](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sueId=ISUE_000000000000678&menuNo=200&pageIndex=16), 검색일자: 2023.3.21.

125) 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8,300만달러 예산 배정

- (지구 온난화 감축)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 제시<sup>126)</sup>
  - 환경보호국(EPA)에 6,440만달러를 배정하여 강력한 온실 효과 기체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계적 중단 작업을 지속 지원하고, 에너지부(DOE)에 12억달러를 배정하여 탈탄소화 작업 등 진행
- (기후변화 복원력(resilience) 강화) 내무성(DOI), 농무부(USDA), 국토안보부(DHS), 국방부에 대해 기후변화 복원력 관련 230억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
  - 지역사회의 홍수, 산불 대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존, 생태계 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능력 등 강화
    - 미래 홍수 상태에 대한 데이터 개발 등이 포함된 홍수 위험 지도 예산에 5억달러 편성

#### 마. 국제 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국내 범죄 예방) 총기 폭력 및 기타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연방법 집행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 178억달러 배정
  - 경찰 인력 10만명 추가 영입 및 지역사회 범죄 예방·지역사회 폭력(community violence) 저지 개입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50억달러 편성 등
- (젠더 폭력 종식) 1994년에 입법된 여성폭력방지법(VAWA<sup>127)</sup>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0억달러(역대 최고 규모) 예산편성
  - 동 예산은 3,500만달러 규모의 빈민가 및 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특

126) 바이든 정부는 전년도에 발표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05년 수치의 50~52%)를 이번 예산안과 같은 수치로 언급한 바 있음

127)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1994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기소 시에도 민사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적 평등과 서비스를 강화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세계법제정보센터·법령정보관리원),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1994”)

정(culturally-specific) 서비스 예산 및 VAWA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 대응 예산으로 1,400만달러 포함

-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 등 지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에 맞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의 대비 능력 강화 지원
- (중국 대응 및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deterrence) 전략) 미국의 유일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도전 과제 대응
  - 20억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국제적인 물적 기반시설 자금을 확보하고, 20억달러의 추가적인 자금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위협 세력 대응 강화<sup>128)</sup>
- (국경 및 이민 체계 안전 강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이주민 경로(lawful pathways for migration) 지원을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sup>129)</sup>)과 이민세관집행국(ICE<sup>130</sup>)에 250억달러 배정
  - 동 예산은 국경수비대 인력 350명 증원을 포함하여 국경 및 입항지(ports of entry)의 기술 예산으로 5억 3,500만달러, 마약성 진통제(fentanyl)의 밀거래 대응 예산으로 4,000만달러 등 배정

## 바. 재정건전화

◇ 향후 10년 동안 대형 법인과 고소득층의 세금 기여도를 높이고 대형 법인(제약 회사, 오일컴퍼니 등)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감축하는 방식을 통해 약 3조달러의 재정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가구에는 추가적인 세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

128) 미 국방부의 2024 태평양 지역 억지력 이니셔티브에서도 약 9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능력 강화 언급

129)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30)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고소득층 최저세율 도입) 상위 0.01%의 고소득층(billionaires)을 대상으로 미실현수익(unrealized income)에 대한 25%의 최저한세율 적용<sup>131)</sup>
  -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현 조세 체계하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중산층보다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
  - 정부는 2017년 세제개혁(세제개혁 전 법인세율: 35%)으로 인해 평균 법인세 실효 세율이 10% 이하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상승이 경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
- (자사주 매입 세금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부과되었던 자사주 매입(buy-backs) 세율 4배(현재: 1% → 안: 4%) 인상
  -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기업의 세율 혜택을 방지하고,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 기대
-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정책 전환) 2017년 세법개혁에서 인하(39.6% → 37%)된 최상위 소득세율 구간을 세법개혁 전 세율(39.6%)로 복귀<sup>132)</sup>
  - 추가로, 소득 1만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을 근로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적용 계획

131) CRFB, "Analysis of the President's FY2024 Budget," 2023.3.9., <https://www.crfb.org/papers/analysis-presidents-fy-2024-budget>, 검색일자: 2023.3.27.

132) 최상위 소득 구간의 수입 기준은 개인 40만달러, 부부합산 45만달러

## V. 영국(133)

□ 2023-24회계연도: 2023년 4월 ~ 2024년 3월

□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3.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speech," 2023.3.15.

HM Treasury, "Chancellor unveils a Budget for growth," 2023.3.15.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factsheet-Labour Market Measures," 2023.3.15.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Factsheet: Cutting & Simplifying Tax for Businesses to Invest and Grow," 2023.3.15.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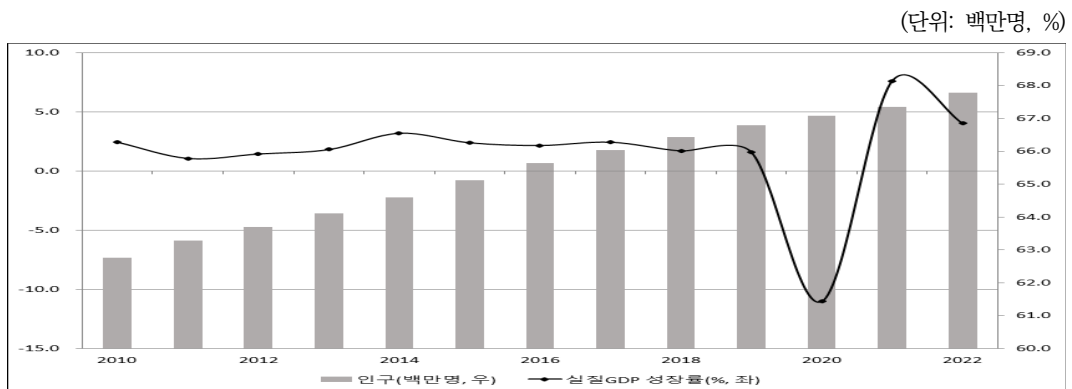
□ 환율: 1파운드 = 약 1,592.18원(2022년 평균)

□ 경제 규모: 경상 GDP 3조 3,517억 달러(2021년 기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68.9%(2022년 기준)

□ 인구: 6,779만명(2022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Stat, 2023.3.17. 추출(<https://stats.oecd.org/>)

133)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2.5.30.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 규모, 수출입의 대 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2022.5.30.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 [요 약]

-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 2024년 1.8%, 2025년 2.5%로 전망
- (재정 전망)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3-24회계연도에 5.1%, 2024-25회계연도에 3.2%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6-27회계연도에 94.8%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수입)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20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58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공공부문 총관리지출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1,72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1,89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 기초) 단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자 감소에 집중하면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2%)를 지원하는 등 균형적 기초를 보임
- (정책 방향)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 즉 물가상승률 반감(halving inflation), 경제 성장(growing the economy), 국가채무 감축 이행(getting debt falling)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 (물가상승률 반감) 에너지 요금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 연장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
  - (경제성장) 고용, 교육, 기업, 지역 균형 발전의 4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계획
  - (국가채무 감축) 책임감 있게 지출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파악하여 높은 물가 압력을 관리하고, 주요 공공서비스 및 정부 우선순위에 지출을 집중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2. 03. 23.	영국 재무부, '2022년 봄 보고서(Spring Statement 2022)' 발표
2022. 03. 23.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2년 3월 경제·재정 전망 발표
2022. 05. 13.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2. 05. 24.	영국 예산책임청, '2022년 복지 지출 보고서(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발표
2022. 05. 26.	영국 재무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지원 패키지 발표
2022. 06. 06.	영국 재무부, 2019-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발표
2022. 07. 07.	영국 예산책임청, '2022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2)' 발표
2022. 09. 23.	영국 재무부, '2022년 성장 계획(The Growth Plan 2022)' 발표
2022. 09. 08., 09. 21., 09. 23.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기업, 에너지 시장 지원 계획 발표
2022. 10. 17.	신임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한 철회 결정 발표
2022. 10. 18.	영국 재무부, 에너지 요금 부담 지원과 중앙은행 자산매입기구 자금 지급을 위한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특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출
2022. 11. 17.	영국 재무부, '2022년 가을 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 발표
2023. 01. 03.	영국 노동·연금부, 2023-24회계연도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금 계획 발표
2023. 01. 09.	영국 재무부, 기업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 제도 발표
2023. 01. 31.	영국 예산책임청,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발표
2023. 02. 02.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상(3.5%→4%) 결정
2023. 02. 21.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의회 제출
2023. 03. 15.	영국 재무부, '2022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에 대한 정부 대응 발표
2023. 03. 15.	영국 재무부, 2023 봄 예산안(Spring Budget 2023) 발표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 2024년 1.8%, 2025년 2.5%로 전망
  - 도매 가스 가격 및 금리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0.2%로, 2022년 11월 전망(-1.4%) 대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기업투자 및 무역의 둔화가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나 정부소비 증가가 이를 상쇄
  -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에너지 및 기타 거래 가능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돌면서 경제성장률은 2024년 1.8%, 2025년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2025년에는 자본공제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해 기업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
- (물가) 2022년 10월 11.1%의 정점을 찍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3년 6.1%에서 2024년 0.9%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의 빠른 하락으로 인해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1%로, 2022년 11월 전망(7.4%) 대비 1.2%p 하향 조정
  - 에너지 및 교역품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4년 0.9%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6년 중반까지 0%대에서 움직이다가 목표치인 2%로 회귀
- (노동시장)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실업률은 2023년 4.1%에서 2024년 4.4%로 상승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돼 2027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 실질 GDP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4년 실업률은 4.4%(약 150만 명)로, 2022년 11월 전망(4.9%) 대비 하향 조정
  -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은 2022년 4분기 60.8%에

서 2024년 2분기 60.0%로 하락한 후 2027년 4분기까지 60.4%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4분기 고용은 약 3,28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sup>134)</sup>보다 12만명(0.4%) 감소하였는데,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4분기에는 7만 5천명(0.2%) 더 하락하고, 이후 3,380만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V-1〉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GDP 성장률	7.6	4.0	-0.2	1.8	2.5	2.1	1.9
1인당 실질GDP 성장률	7.2	3.4	-0.8	1.3	2.0	1.7	1.5
잠재성장률	-	-	2.5	1.7	1.7	1.7	1.8
<b>GDP 주요 구성요소</b>							
가계소비 <sup>1)</sup>	6.2	5.4	-0.8	1.5	1.8	1.7	1.9
일반정부소비	12.5	1.9	3.7	1.6	1.2	1.5	1.9
총 고정투자	6.1	7.7	-1.6	0.7	3.5	2.1	-0.4
기업투자	0.9	9.9	-2.8	1.3	6.1	1.9	-1.9
일반정부투자	5.3	2.8	12.3	0.4	-3.3	-1.1	-1.4
민간주택투자 <sup>2)</sup>	16.9	6.6	-7.4	-0.1	3.4	4.6	2.9
재고 변화 <sup>3)</sup>	1.0	0.0	-0.4	0.0	0.0	0.0	0.0
수출	2.2	10.3	-6.6	-0.3	1.1	0.7	0.4
수입	6.2	12.6	-4.0	-1.3	-0.4	-0.5	-0.9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6	9.1	6.1	0.9	0.1	0.5	1.6
고용률(4분기 기준)	60.6	60.8	60.2	60.1	60.2	60.3	60.4
고용(백만명)	32.4	32.7	32.8	32.8	33.1	33.4	33.7
실업률(LFS)	4.5	3.7	4.1	4.4	4.3	4.2	4.1
생산성(시간당 산출량)	1.0	0.4	0.1	1.0	1.3	1.2	1.1

주: 1) 가계 및 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

2) 비생산자산의 이전비용 포함

3)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p)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3, Table 1.4;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Chart 2.15의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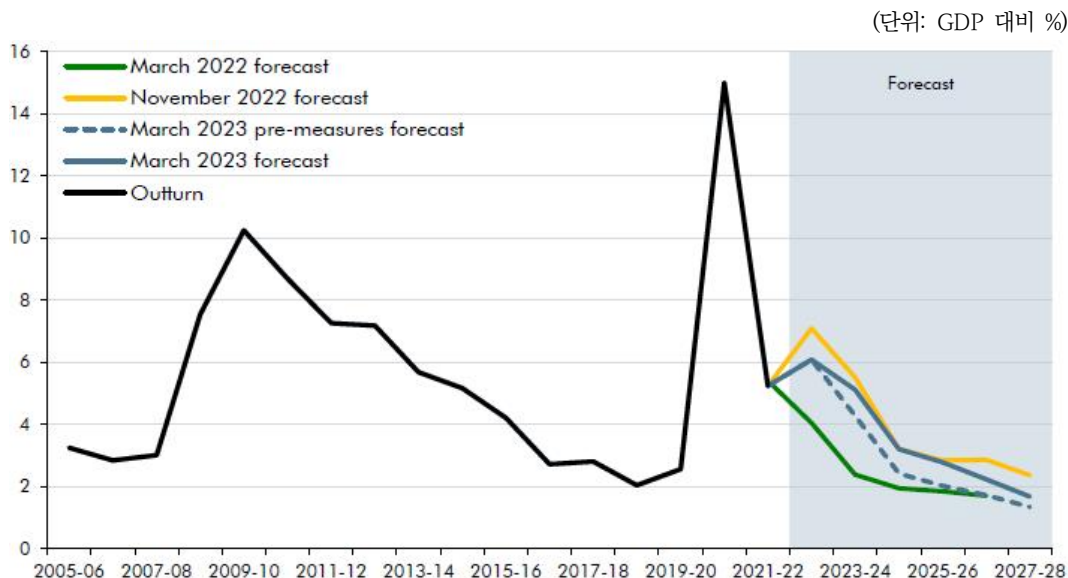
134) 2019년 4분기 고용은 약 3,290만명

## 나. 재정 전망

### □ 재정수지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이 종료되고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3-24회계연도에 5.1%, 2024-25회계연도에 3.2%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20-21회계연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팬데믹으로 인해 15.0%로 급증하였으나 2021-22회계연도에는 5.2%로 급격히 하락
  - 2022-23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차입은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인해 2022년 11월 전망 대비 247억파운드(GDP 대비 1.0%) 하향 조정
- (경상예산 적자) GDP 대비 경상예산 적자는 2022-23회계연도에 3.7%에서 2026-27회계연도까지 균형에 근접하고, 2027-28회계연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

[그림 V-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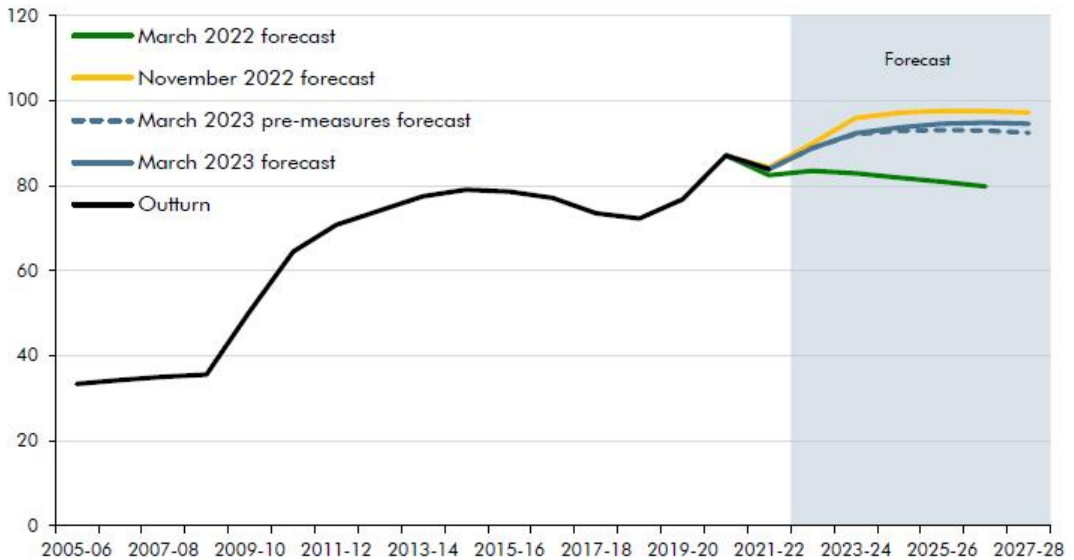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Chart 1.5

□ 채무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6-27회계연도에 94.8%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명목 GDP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채무 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 11월 전망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은 전망 기간 평균 2.7% 하향 조정

[그림 V-2]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Chart 1.6

- (공공부문 순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3-24회계연도에 103.1%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후 나머지 전망 기간 매년 감소해 2026-27회계연도에는 96.9%에 이를 전망으로, 이는 2020-21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

〈표 V-2〉 주요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b>수입·지출</b>							
공공부문 경상수입(a)	39.3	40.7	41.1	41.4	41.2	41.5	41.7
총관리지출(TME)(b)	44.5	46.8	46.2	44.6	44.0	43.8	43.4
공공부문 경상지출(c)	40.0	42.2	41.0	39.6	39.1	39.2	38.9
공공부문 순투자(d)	2.1	2.3	2.9	2.7	2.5	2.3	2.1
감가상각(e)	2.4	2.3	2.3	2.3	2.3	2.4	2.4
<b>재정적자</b>							
공공부문 순차입(b-a)	5.2	6.1	5.1	3.2	2.8	2.2	1.7
경기조정 순차입	6.1	6.8	4.5	2.4	2.4	2.1	1.7
경상예산 적자(c+e-a)	3.1	3.7	2.3	0.5	0.3	0.0	-0.4
기초재정수지 적자	3.1	2.0	2.2	0.9	0.4	-0.5	-1.1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	1.9	1.5	3.2	1.6	0.7	-0.4	-1.1
<b>채무</b>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sup>1)</sup>	83.9	88.9	92.4	93.7	94.6	94.8	94.6
공공부문 순채무 <sup>1)</sup>	96.9	100.6	103.1	102.4	99.1	97.6	96.9
<b>국제 비교</b>							
일반정부 순차입	6.2	6.0	5.6	3.7	2.9	2.6	2.1
일반정부 총채무	105.2	103.7	106.9	107.8	108.0	108.3	107.7

주: 1) 3월 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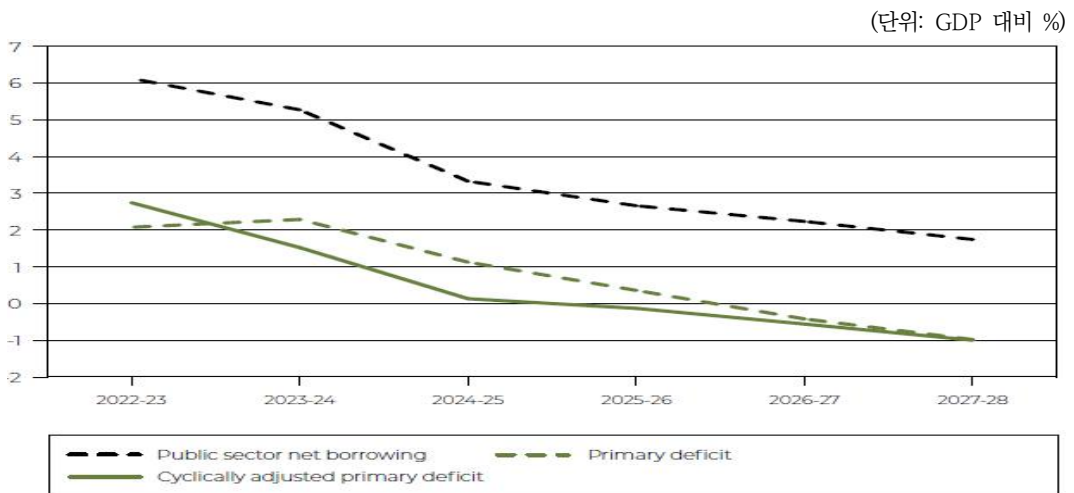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Table A.9 발췌

## 2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 가. 재정 기조

- 단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자 감소에 집중하면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2%)를 지원하는 등 균형적 기조를 보임
  - 정부는 최근 가계 및 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는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은 종료될 예정
  - 정부는 그간의 적극적인(generous)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용을 낮추고 중기적으로 채무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
  - 이번 예산안에는 지속가능하고 물가상승 없는 경제성장(non-inflationary growth)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포함(〈표 V-3〉 참고)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2-23회계연도에 GDP 대비 6.1%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재정 목표에 따라 전망 기간 전반에 걸쳐 감소할 전망(〈그림 V-3〉 참고)
    - 경기순환의 영향을 제거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중기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경기 부양책이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있음을 시현

[그림 V-3] 재정 기조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3, Chart 1. 2

## 나. 정책 방향

-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 즉 물가상승률 반감(halving inflation), 경제성장(growing the economy), 국가채무 감축 이행(getting debt falling)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sup>135)</sup>
  - (물가상승률 반감) 에너지 요금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 연장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
  - (경제성장) 고용, 교육, 기업, 지역 균형 발전의 4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계획
    - (고용) 장애인과 장기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비경제활동의 원인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 해결에 힘쓰며,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모에게 연 38주의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 시행
    - (교육) 선호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영국 경제를 고숙련, 고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투자
    - (기업)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sup>136)</sup>의 한시적 도입으로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R&D 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
    - (지역 균형 발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 전역의 12개 성장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재집중 투자지역 프로그램(refocused Investment Zone programme)’ 등을 시행
  - (국가채무 감축) 책임감 있게 지출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파악하여 높은 물가 압력을 관리하고, 주요 공공서비스 및 정부 우선순위에 지출을 집중

135) 세부 정책 결정은 본 보고서의 ‘4. 주요 정책 결정’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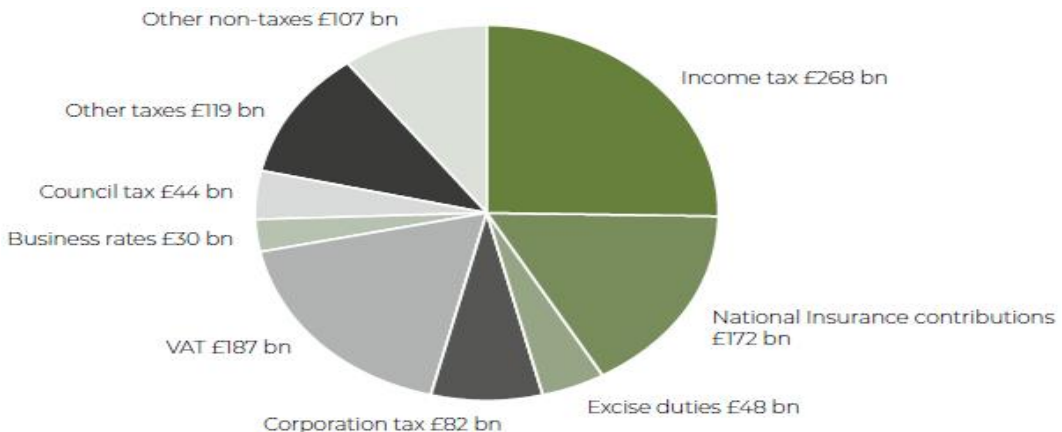
136) 공장과 기계 투자 시 첫해에 100%의 자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공제 혜택 적용(2023.4.1.~2026.3.31. 적용)

###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 가. 수입 전망

-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20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58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이후 강력한 반등을 이어가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수입이 증가하여, 2021-22 회계연도와 전망 기간 사이에 GDP 대비 수입이 2.5%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23회계연도 공공부문 경상수입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명목 GDP 성장률 7.1%를 상회하는 수치
  -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민계정 조세수입 비율)은 2021-22회계연도에 35.5%에서 2027-28회계연도에는 3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역대 최고치로, 팬데믹 이전 대비 4.7%p 높은 수치
  - 2023-24회계연도 공공부문 경상수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2,680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환급분 포함)<sup>137)</sup> 1,870억파운드, 국민보험기여금 1,723억파운드, 법인세 820억파운드 등의 순

[그림 V-4] 2023-24회계연도 유형별 공공부문 경상수입



주: 부가가치세 금액은 환급분을 포함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3, Chart B.1

137) 부가가치세에는 환급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분류체계상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재정지출로 분류되어 수입에서도 제외되지 않기 때문임(표 V-4) 참고

〈표 V-3〉 공공부문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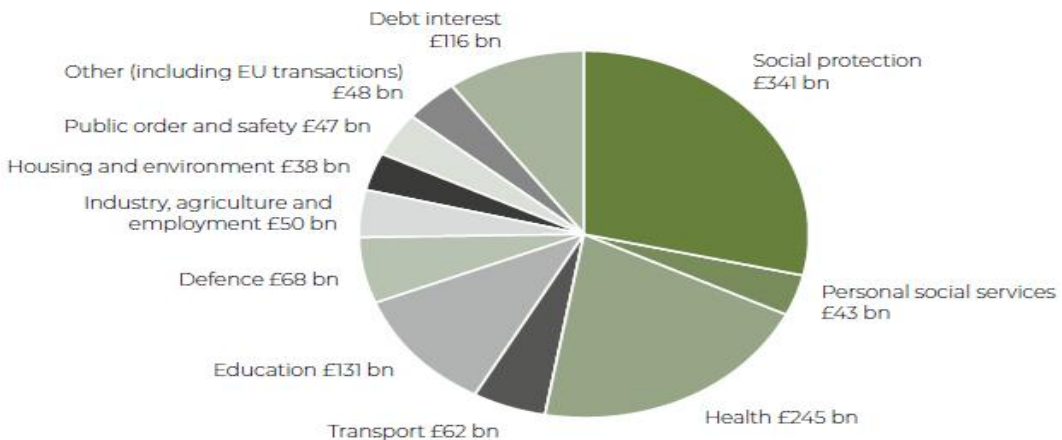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소득세	225.0	249.8	268.0	282.2	293.2	306.1	321.2
국민보험기여금(NICs)	159.7	176.7	172.3	176.4	181.3	187.2	194.2
부가가치세	143.3	159.6	162.2	167.9	172.5	176.6	182.3
부가가치세 환급(refunds)	22.4	24.3	25.1	25.5	26.2	26.9	27.8
법인세	68.2	74.4	82.0	90.7	96.6	106.9	112.1
석유세	-0.6	-0.4	-0.2	-0.2	-0.2	-0.1	-0.1
연료세	25.9	24.8	24.3	26.6	26.3	26.0	25.9
비주거용 재산세	25.4	28.5	29.9	35.1	35.3	35.7	35.6
지방세(Council tax)	40.0	42.1	44.4	46.7	49.1	51.7	54.4
자본이득세	15.3	18.1	17.8	19.5	21.2	23.4	26.1
상속세	6.1	7.0	7.2	7.2	7.4	7.8	8.4
부동산취득세	15.4	17.3	12.6	12.4	14.9	17.6	19.7
주식취득세	4.4	3.9	4.2	4.4	4.5	4.6	4.8
담배세	10.2	10.0	10.4	10.3	10.1	9.8	9.7
주세	13.2	12.4	13.1	13.9	14.5	15.1	15.8
항공여객세	1.2	3.3	3.8	4.4	4.7	4.8	5.1
보험료세	6.8	7.3	7.6	7.6	7.6	7.7	7.8
기후변화세	1.9	2.1	1.9	2.0	1.8	1.9	2.2
은행세(Bank levy)	1.3	1.4	1.3	1.3	1.3	1.3	1.3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2.3	2.4	1.2	0.9	0.9	0.9	0.9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3.3	3.5	3.7	3.8	3.9	4.0	4.1
디지털서비스세	0.6	0.6	0.7	0.7	0.8	0.9	0.9
기타 국세(HMRC taxes)	9.7	10.8	10.5	10.4	10.5	10.6	10.9
자동차소비세	7.1	7.4	8.0	8.0	8.3	8.7	9.4
면허료 수입	3.8	3.8	3.7	4.0	4.1	4.1	4.1
환경부담금	6.6	7.6	7.6	7.9	8.6	8.6	5.8
배출거래제	1.0	6.1	6.2	6.1	6.3	6.2	6.0
에너지 이익 부담금(횡재세)	0.0	5.1	5.6	4.9	4.0	3.6	2.7
전력 발전 추가부담금	0.0	0.8	3.3	2.7	2.1	2.7	2.4
기타 조세	9.2	11.5	12.2	12.2	12.1	11.9	11.9
<b>국민계정 조세수입</b>	<b>828.8</b>	<b>922.1</b>	<b>950.5</b>	<b>995.6</b>	<b>1,030</b>	<b>1,073</b>	<b>1,113</b>
이자 및 배당	24.1	32.5	40.5	38.6	35.2	35.9	39.5
총 운영수지	62.2	63.4	64.4	67.6	70.0	72.4	75.1
기타 수입	2.6	1.7	2.1	2.0	2.2	2.2	2.3
<b>총 경상수입</b>	<b>917.7</b>	<b>1,020</b>	<b>1,058</b>	<b>1,104</b>	<b>1,137</b>	<b>1,184</b>	<b>1,230</b>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Table A.5 발췌

## 나. 지출 전망

- 공공부문 총 관리지출은 2022-23회계연도에 1조 1,72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조 1,89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지출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21회계연도에 53.0%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1-22회계연도에 44.5%로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지원 조치,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2022-23회계연도에는 다시 46.8%, 2023-24회계연도에는 4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지원 조치가 종료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이자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2024-25회계연도의 GDP 대비 지출은 44.6%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2023-24회계연도에 4,217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62억파운드) 증가한 후, 2027-28회계연도에는 4,589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본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2023-24회계연도에 96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98억 파운드(11.4%) 증가한 후, 2027-28회계연도에는 976억파운드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 2023-24회계연도 공공부문 총 관리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 보호가 3,410억파운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보건 2,450억파운드, 교육 1,310억파운드, 채무이자 1,160억파운드 등의 순

[그림 V-5] 2023-24회계연도 기능별 공공부문 총 관리지출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3, Chart B.2

〈표 V-4〉 공공부문 총 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b>공공부문 경상지출</b>							
자원 DEL	413.8	415.5	421.7	426.7	435.8	446.2	458.9
자원 AME	521.9	640.3	633.9	629.0	644.3	669.5	689.0
사회복지 지출	244.3	261.5	294.5	307.0	316.8	323.3	330.5
지방재정 경상지출	45.3	56.6	60.3	63.9	64.5	67.3	70.0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APF 채무이자 삭감)	56.4	114.7	94.0	77.3	76.9	88.7	96.5
스코틀랜드정부 경상지출	41.2	39.9	41.4	42.0	42.5	43.4	44.9
EU분담금	8.3	8.8	6.5	1.0	1.4	0.8	0.4
순공공서비스연금 지출	3.3	4.2	7.9	9.8	9.9	9.0	7.9
기업 및 기타 세액공제	8.0	9.5	10.2	10.6	10.9	11.4	11.9
BBC 경상지출	3.9	4.2	4.2	4.4	4.2	4.5	4.5
국가복권 경상보조금	1.4	1.3	1.4	1.4	1.4	1.4	1.3
일반정부 귀속연금	1.1	0.8	0.8	0.9	0.9	0.9	0.9
공기업채무이자	0.5	0.5	0.5	0.5	0.5	0.5	0.5
비가정용 에너지 지원	0.0	6.7	1.1	0.0	0.0	0.0	0.0
가정용 에너지 지원	0.0	23.0	4.3	0.0	0.0	0.0	0.0
공공부문 연금제도 지원	19.2	20.2	21.2	22.0	22.9	23.9	24.8
감가상각	48.3	50.4	52.6	55.1	57.3	59.6	62.1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sup>1)</sup>	20.0	21.3	22.1	22.7	23.4	24.1	24.9
환경부담금 <sup>1)</sup>	8.4	8.6	8.8	9.1	9.7	9.7	6.8
기타 경상지출	19.0	5.1	1.4	1.3	1.3	1.4	1.4
기타 회계조정	-6.7	2.9	0.8	-0.1	-0.2	-0.3	-0.4
<b>총 공공부문 경상지출</b>	<b>935.7</b>	<b>1,056</b>	<b>1,056</b>	<b>1,056</b>	<b>1,080</b>	<b>1,116</b>	<b>1,148</b>

〈표 V-4〉의 계속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b>공공부문 투자</b>							
자본 DEL	77.0	86.3	96.1	96.9	97.1	97.5	97.6
자본 AME	27.4	29.9	37.5	36.6	36.4	34.0	34.0
지방재정 자본지출	10.7	9.7	9.6	9.3	9.1	9.1	9.2
공기업 자본지출	10.5	11.6	11.6	11.9	12.1	12.1	12.2
학자금 대출	12.7	2.0	10.1	9.0	7.9	7.2	7.0
공공부문 연금제도 지원	0.6	0.3	0.3	0.3	0.3	0.3	0.1
스코틀랜드정부 자본지출	4.5	5.4	5.3	5.3	5.2	5.2	5.1
세무소송	0.0	0.2	0.2	1.2	2.4	0.0	0.4
기타 자본지출	-5.4	1.8	0.7	0.8	0.8	0.7	0.6
기타 회계 조정	-6.2	-1.0	-0.4	-1.1	-1.4	-0.6	-0.6
<b>총 공공부문 투자</b>	<b>104.4</b>	<b>116.2</b>	<b>133.6</b>	<b>133.5</b>	<b>133.4</b>	<b>131.5</b>	<b>131.7</b>
감가상각 공제	-55.1	-57.5	-59.9	-62.5	-64.8	-67.1	-69.5
공공부문 순투자	49.3	58.7	73.6	70.9	68.7	64.5	62.1
<b>총 관리지출</b>	<b>1,040</b>	<b>1,172</b>	<b>1,189</b>	<b>1,189</b>	<b>1,214</b>	<b>1,247</b>	<b>1,280</b>

주: 1) 환경부담금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회계 조정 등을 포함하면 수입과 상계(offset)되어 재정 중립적임 (neutral for borrowing)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Table A.7 발췌

## 4 주요 정책 결정

- (개요) 정부는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 즉 물가상승률 반감(halving inflation), 경제 성장(growing the economy), 국가채무 감축 이행(getting debt falling)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 (정책 결정의 재정적 영향)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공공부문 순차입)에 미치는 영향은 2022-23회계연도에 약 13억 3,500만파운드, 2023-24회계연도에 218억 5,000만파운드로 추계
  - 주요 지출 정책 결정으로 2022-23회계연도에 1천만파운드, 2023-24회계연도에 85억 4,500만파운드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조세 정책 결정으로 2022-23회계연에 13억 4천만파운드의 세입이 감소하고, 2023-24회계연도에 133억 500만파운드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 순차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의 회계연도별 비용과 수입 영향은 <표 V-5>를 참고

<표 V-5> 2023 봄 예산안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b>경제성장: 고용 및 교육</b>								
<b>맞벌이 부모 지원</b>								
1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 무상보육 시간 및 정부지원 비율 확대, 공급 측면 개혁 시행	지출	0	-240	-2,410	-4,240	-5,170	-5,240
2	통합 보육: 패스파인더 제도		0	-5	-230	-110	0	0
3	보육: 보육교사 지원	지출	0	-5	-5	0	0	0
4	DWP: 이직하는 부모를 위해 통합급여 보육 지원금 선지급	지출	0	-100	-95	-75	-70	-60
5	DWP: 통합급여의 보육비 최대 지원 확대	지출	0	-50	-85	-75	-80	-85
<b>장애 및 보건</b>								
6	DWP: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	지출	0	-90	-250	-230	-195	-160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7 DWP: 무능력급여 청구인을 위한 근로코치 시간 추가	지출	0	-90	-145	-240	-220	-205
8 DWP: 장애급여백서 개혁	지출	0	0	0	0	-10	-35
9 DWP: WorkWell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출	0	-10	-45	-65	0	0
10 DWP: 직업보전: 중소기업 보조금 시범사업 확대	지출	0	-10	-15	0	0	0
11 노동시장 시범사업 및 평가 지원	지출	0	-10	-30	0	0	0
12 건강환경 측면에서 고용상담원 확대	지출	0	-5	-20	-30	-45	-50
13 정신건강, 근골격계 및 심혈관 질환을 위한 디지털 보건 혁신	지출	0	-70	-75	-55	-55	-55
14 근골격계 지원 허브 확대	지출	0	0	-5	-5	-5	-5
15 VAT: 처방약에 대한 영세율 연장	조세	0	*	-5	-5	-5	-5
16 VAT: 의료 전문가가 감독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약사로 확대	조세	0	-5	-10	-10	-10	-10
<b>복지 및 실업</b>							
17 DWP: 부부 소득기준 제거	지출	0	0	-40	-40	-35	-30
18 DWP: 유아 돌보미를 위한 추가 지원	지출	0	-30	-25	-25	-25	-20
19 DWP: 법정생활임금의 주 15시간 소득기준에서 18시간으로 상향 조정	지출	0	-45	-55	-60	-55	-45
<b>고령 근로자</b>							
20 평생공제(LTA): 2023.4월부터 초과 한도에 대한 세금 면제, 2024.4월부터 한도 폐지	조세	0	-135	-210	-770	-800	-835
21 연간공제(AA): 6만파운드로 증액, 개방형과 폐쇄형 공공서비스 연금제도 간 연금 투입액 집계 허용	조세	0	-55	-200	-270	-270	-290
22 Money Purchase Annual Allowance(MPAA): 2023.4월부터 1만파운드로 상향 조정	조세	0	-15	-35	-40	-40	-40
23 DWP: Midlife MOT에 대한 접근 개선 및 확대	지출	0	-35	-20	-5	-5	-5
<b>숙련</b>							
24 부문-기반 근로 아카데미 프로그램: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2023-24과 2024-25회계연도에 8만개까지 확대	지출	0	-15	-25	0	0	0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5 Skills Bootcamps: 6.4만개소로 확장하여 직장 복귀 지원(2024-25)	지출	0	0	-40	-40	-40	-40
26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출	0	-10	0	0	0	0
<b>경제성장: 기업</b>							
27 자본공제: 3년 동안 주요물 자산의 경우 100%, 특별요율 자산의 경우는 50% 공제	조세	-1,200	-7,955	-10,660	-8,680	-1,550	+2,225
28 R&D 조세 감면: R&D 집약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조세 감면	조세	0	-40	-285	-455	-505	-535
29 R&D 조세 감면: 해외지출 제한 1년 연기	조세	0	-10	-105	-75	-15	0
30 창작 공제: 시청각 조세 감면을 세율 인상과 함께 지출 공제로 개혁	조세	0	*	-15	-40	-45	-50
31 문화 공제: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세 감면의 높은 요율을 2년 연장	조세	0	-10	-90	-140	-90	-20
32 지역사회 투자세 감면: 공인 CDFI 기관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 확대	조세	0	*	-5	-5	-10	-15
33 부동산 투자 신탁: 에든버러 개혁 시행	조세	0	-25	*	*	*	*
34 인공지능 챌린지: 세계 최고의 AI 연구에 대해 보상	지출	0	-5	-5	0	0	0
<b>경제성장: 지역 균형 발전</b>							
35 지역 발전 및 홍보 지원	지출	0	-45	-70	-85	-50	0
36 낫홀 기금: 지방도로 유지·개선을 위한 자원 확대	지출	0	-235	0	0	0	0
37 수영장 지원 기금: 공공 수영장의 비용 압력 및 에너지 효율 지원	지출	0	-70	0	0	0	0
38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 조직 지원: 서비스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자금 지원	지출	0	-105	-15	0	0	0
<b>물가상승률 반감: 가계·기업 지원</b>							
39 연료세: 5펜스 인하 12개월 연장, 2023-24회계연도에 RPI로 상향 조정 없음	조세	-45	-4,845	-2,610	-2,575	-2,550	-2,540
40 주세: 23.8월까지 동결 후 RPI로 상향 조정, 감면 조정(맥주 및 사과주 9.2%, 기타 발효음료 및 증류주 23%로 상향 조정)	조세	-155	-405	-75	-80	-80	-85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41 에너지 가격 보장: 2023.6월까지 2,500파운드 기준 연장	지출	0	-2,950	0	0	0	0
42 에너지요금 할인 제도: 비가정용 계약에 대한 국내 열 네트워크 고객 지원	지출	0	-380	0	0	0	0
43 에너지 가격 보장제 변경 및 기타 에너지 지원 관련 기술적 변경	지출	0	-500	0	0	0	0
44 기후변화협정 제도: 2년 연장, 신규참여자에게 개방, 매수가격 £25/tCO2e로 인상	조세	0	*	-20	-295	-315	0
<b>지출 및 복지</b>							
45 국방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	지출	0	-2,000	-3,000	-2,010	-2,020	-2,035
46 BBC 월드 서비스 지원	지출	0	-10	-10	0	0	0
47 DWP: 중증장애 부가금 전환 요소 확대	지출	0	*	*	-5	-5	-5
48 DWP: 통합급여 잉여소득 기준 2,500파운드 유지	지출	0	-55	0	0	0	0
49 지축 지원: 18개월 연장	지출	0	0	0	-15	-30	-15
50 참전용사 지원	지출	0	-10	-15	-10	0	0
51 자살예방기금	지출	0	-5	-5	0	0	0
52 DHSC: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 기관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지출	0	-5	-5	0	0	0
53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추가 지원	지출	0	-20	-15	0	0	0
54 시설퇴소아동 지원: 근거리 자립 프로그램 확대	지출	0	-10	-10	-10	-10	-10
55 공공사업 대출 위원회: 주택수입계정 금리 신규 할인	지출	0	-5	-10	-10	-10	-10
<b>기타 조세</b>							
<b>세율 및 구간 확정</b>							
56 골게 부담금: 톤당 2파운드 동결(2023-24)	조세	0	-40	-45	-45	-45	-50
57 대형 수송차량 부담금: 2023.8월부터 개혁된 부담금 도입	조세	0	-45	-65	-65	-70	-70
58 자동차 소비세: 대형 수송차량 동결(2023-24)	조세	0	-25	-25	-25	-25	-25
5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예금한도 20,000파운드 유지(2023-24)	조세	0	*	+35	+75	+105	+140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60 저축소득 초기세율 한도: 5,000파운드 유지 (2023-24)	조세	0	+10	+25	+25	+25	+25
61 담배세: 손말이 담배세 4% 추가 인상 및 최저세 1% 추가 인상	조세	+5	+25	+25	+25	+25	+30
62 도박세: 총 게임수익 구간 유지(2023-24)	조세	0	+5	+5	+5	+5	+5
63 적격 간병 감면: 2023.4월부터 인상(물가상승률과 연동)	조세	0	0	-15	-10	-10	-10
<b>조세격차 및 조세행정 문제 대응</b>							
64 HMRC: 채무 관리 능력에 대한 투자	조세	+115	+330	+395	+200	+165	+165
65 자본이익: 평가기간 변경	조세	0	0	0	0	0	+5
66 암호화자산에 대한 자체 평가 양식 수정	조세	0	0	0	+10	+10	+10
67 성과보수 규정에 대한 선택적 발생주의 도입	조세	0	+80	+10	+10	+10	+10
68 저소득 신탁 및 유산: 보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세	0	0	0	+15	+10	+10
69 자선 감면: 2023.4월부터 영국 이외의 자선단체, 기부자 및 공급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철회	조세	0	0	+5	+10	+10	+10
70 인지세: 등록된 사회적 임대인에 대한 면세 수정	조세	0	-15	0	0	0	0
<b>기준에 발표된 정책</b>							
중략	-	-	-	-	-	-	-
<b>정책 결정 합계</b>	-	-1,335	-21,850	-21,405	-21,385	-14,910	-10,420
지출 정책 결정 합계	-	+10	-8,545	-7,555	-8,035	-8,590	-8,550
조세 정책 결정 합계	-	-1,340	-13,305	-13,845	-13,350	-6,315	-1,870

주: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많은 정책이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기준으로 조세 또는 지출로 분류

3. DWP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HSC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MRC는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을 의미

4.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5. '기준에 발표된 정책'의 세부내역((13개)은 원문 자료의 표를 참고 바람

자료: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3*, 2023.3, Table 4.1 발췌

## 가. 물가상승률 반감(Halving inflation)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압박을 받는 가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시행
  - 2023년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에너지 가격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의 연간 에너지 비용 상한(2,500파운드) 적용을 3개월 연장
  - 선불 계량기를 사용하는 400만 이상의 가구에 부과되었던 에너지 요금 추가금 (premium)<sup>138)</sup>을 없애고, 에너지 가격 보증제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이체 고객과 동일한 요금 단가를 적용
  - 정부의 생활비 지원 규모는 2022-23회계연도와 2023-24회계연도 동안 가구당 연평균 3,300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시스템 투자) 미래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 Great British Nuclear를 시작하여 새로운 원자력 건설을 지원하고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위해 200억파운드의 가용 재원을 마련
  - 에너지 효율을 장려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정 제도를 2년 연장
-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 연료세 11펜스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5펜스 인하를 12개월 연장
  - 일반 맥주 한잔에 부과되는 주세는 동결하고, 8월부터 맥주와 사과주(cider)에 적용되었던 주세 감면을 5%에서 9%로 확대(Draught Relief)

## 나. 경제성장(Growing the economy)

- (고용) 노동시장 복귀를 돕고, 근로시간을 늘리며,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
  - (보육) 부모들의 직장 복귀가 쉽도록 보육 관련 지원을 제공

138) 선불 계량기 이용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에너지 요금 단가가 적용

- 맞벌이 부모에게 자녀가 생후 9개월부터 취학할 때까지 연간 38주 동안 주당 30시간의 무료 보육서비스를 단계적으로<sup>139)</sup> 제공
  - 연 38주 이상의 무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을 분산하여 활용 가능
  - 또한 무료 보육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보상을 대폭 인상하여 2022년 2억 4백만파운드를 시작으로 2027-28회계연도까지 41억파운드를 추가 지원
- 통합(Wraparound) 보육의 하나로, 2024년 9월부터 2년간 지방정부에 2억 8,900만파운드를 지원하여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
-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청구인들이 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릴 때 보육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선지급하여 저소득 가정을 지원
  - 또한 통합급여 보육비용 지원금 한도를 한 자녀 기준 646파운드에서 951파운드로, 두 자녀 기준 1,108파운드에서 1,630파운드로 인상
- (통합급여 청구인) 통합급여 청구인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더 높은 수입을 받는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로 코치 지원(work coach support) 및 구직 요건(work search requirement)을 확대
  - (행정 소득 임계값(AET)<sup>140)</sup> 인상) 법정생활임금<sup>141)</sup>을 15시간 적용하여 산정하던 행정 소득 임계값을 18시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근로 코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대
  - (구직 요건 확대) 구직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70만명 이상의 통합급여 청구인들의 구직 활동이나 구직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통합급여 제재 강화) 근로 코치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과 제재 행정절차의 자동화

139) • 2024년 4월부터 2세의 자녀를 둔 모든 맞벌이 부모들은 주당 15시간 이용

• 2024년 9월부터 생후 9개월에서 3세의 자녀를 둔 모든 맞벌이 부모들은 주당 15시간 이용

• 2025년 9월부터 생후 9개월에서 3세의 자녀를 둔 모든 맞벌이 부모들은 주당 30시간 이용

140) Administrative Earnings Threshold(AET): 통합급여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코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수입의 임계값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AET 미만인 청구인은 근로 코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Intensive Work Search 그룹에 속하고, AET 이상인 청구인은 Light Touch 그룹에 속하게 됨. AET는 월소득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현재 15시간)에 법정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AET = \frac{52\text{주}}{12\text{달}} \times 15\text{시간} \times \text{법정생활임금}$ )

141) National Living Wage: 시간당 최저임금의 일종으로 2016년 4월부터 적용하였는데, 기존 최저임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한 형태

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하지 않는 통합급여 청구인 등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시행

- (Youth Offer<sup>142</sup> 연장) Youth Offer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연장해서 시행하여 교육이나 고용, 훈련을 받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큰 청소년들의 구직을 지원
  - 또한 젊은 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해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통합급여 청소년 청구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Youth Offer 자격을 확대
- (장애인 및 장기 질환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률 격차<sup>143</sup>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 의욕은 있으나 장기 질환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장기 질환자들을 지원 (특히 심혈관 질환, 정신건강 및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
  - 장애인 수당 청구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근로 능력 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를 없애고, 재정적 지원이 중단될 염려 없이 근로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센터와 의료서비스 및 기타 지역조직을 연결<sup>144</sup>하여 구직자, 수당 청구인, 건강상 문제로 실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포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
  - 근골격계 서비스에 고용 고문을 도입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개인이 직장에 복귀하거나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커뮤니티 허브와 레저 센터를 근골격계 질환 허브로 전환하여 더 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가보건서비스(NHS) 웹사이트 및 앱에서 정신건강 및 근골격계 상태를 관리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한 건강 관리를 지원
- (고령 근로자) 장기 근로 및 직장으로의 복귀를 지원
  - 연금저축에 대해 평생 공제받을 수 있는 평생공제(Lifetime Allowance) 한도의 경우,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금은 2023년 4월부터 면제되고, 2024년 4월부터는

142)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

143) 2022년 29.8%p로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

144) WorkWell Partnership

### 한도 폐지

- 연간공제(Annual Allowance) 한도는 현행 4만파운드에서 6만파운드로 인상하여, 국가보건서비스(NHS) 임상의와 같은 고숙련자들이 느끼는 상당한 조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그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장려
- 은퇴 전 가능한 최상의 재정, 건강, 직업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Midlife MOT<sup>145)</sup>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확대
- (이민) 이민정책을 통해 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이동성(business mobility)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민정책 자문위원회<sup>146)</sup>의 권고를 수용하여, 건설 및接客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직업군 목록<sup>147)</sup>에 5개의 건설 직종을 추가
  -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한 단기 출장비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발급 절차를 간소화
- (교육) 청년과 성인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Returnerships)’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숙련(skill)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고령 근로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직장 복귀 경로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
  - 8,000여개의 Skills Bootcamp<sup>148)</sup> 추가 배치에 3,440만파운드를 지원하여 건설 및 디지털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재교육 기회를 제공
  - 2,880만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여 부문-기반 근로 아카데미(Sector-Based Work Academy Programme) 수를 2024-25회계연도까지 4만개 확대
    - 이를 통해 실직자의 수요가 많은 부문에서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교육과 업무 경험을 제공

145) 40~60대 노동자의 주요 영역(일, 건강, 재정관리 등)의 적극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

146)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147) Shortage Occupation List(SOL)

148)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센터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16주의 훈련을 제공하고 모든 과정 수료 시 취업 면접을 보장

- 1,150억파운드를 투입해 전쟁을 피해 영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어 집중과정을 제공하고 고용을 지원(최대 1만명 대상)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공제를 전환하고, R&D 지원을 확대하며, 소기업을 위한 조세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등 세계에서 조세 체계의 경쟁력을 확보
  -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를 통해 공장과 기계 투자 시 첫해에 100% 자본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 공제율(6%)이 적용되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50% 공제 혜택을 적용(2023.4.1.~2026.3.31.)
    - 3년 동안 270억파운드 상당의 자본공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법인세가 19%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sup>149)</sup> ‘투자비용 즉시 공제’와 기존 ‘특별공제’<sup>150)</sup>의 감면 효과는 거의 동일(1파운드 투자 당 25펜스 감면)
      - 특별공제의 경우, 1파운드×130%×19%=24.7펜스
      - 투자비용 즉시 공제의 경우, 1파운드×100%×25%=25펜스
  - 2023년 4월부터 2만여 개의 R&D 집약적 기업<sup>151)</sup>을 지원하는 연간 5억파운드 규모의 패키지를 실시
    - 적격 손실 R&D 집약적 기업은 100파운드 투자 당 27파운드를 국세청에 청구 (R&D 집약적이 아닌 손실 기업은 100파운드 투자 당 18.6파운드를 청구)
      - 제약 및 생명과학 산업에서 약 1,000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분야에서 약 4,000개, 기타 제조업에서 약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소기업이 더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조세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영국 550만개 소기업이 성장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
    - 옵션 부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참여 기업의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기업 경영진 인센티브<sup>152)</sup> 제도를 변경

149) 2021년 봄 예산안에서 2023년 4월부터 법인세 인상을 계획

150) super-deduction: 신규 공장 및 장비 투자 시 첫해에 130%의 자본공제 혜택 부여(2021.4.1.~2023.3.31.) 특별공제 이전의 공제율은 18%

151) 적격 R&D 지출이 전체 지출의 4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의미

- 2023년 4월 6일부터 근로시간 선언<sup>153)</sup>에 서명하기 위한 요건을 없애고 옵션 계약에 주식 제한의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
  - 수출입 세관 절차 및 세관·소비세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관리 부담을 줄이고 중복 프로세스를 제거
  - 창작 부문에 대해 조세 감면 개혁을 하여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속적인 경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계적 수준의 작품이 영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
  - 인공지능 연구 자원 및 엑사스케일 컴퓨터에 대해 9억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고, 10년 양자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25억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 (지역 균형 발전) 영국 전역의 성장 수준을 높이고 모든 곳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
-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전역의 4개 클러스터를 포함해 영국 전역 12개 성장 클러스터를 촉진하기 위해 ‘재집중 투자구역 프로그램(refocused investment zone programme)’을 도입
    - 12개 클러스터는 주요 미래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 각 English Investment Zone에 조세 감면 및 보조금을 포함해 5년에 걸쳐 8천만파운드 상당을 지원할 예정
  - 영국 전역의 20개 지역에 4억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제공하는 새로운 Levelling Up Partnership을 시행할 계획
  - 성장을 장려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을 제공
    - 고품질 재생 프로젝트에 2억파운드 이상, 도로 보수·개선에 2억파운드 이상, 지역 자산단체 및 지역사회 조직에 1억파운드 이상, 공공 수영장 제공업체에 6천만파운드 이상을 지원

152)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EMI):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세금우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

153) working time declaration

#### 다. 국가채무 감축(Getting debt falling)

- 정부는 2022 가을 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에서 채무 비중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명시하였고, 예산책임청은 이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
  - (재정 목표) 예산책임현장에 채무, 재정수지, 복지지출 상한 목표를 명시<sup>154)</sup>
    - (채무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 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현재기준 2027-28회계연도)까지 감축(fiscal mandate)
    - (재정수지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전망 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에 3% 초과 금지(supplementary target)
    - (복지지출 상한)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이내로 관리<sup>155)</sup>
  -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sup>156)</sup>)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은 약간의 마진으로 충족될 것으로 분석되나 복지지출 상한은 미충족될 것으로 전망
    - (채무준칙) 2027-28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는 0.2%(65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되면서 충족될 것으로 평가
    - (재정수지준칙) 2027-28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1.3%(392억파운드)의 마진이 예상되면서 충족될 것으로 평가
      - 특히 동 준칙은 2025-26회계연도에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
    - (복지지출 상한) 2024-25회계연도의 복지지출 상한은 41억파운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충족될 것으로 평가
      - 복지지출 증가는 장애급여 수요 증가와 통합급여에서 보전 관련 청구가 증가한 영향 때문

154) 예산책임현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2011년 제정되어 정부의 재정목표 수정에 따라 6번 개정되었고, 가장 최신 버전은 2023년 2월 6일 의회 승인

155) 복지지출 상한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에서 재설정되었고, 이는 2022년 1월 10일 하원에서 승인. 이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재정 중립적인 분류 변경(fiscally neutral classification changes)”에 맞게 조정(<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852/>, 검색일자: 2023.3.27.)

156) 예산책임청(OBR)은 예산책임현장에 따라 정부가 현 정책하에서 재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 정부는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2024-25회계연도까지 상한 충족에 집중할 계획

〈표 V-6〉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

(단위: GDP 대비 %, 십억파운드)

구분	평가	GDP 대비 비율(%)		규모(십억파운드)	
		전망	마진	전망	마진
2027-28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 제외) 전년 대비 변화	충족	-0.2	0.2	-	6.5
2027-28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차입	충족	1.7	1.3	49.3	39.2
2024-25회계연도 복지지출 상한	미충족	-	-	150.6	-4.1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Table 5.1 발췌

〈표 V-7〉 복지지출 한도 및 성과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b>복지지출 한도</b>				135.4
이행경로	126.9	129.1	132.4	
마진(%)	0.5	1.0	1.5	2.0
마진	0.6	1.3	2.0	2.7
이행경로+마진	127.5	130.4	134.3	138.1
<b>성과</b>				
복지지출	123.1	129.5	141.2	150.6
조정(물가 조정 등)	3.3	3.7	-3.9	-8.4
조정 후 복지지출	126.5	133.2	137.3	142.2
<b>차이:</b>				
이행경로 및 한도 대비	-0.5	4.1	4.9	6.8
이행경로 및 한도+마진 대비	-1.1	2.8	2.9	4.1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3*, 2023.3, Table 5.2 발췌

-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지출하고 효율적인 절감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며 주요 공공서비스 및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에 집중할 계획

## VI. 스웨덴

□ FY2023: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출처

- From the Budget Bill for 2023: Budget statement, 2022.11.8
-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hela dokumentet, prop.2022/23:1, 202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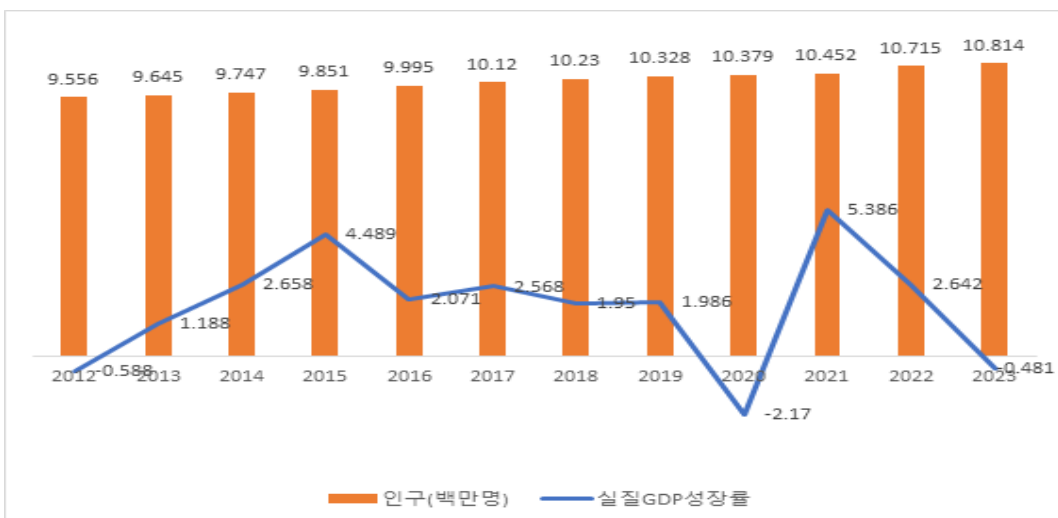
□ 환율: 1코로나 = 127.88원(2022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 규모: 2023년 추정치 경상 GDP 653억 9,621만달러(IMF)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21년 기준 86.6%(World Bank)

□ 인구: 2023년 추정치 약 10.814백만명(추정치, 2023년 기준, IMF)

□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3, 검색일자: 2023.4.25.

## [요 약]

##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스웨덴은 2023년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전망) 팬데믹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적인 폐지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55.6%로 감소할 전망이며, 2023년 지출한도 수준은 GDP의 25.8%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 예산 기조

- 경제 상황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스웨덴 정부는 예산에 약간의 긴축 편향을 제안
  - 어려운 시기에 스웨덴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 지원, 복지 강화, 안보 및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포함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생산을 늘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도 포함

## □ 주요 재정정책

- (정책목표) 재정정책 목표는 흑자 달성에 집중하고,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 감소 및 가계와 기업 지원을 늘리는 재정정책 추진
- (에너지 대책) 특히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운송 비용과 관련한 세금 및 기타 규제를 개혁할 계획
- (주요 투자정책) 전력 부족 및 에너지 위기 대응, 고용 안정 지원, 국방 및 치안 강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 우선 투자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

- 스웨덴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는 비교적 강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0.4%로 역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2분기는 팬데믹 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가계 소비 증가와 투자 실적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임
  - 2023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이 맞물려 역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주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및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이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물가상승률(CPIF)<sup>157)</sup>은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23년에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기간 장기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느리게 회복하여 타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실업자 중 약 절반이 1년 이상 실직 상태이며, 2년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의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함
    -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
- 가계 소비 위축과 유럽 에너지 위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외부 수요 감소가 스웨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
  -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성장은 2022년과 2023년에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필

157) 스웨덴은 CPI 대신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CPIF(Consumer Price Index with a Fixed Interest Rate) 지표를 인플레이션의 목표 변수로 사용하고 있음

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하반기 가계 소비 증가율 또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과 높아진 건설 비용 및 이자율로 향후 주택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2022년 상반기에 서비스 수출 증가로 강하게 성장했으나, 유럽의 낮은 수요가 2023년 수출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수입은 수출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소비 부진으로 2023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여 순수출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VI-1〉 주요 지표 전망치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GDP 성장률	2.6	-0.4	2.0	3.2
고용(15-74세)	3.0	0.2	0.7	0.8
실업률, 15-74세 노동력 비율	7.4	7.7	7.5	7.2
일반정부 순융자(% GDP)	0.6	0.2	0.4	1.4
일반정부 총부채(% GDP)	31.8	29.4	28.6	26.2
정책금리	0.75	2.68	2.72	2.50
소비자물가지수(CPIF)	7.9	5.2	2.0	2.0

주: 2022년 10월 20일까지 발표된 통계 기준

자료: 스웨덴 재무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2022.11.3

## 나. 재정 전망

- (2022년 현황) 2022년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2.6%로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세입) 총세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1~2020년 평균인 3.4%보다 높은 수치
  - (세출) 지출한도는 주로 팬데믹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실제 지출은 당초 통과된 지출한도보다 483억크로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수입) 스웨덴 정부는 2023년 총수입 예산안을 2,790억크로나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 2023년 조세수입은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2년보다 낮지만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
  -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 세수 감소로 인해 2023년의 조세수입 증가세는 2022년보다 약간 둔화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GDP 대비 세입 비율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인 4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2~2025년 동안 총세수는 2022년 봄 중기재정계획(spring fiscal policy bill)의 추정치보다 연간 280억~950억크로나 상향 조정

〈표 VI-2〉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총수입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세수입	1,235	1,300	1,313	1,369	1,449
정부사업수입	43	72	43	36	39
자산매각수입	0	5	5	5	5
용자회수	1	1	1	1	1
귀속소득	18	18	19	23	25
EU 보조금	15	16	32	25	16
조세시스템 관련 상계	-121	-127	-133	-139	-143
세입계정에 대변항목으로 분류된 지출	0	0	0	0	0
총수입	1,191	1,285	1,279	1,320	1,391

자료: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figure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central-government-budget-in-figures/>, 검색일자: 2022.12.6.

□ (재정지출) 2023년 지출한도, 국가채무 이자비용, 순융자, 현금조정분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1조 1,954억크로나로 편성

- 이는 2022년에 비해 155억크로나 증가한 금액으로 거시경제 발전, 특히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3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023년 지출한도 수준은 GDP의 25.8%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과 거의 동일하지만 2020~2022년에 비해서는 감소함
  -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지출은 2023년 3,599억크로나로, 2022년에 비해 117억크로나 증가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840억크로나, 총부채는 기준치인 GDP 대비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공공재정이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VI-3〉 2023년 스웨덴 예산안(2023 budget bill) - 재정수지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수입	1,191	1,285	1,279	1,320	1,391
지출한도 (국가채무 이자비용 제외)	1,216	1,231	1,234	1,277	1,281
국가채무 이자비용	-1	23	13	10	9
순융자	-97	-119	-52	7	9
현금조정	-4	0	0	0	0
중앙정부 재정수지	78	151	84	26	92

자료: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figure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central-government-budget-in-figures/>, 검색일자: 2022.12.6.

## 2 예산 기초

- 2023년 스웨덴 예산안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가계와 기업 지원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운송비용과 관련한 세금 및 기타 규제를 개혁할 계획
  - 공급 충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원자력 발전 감소와 스웨덴 북부와 남부 간 송전 용량 차이 등 국내 문제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
  - 스웨덴 정부는 전력 가격이 낮은 스웨덴 북부를 제외한 남부와 중부의 가정에 전기 요금에 근거한 전력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예정
    - 스웨덴 남부가 유럽 가격 수준에 더 민감<sup>158)</sup>해졌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수준과 같은 세금 및 기타 국내 규제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 비해 스웨덴의 전송비용이 상승
  - 재원은 병목 수입(flaskhalsintäkter)<sup>159)</sup>에서 확보할 예정이며 전력보조금 외에도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할 예정
    -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피해 본 가계와 기업 대상 보조금 확대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지원을 강화
    -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충전소 구축
- 가계·기업·복지 지원
  - 높은 물가로 인해 무엇보다 돌봄, 학교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자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와 지역(regions)에 보조금 증액 편성

158) 스웨덴은 전력의 대부분을 수소와 원자력, 풍력,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남부의 경우 수력발전에 적합하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및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된 스웨덴 인구 구조의 특성상 북부 수력 발전소와 남부 수요 센터 사이에 거리가 멀어 송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스웨덴 남부 지역은 해저 전원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전기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치솟은 유럽 전기요금이 스웨덴 남부로 급속히 확산하여 남부와 북부 전기요금은 2배 가까이 벌어짐

159) 송전망 전송 용량 부족으로 국내 전력에 가격 차이가 생겼을 때 전력 사업자에 나오는 수입

## □ 국방 및 치안 강화

- NATO의 회원국이 되어 국방비 지출 의무(GDP의 2%) 이행
-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우수한 무기 시스템 등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

##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여건 강화

-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sup>160</sup>를 재정립
  -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자와 중간 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성인 교육 강화
  - 65세 이상 고용세액공제 확대
- 광대역망 구축, 도로정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강화
- 태양전지 설치 등 녹색 기술 설치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

## 3 예산안 주요 내용

### □ 2023년 예산안은 의회법(Riksdagsordning) 제9장 제5조 추가조항에 따라 2022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됨<sup>161)162)</sup>

- 내년도 재정정책 목표를 흑자 달성에 집중하기로 하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면서 동시에 경기침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
  - 2023년 중앙정부 총 세출예산안은 1조 1,950억크로나, 총 세입예산안은 1조 2,790억크로나로 편성, 840억크로나의 재정 흑자를 예상

160) 실업자에게 수당 형태의 지원 대신 가능한 한 일자리를 제공을 우선하는 스웨덴의 사회 정치 원칙

161)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가 끝나고 3주 후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예산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할 때 새 정부가 내각에 취임한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늦어도 11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9월 20일 전에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음(의회법 추가조항 제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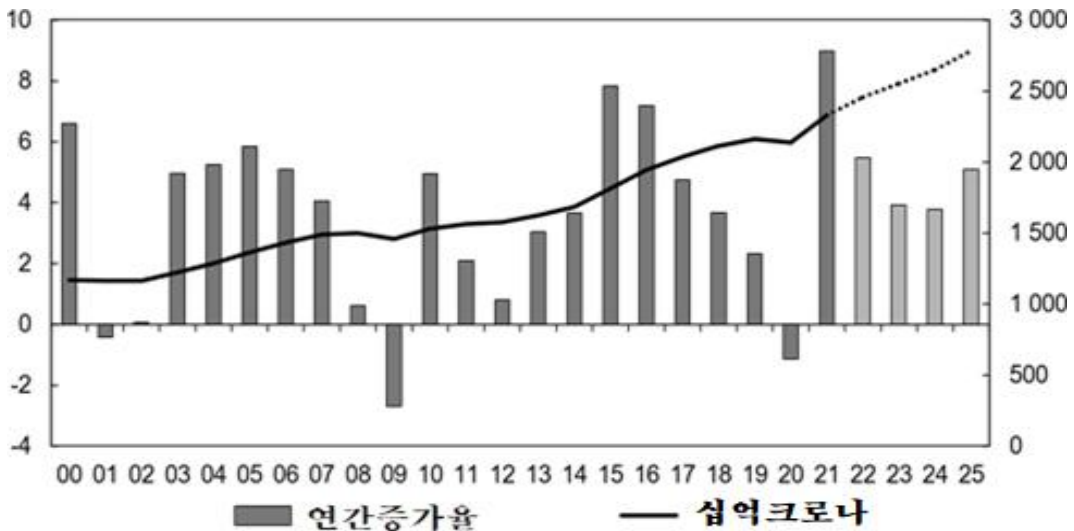
162) 스웨덴 의회법, "Riksdagsordning (2014:801),"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riksdagsordning-2014801\\_sfs-2014-801#K9](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riksdagsordning-2014801_sfs-2014-801#K9), 검색일자: 2022.12.6.

- 2023년에는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가 만료되고 2023년 예산안에 제안 및 발표된 개혁안에 의해 2022~2025년에는 여러 분야의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가. 세입

- 2023년 세입은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보다 현저히 낮지만 경상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
  - 2023년 조세수입은 2022년과 비교해 126억크로나 증가한 1조 3,127억크로나로 전망
    - 2023년에는 청년사회보장부담금 인하, 근로소득에 대한 일시적 세금 감면 등 한시적 지원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주요 원인임
    - GDP 대비 조세수입은 2023년 41.4%로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

[그림 VI-1] 총세입 증가율 및 규모



주: 2001~2021 결산, 2022~2025 추정치  
 원자료: 스웨덴 국세청, 스웨덴 금융감독청 및 자체 계산  
 자료: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hela dokumentet, prop.2022/23:1, p.66, Diagram 5.1 Totala skatteintäkter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직·간접 세수<sup>163)</sup>는 2023년 총세입의 약 60%, GDP의 약 24%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지방 소득세) GDP 대비 지방소득세는 2020년 15.2%에서 2023년 14.3%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가장 중요한 과세 기반인 임금총액이 2020년 역성장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모두 정상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것에 기인
  - (주 소득세) 주 소득세 수입은 2022년에서 2025년 동안 GDP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세) 2023년 사회보장세 수입은 약 5.9% 증가한 7,120억크로나(GDP의 1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23세 고용주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
- (법인세) 법인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세를 보이겠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 2020년의 감소는 팬데믹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매출 지원, 행사 지원 및 세금 납부 유예와 같은 기업 종합대책 때문이며, 2023년은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재산세) 재산세 및 재산 수수료 수입은 2022년과 2023년에 연간 380억크로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25년에는 400억크로나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2021년 총세수의 28%를 차지하는 소비 및 중간재에 대한 세금 수입은 예측 기간 GDP의 약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2년에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과세 기반인 가계 소비의 가격 상승률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163)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직접세와 사회보장세로 나뉘며, 근로에 대한 직접세는 주로 지방세와 주 소득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세는 주로 고용주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으로 구성됨

- (소비세) 소비세 수입은 2022년에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에너지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된 결과

- 2023년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소비세가 약 3% 증가하고, 2024년에는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주로 징수 손실, 가계 및 기업 세부담의 경정 및 이연, 공공서비스 수수료 및 기금으로 이전된 소득으로 구성된 기타 세금의 2023년 수입은 8.9% 증가한 134억 크로나로 추정

□ 조세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2022년 봄 중기재정계획 대비 110억크로나 상향 조정됨

〈표 VI-4〉 GDP 대비 세입 비중

(단위:GDP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세입	42.4	42.7	41.4	41.4	41.5	41.5
근로소득세	24.8	24.4	23.4	23.5	23.4	23.5
자본소득세	5.4	6.4	5.7	5.6	5.7	5.6
소비세	12.1	12.1	12	12.1	12.2	12.1
기타	0.1	-0.1	0.2	0.2	0.2	0.2

주: 2000~2021 결산, 2022~2025 추정치

원자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금융감독청 및 자체 계산

자료: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hela dokumentet, prop.2022/23:1, p.69, Tabell 5.2

## 나. 세출

□ 2023년 27개 영역에 대한 지출 예산<sup>164)</sup>은 2022년보다 490억크로나 증가한 1조 2,519억크로나로 편성

- 2023년 예산안에 제안된 개혁으로 인해 250억크로나, 거시 경제 발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160억크로나, 거래량 변화로 인해 80억크로나 증액 편성

164) 국가의 예산은 27개 지출 영역으로 나뉘며, 지출한도는 각 지출 영역에 포함된 보조금에 할당된 자금의 합계로 구성되며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자금으로 구성, 세출 잔액 감소 항목은 할당된 자금과 실제 사용된 자금 간의 차액, 상한선 비용, 즉 지출 상한선에 포함되는 비용은 지출 영역 26 국채 이자를 제외한 지출 영역 1~25 및 27 내의 비용과 노령연금 시스템의 비용으로 구성

## □ 주요 지출 영역별 증감 내용

- (사법) 사법 분야의 지출은 형법 개혁과 사법 체계의 강화로 인해 스웨덴의 법원, 검찰, 보안 경찰, 교도소 등에 대한 자금이 증가하여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국제협력)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장비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1% 원조 목표를 철회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에서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
- (보건·의료·복지서비스) 팬데믹으로 인한 의약품 급여 비용, 코로나19 백신 등 일시적인 조치의 축소 및 중단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 2022년과 2023년 지출 감소는 주로 고액 상병수당 비용 보상, 병가 공제 보상, 위험군 보상 등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임시 조치가 2022년 3월 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노인연금) 연금 인상과 연금 수급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 강화, 소득연금 보조금 도입으로 증가
- (주택건설 공급 및 소비자정책) 2022년에 증가한 후 2023~2025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증가분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과 임대주택 및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지원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잔여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
- (환경 및 자연보호) 기후 보너스<sup>165)</sup>, 기후 투자, 오염지역 정화 및 복원, 해양 및 수질 환경 대책, 자연보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지원 투자에 대한 할당 증가로 인해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2022년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의 일몰로 인해 감소
- (산업 및 무역) 개인 및 무역업체에 대한 단기 근무 지원, 이직 지원 등 팬데믹 지원 조치 범위 축소 또는 종료로 인해 2022년과 2023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165) Bonus Malus System: 신차 구매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3년간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시스템

- (지방정부 보조금지출) 2023년에는 일반 국고보조금이 상시로 더욱 강화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VI-5〉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분야별 지출 한도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거버넌스	16	18	18	18	18
2. 경제 및 금융행정	17	17	19	21	22
3. 국세 및 관세, 세무행정	13	13	13	13	13
4. 사법	57	62	68	72	77
5. 국제협력	2	3	2	2	2
6. 국방 및 국가비상사태 대비	71	81	94	114	123
7. 국제개발협력	47	47	47	50	50
8. 이민정책	8	14	16	14	10
9. 보건·의료·복지서비스	138	123	110	104	101
10.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	113	114	106	113	114
11. 노인연금	38	46	55	61	62
12. 가족 및 자녀양육	101	102	105	108	111
13. 양성평등 및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6	6	6	5	5
14. 노동시장 및 근로	92	81	90	91	91
15. 장학지원	27	26	28	31	35
16. 교육 및 대학연구	91	92	95	97	97
17. 문화·언론·종교·여가활동	22	20	17	17	17
18. 주택건설 공급 및 소비자정책	5	7	6	6	3
19. 지역개발	3	4	5	4	4
20. 환경 및 자연보호	17	22	20	15	10
21. 에너지	3	13	5	5	5
22. 교통 및 통신	72	77	79	83	90
23. 농림·축산·식품	20	23	19	23	21
24. 산업 및 무역	30	14	11	8	7
25. 지방정부 보조금	153	157	158	162	158
26. 국가채무 이자비용	-1	23	13	10	9
27. EU 분담금	52	47	46	46	47
분야별 지출한도 합	1,215	1,253	1,252	1,293	1,300

자료: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figure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central-government-budget-in-figures/>, 검색일자: 2022.12.6.

## 4 주요 재정정책

- 스웨덴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정 및 기업 대상 전기요금 지원책을 시행하고, 연료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사무 절차 완화, 사회복지 개혁을 통한 실업자의 취업 촉진,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새 정부는 임기 동안 1,200억크로나에 달하는 재량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3년 예산안의 개정 조치에 의하면 개정에 따른 2023년 한해 총비용은 400억크로나로 GDP의 약 0.6%에 해당할 것으로 계산됨
  - 유류세 인하와 마일리지 보상 확대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일시적 인상과 함께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

〈표 VI-6〉 2023년 예산안 개정사항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3	2024	2025
<b>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더 강한 경제</b>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	6.73	6.86	6.86
주택수당 추가지원 확대	0.52		
6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0.77	0.77	0.77
성인 직업 교육(yrkesvux) 강화 및 직장 경험 알선 확대	0.45		
현재수준의 실업보험 유지	5.82	6.35	6.64
더 높은 통근 공제(A higher commuting deduction)	1.81	1.81	1.81
ESS <sup>166)</sup> 완공을 위한 자금 증액	0.36	0.57	0.53
R&D 공제액 증가	0.1	0.2	0.2
<b>보안 및 공정성 강화</b>			
스웨덴 경찰을 위한 자금 지원 증가	0.9	1.21	1.17
사법시스템 강화	0.31	0.46	0.66
스웨덴 보안 서비스에 대한 기금 증액	0.16	0.3	0.36
예방 이니셔티브	0.91	1.02	0.59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 개선	0.06	0.12	0.12

〈표 VI-6〉의 계속

(단위: 십억코로나)

구분	2023	2024	2025
범죄 감시 및 예방적 강제조치 확대		0.27	0.27
스웨덴 교도소 수용 인원 증원 및 보호관찰 서비스			1.16
가석방 규정 강화			1.2
<b>신뢰할 수 있는 복지제도</b>			
교과서 개정	0.69	0.56	0.56
특수 교사 특수 교육 및 특수학급에 대한 접근성 향상	0.6	0.9	1
행동관리 학교	0.05	0.1	0.1
사회서비스팀	0.08	0.25	0.25
진료소 확대 및 보건관리 강화	2	0.5	2
산부인과 진료	0.2	1.5	1.5
치료 연기로 인한 질병수당 면제 기간 연장	0.21		
노인 건강 및 외로움 퇴치 지원	0.3	0.3	0.3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활동 카드(Fritidskort)	0.05	0.73	0.79
지자체 및 지역 보조금 증가	6.00	6.00	6.00
<b>강력한 국방 및 외교정책</b>			
국방 강화	4.26	8.77	9.09
스웨덴 해안 경비대 강화	0.03	0.27	0.25
민방위	0.91	1.28	1.39
비용 효율적 지원 정책	-7.29	-9.51	-12.72
<b>새 에너지 및 기후 정책</b>			
신규 원자력 발전소 준비	0.08	0.15	0.15
폐기물 소각세 폐지	0.41	0.45	0.4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내 열병합 발전소 및 난방플랜트 탄소세 폐지	0.1	0.1	0.1
태양열전지에 대한 보조금 비율 인상	0.28	0.28	0.28
단독주택 에너지 효율성 지원	0.38	0.4	0.4
데이터센터 세금 감면 폐지	-0.14	-0.28	-0.28
국제기후 투자	0.06	0.1	0.1

〈표 VI-6〉의 계속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3	2024	2025
산업 도약을 위한 투자	0.6	0.6	0.6
충전 인프라 및 직장 충전소 확장	0.54	1.61	1.12
기후 보너스 폐지	2.99	-2.97	-2.97
수생환경개선	0.25	0.25	0.25
습지복원	0.2	0.2	0.2
오염복구	0.34	0.34	0.34
<b>스웨덴 전역 전국 생활권</b>			
광대역 확장	0.6	0.6	0.6
도로유지보수 증가	1		
농업, 임업, 양식업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하	0.38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0.3	0.3	0.3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	1		
<b>지속가능한 이민 및 통합 정책</b>			
난민 감소	-0.39	-0.94	-1.28
스웨덴 이민청 및 이민 법원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0.57	0.35	0.14
<b>정부 지출 관리 개선</b>			
새 인구조사를 통한 인구 등록 개선	0.08	0.17	0.17
기타	3.82	6.58	4.5
<b>일반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b>	<b>40.43</b>	<b>39.88</b>	<b>38.03</b>

자료: from the budget bill for 2023 budget statement, pp.4~5, Table 1.1 Table of reforms

## 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에너지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에서 탄소 배출 제로 100%로 변경하고, 원자력 발전의 개발 및 확대를 추진
  - 에너지 위기 대응
    - 최근 전기요금 급등으로 피해 본 가계와 기업 대상 보조금 확대
    - 휘발유, 경유에 대한 일시적 에너지세 감면, 농업용 경유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 연장
  - 에너지 및 기후
    -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충전소 구축
    - 태양전지 투자 확대
    - 대규모 바이오 탄소 포집 저장, 탄소 배출량 감소 및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습지 복원
    - 해양환경 개선 기금 마련
    -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 이외의 원자로 건설 금지 및 운전 중인 원자로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 나. 국방 및 치안 강화

- NATO에 가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2023년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EU 전체의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공동 지원 및 EU의 경쟁력 강화
  - 국방 강화
    - NATO 가입 추진에 따라 군사 방어력 강화 및 2026년까지 NATO가 설정한 국방비 지출목표(GDP의 2%)를 따르기 위해 국방비 증액
  - 치안 강화
    - EU 평균에 상응하는 경찰 인력 규모 확충 및 수감, 보호 감찰 시설 추가 확보를

- 위해 경찰청 증원 및 스웨덴 보안당국 예산 증액
- 범죄 예방 목적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 및 여성 보호 기관 지원 확대
- 소외계층 자녀의 안전한 야외 활동 공간 확대
- 관련 형법 개정 및 사법 시스템 강화

#### 다. 가계·기업·복지제도 지원 방안

- 높은 물가로 인해 특히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자체 지원이 축소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릴 예정
  - 의료·복지 강화
    - 진료 대기시간 단축, 요양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산부인과 등 여성·노인 건강 진료 지원 범위 확대
    - 아동 신체활동 강화 목적의 레저 카드 제도(Fritidskort) 도입<sup>167)</sup>
  - 저소득층 지원
    - 2023년 6월 30일까지 팬데믹 기간 중 도입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수당 지급을 연장하고 팬데믹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실업보험 혜택 유지
  - 고용 안정 지원
    -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omställningsstudiestödet)<sup>168)</sup> 등 지자체 보조금 증액
    -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세 공제 강화
  - 교육 인프라 개선
    - 전문 교사 인원 확충, 방과 후 수업 강화, 현대적 방식의 교재 도입 등

167) 6~18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여가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카드로 30일 또는 90일 동안 오후, 공휴일, 주말에 사용 가능. 1인당 최대 1,000크로나 지급

168) 27세에서 62세 사이의 장기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 혹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환 학습 지원



정책분석 23-01

## 주요국 예산안 2023 (1)

---

발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미래기획  
I S B N 979-11-6655-269-4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주요국 예산안 2023

[www.kipf.re.kr](http://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9 791166 552694  
ISBN 979-11-6655-269-4